

제429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기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4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5.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5.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
4.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2
1.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9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9
3.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0
4.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13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관련 안건 처리와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관련 안건은 간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참고로 해당 증인은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10시03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4항 대규모 해킹사고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및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은 소액결제 피해와 수백만 명의 카드정보 유출 등 그 피해가 국민생활 전반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통신과 금융은 국민의 일상과 산업 경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정보가 유출되었고 미흡한 사후 대처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보안관리체계와 정부의 감독 대응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감독당국이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다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향후 디지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과방위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의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십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십니다.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십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이십니다.

옆으로 잠깐 비켜 주실래요. 기자님인가? 시야를 가리고 계세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이십니다.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이십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십니다.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이십니다.

(인사)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셨나요?

내려가서 좀 모시고 올라오시지요.

오늘 청문회를 위해 7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의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한 내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고발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맞지요?

한편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증인들께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시야를 가리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김영섭 KT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섭 KT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섭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증인 김영섭

증인 서창석

증인 황태선

증인 윤종하

증인 조좌진

증인 최용혁

○위원장 최민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께서 취재하시는 것은 기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오늘은 오후 1시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2분 드리세요.

○김우영 위원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매뉴얼을 오전 시간까지 열람 혹은 제출토록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48조의4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입각해서 KT도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 구조인 그 매뉴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요청을 해도 회사 내부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수습 과정에서 KT의 은폐 의혹이라든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관련 매뉴얼이 꼭 필요하니까 오전 중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해킹 대응 매뉴얼 말씀이십니까?

○김우영 위원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개인정보 유출 매뉴얼이요?

○김우영 위원 유출 대응 매뉴얼.

○위원장 최민희 대응 매뉴얼.

KT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전반적인 해킹 대응 매뉴얼은 가지고 계시지요?

○증인 김영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당황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킹 대응 매뉴얼은……

실무자 누구 나와 계십니까?

KT가 해킹 대응 매뉴얼 가지고 계시지요?

○증인 황태선 예,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그건 이미 자료 요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 드리시고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까?

○증인 황태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안에……

○위원장 최민희 안에?

○증인 황태선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위원님, 해킹 대응 매뉴얼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우영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해킹 대응 매뉴얼을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해킹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면 저희 매우 당황되지요.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저도 자료 요구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KT의 조직도하고 임원들의 프로필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훈기 위원 지금 부문장, 본부장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부문장이 위인지 본부장들이 위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조직도하고 임원들의 프로필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하시지요. KT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외이사까지 그리고 임원 범위 등에 대하여는 KT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이거 못 주실 이유 없잖아요?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섭 예.

○위원장 최민희 범위를 이훈기 의원실과 그리고 KT 실무자와 논의하셔서 정할게요. 그런데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는 사외이사까지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것도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에 SKT 해킹 사고 이후에 청문회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통신사 전수조사 얘기도 했었고 우리 과방위 차원의 TF 논의도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7월 4일 날 민관합동조사 결과 도출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해킹 침해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질의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진짜 허무함마저 듭니다.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KT의 민낯을 확인했어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시

는 일이 터졌는데 이런 사고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일밖에 못하나요? 저는 이걸 전 국민을 기만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저는 김영섭 대표를 비롯해서 이 사태에 관련된 임원진들은 모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황태선 CISO입니까, 보안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서버폐기 관련해서 황당무계한 말 바꾸기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T가 4개월 전에, SKT 사고 이후에 CEO 지시로 외부 전문 보안업체에 서버 전수조사 맡겼습니까?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때 책임자가 누구니까?

○증인 황태선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서버들에 대한 로그를 백업해 갔습니까?

○증인 황태선 대상은 KT 전사 서버 3만 3000대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백업 로그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어요?

○증인 황태선 분석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9월 15일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9월 15일에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와 가지고 9월 3일 날 프랙(Phrack) 보고서의 해킹 정황 관련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약 2주 동안에 백업이 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황태선 예, 제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9월 15일 이전에 해당 직원들, 다른 정보보안실 직원들과 이 관련된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증인 황태선 이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민수 위원 뭘 기억합니까, 제가 확인했는데?

오후에 물어볼 때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증인 황태선 예.

○한민수 위원 그러면 9월 15일 날 백업 로그 존재 파악한 이후에 18일 임원회의에서 이걸 논의했습니까?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 3일간 뭐 했습니까? 이걸 중요한 사실이에요.

○증인 황태선 9월 15일에 해당 업체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받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3일 동안은 보고받고 임원회의에 이 엄청난 일을 보고를 안 하고 있었어요?

○증인 황태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에 대해서 정

확히 내부 검증과 재확인 절차를 밟아 지시하였습니다.

○한민수 위원 KISA에는 어떻게 알렸습니까? KISA에 알렸다면서요?

○증인 황태선 9월 18일 저희 위기관리센터 미팅에서 이 사실을 공유드렸고……

○한민수 위원 그러면 KISA 담당팀에서는 KT로부터 서버의 백업 존재 사실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KISA 원장님도 나와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KT는 합동조사단에다가 이 얘기를 알려 줬다고 합니다. 이게 KISA에게 알려 준 겁니까?

9월 19일 날 기억하시지요? 그때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KT 현장점검 나간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민수 위원 그러면 황태선 실장님은 9월 15일 날 인지했는데 현장점검에서 왜 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증인 황태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 가지고 미처……

○한민수 위원 경황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러니까 축소·은폐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새벽에 우리 의원실에 답변 나온 거, PPT 한번 보십시오.

‘원격상담서비스 서버에 의심 정황 1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뭐니까? 그리고 바로 보도가 나온 게 7월 9일 날 용역업체가 KT의 서버 침해 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지요?

○증인 황태선 제가 중간보고를 받은 시점은 7월 22일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7월 9일 날 용역업체가 한 거는 허위보도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 황태선 제가 알기로는 7월 9일에 원격상담서비스에 대한 흔적조사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젯밤 늦게 받은 ‘원격상담서비스 서버에 의심 정황 1종이 포함돼 있다’ 이걸 언제 인지한 겁니까?

○증인 황태선 기억하기로는 중간보고, 7월 22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7월 22일, 좋습니다. 7월 22일 날 받아 가지고, 이 1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고가 벌어지기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증인 황태선 해당 업체에서는, 사실은 의심 정황 1건이 미사용 계정에 대한 존재였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니까 이런 침해사고가 벌어지고 축소·은폐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본 것만 봐도 이게 해소가 됩니까, 의혹이?

현장점검 자리에서도 폐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섭 대표님, 9월 18일 임원회의 때 뭘 얘기를 나눴습니까?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증인 김영섭 제가 티오리(Theori) 최종결과 보고를 15일에 받았고 그래서……

○한민수 위원 18일 날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 내용이 뭐니까?

○증인 김영섭 18일 날 그 내용을 보고받고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확인하고……

○한민수 위원 뭘 확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증인 김영섭 이게 침해인가 아닌가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하고 등등 조치를 밟아 나갔습니다.

○한민수 위원 저는 이래서, 추가질문에서는 계속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국가기간통신망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도 못하고 벌어지고 난 후에 뒤에 원인도 파악 못 하고 그 이후의 대응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이번 2025년은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탈탈 털린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침이 심한 해가 있었나 싶은데요.

김영섭 KT 대표님 그리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소액결제 돈 몇만 원 이게 대수롭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롯데카드도 마찬가지지요. 개인 신상정보 다 털리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님, 롯데카드는 롯데 건가요? 롯데그룹 겁니까?

○증인 조좌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걸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하십니까? 롯데그룹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증인 조좌진 롯데그룹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있네요. 그렇지요?

○증인 조좌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김영섭 대표님, 이건 잘못했지요?

○증인 김영섭 예, 죄송합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두 분께 몇 마디씩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두 분들은 기업 아닙니까?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이것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섭 대표님부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증인 김영섭 예.

○이상휘 위원 사과하시지요.

○증인 김영섭 소액결제 관련 여러 가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저질러서 고객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그다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취 위원 조좌진 대표님도 사과하시지요.

○증인 조좌진 우선 소중한 고객분들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로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취 위원 당연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과하셔야 되고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한 점 빈틈없이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의 도리이고 도덕입니다.

(팸토셀을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시지요?

○증인 김영섭 예.

○이상취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팸토셀이지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취 위원 저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팸토셀 그래서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집집마다 다 있는 거더군요. 맞지요?

○증인 김영섭 예, 많은 가정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보급이 돼 있지요?

따지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KT 김영섭 대표님?

○증인 김영섭 팸토셀 문제가…… 이 문제의 시발은 시점이지만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그렇지요? 이거 보니까 지난 6월 26일 날에 팸토셀 2대가 이상 감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예.

○이상취 위원 그러면 시발이 이 팸토셀의 문제인데,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관리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예.

○이상취 위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증인 김영섭 문제가 터진 이후에 팸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이런……

○이상취 위원 어떤 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증인 김영섭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접속이 중단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그걸 조치하도록 해서……

○이상취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거 폐기하거나 이럴 때는 이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섭 예, 회수의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이상취 위원 회수 안 되니까 이게 중고 인터넷 거래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불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KT 나와 계십니까? SKT는 이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참고인 이종현 SKT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SKT의 경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상휘 위원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이종현 저희는 일단 사용되지 않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펌토셀에 대해서는 형상 삭제를 통해서 망에 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KT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증인 김영섭 그동안에 그런 관리가 아주 부실했고 이 사고 이후에는 전부 다 망에 붙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KT하고 LG 쪽은 제가 보니까 외주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펌토셀 관리에 대해서?

○증인 김영섭 예, 설치 관리, 회수 관리 이런 것들을 자회사에 외주……

○이상휘 위원 그래서 전문기사가 와서 딱 해 주면 이게 별…… 원칙인데, 전문기사가 와서, 이게 안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SKT는 이게 자회사지요?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 부실이 이 사건을 초래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관리 부실 맞지요?

○증인 김영섭 예, 인정합니다.

○이상휘 위원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영섭 예.

○이상휘 위원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상휘 위원 펌토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2012년 연구용역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KISA에서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해당 자료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이상휘 위원 2012년 용역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012년에 국민대 교수를 통해서 용역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펌토셀 관련된 보안 위협이 여러 건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게 결국 13년 전에 경고를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KISA에 이야기 하니까 서류 연한, 보존기간이 끝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 내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자료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13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미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걸 후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이러한 것들이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다 지적이 됐던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종현 부사장님, 아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이라고 하셨지요? 그 일정 기간이 얼마예요?

○참고인 이종현 일단 일주일 동안 그 망에서 사용하지 않는지를 보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사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망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차단한다?

KT는 이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증인 김영섭 팸토셀의 유효 인증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10년 동안 관리 안 했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증인 김영섭 예,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김영섭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통신망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탈탈 다 털려서 이번에는 진짜 실제로 돈까지 털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최소한 대표직 연임 연연 않고 이 사태 책임진 이후에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영섭 지금 그런 말씀 드리기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우선은 이 사태 해결에 어쨌든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님, 한번 읽어 보시지요.

○증인 김영섭 ‘SKT 유심대란,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SKT 해킹 사태에서 KT가 붙여 놓은 건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랬던 KT가 자기들 해킹에는 허위, 조작, 은폐, 축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압박한 건지 무능한 건지 결국 다 밝혀질 내용을 거짓말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KT 자체가 해체되어야 될 수준입니다.

대표님,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위증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증인 김영섭 예.

○황정아 위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은 본인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답변 안 하시면 해킹 공범임을 인정한 것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부사장들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대표가 이 정도 질문도 답변

을 못 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변명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영섭 대표님, KT는 9월 1일 소액결제 사태를 경찰로부터 통지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예.

○황정아 위원 그런데 그럴 리가 없으면서 9월 5일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가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이상 정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KT 조사 결과 첫 피해자 언제 발생했습니까?

○증인 김영섭 첫 피해자는 8월 20일 발생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8월 5일입니다. 아니, 그것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8월 5일부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가 한 달을 뭉개는 동안 최소 362명, 764건의 피해가 터졌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사상누각의 거짓말을 쌓고 있습니까?

9월 9일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12일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마자 그다음 날 부랴부랴 우리 유출됐다 하면서 신고를 합니다. 게다가 여기 보이십니까? KT의 내부 자료에는 직접 9월 4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라고 내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비정상 패턴을 처음 발견한 건 9월 4일이예요. 그래 놓고 정작 KISA에 침해사실 신고 전 이상 징후 없었다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타사들과는 전혀 다른 행태인데 이래도 은폐가 아닙니까?

○증인 김영섭 제가 확인한 바로는 9월 그때까지는 이게 전부 다 어떤 침해가 아니고 스미싱의 현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정아 위원 참 답답합니다.

피해가 커지는 동안에 KT는 오히려 증거만 인멸하고 있었는데, 서버폐기 일자 보세요. 8월 1일, 8월 6일, 13일 다 피해가 발생한 때와 겹칩니다. 용역회사에서 처음으로 7월 9일 서버 침해 정황을 인지했다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왜 서버를 폐기합니까?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대표님은 사건이 더 커질까 봐 은폐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우리는 독과점이니깐 우리가 입만 다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김영섭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피해 현황은 또 어떻습니까? 축소·은폐의 전형으로 교과서에 남겨야 할 수준인데, 처음에 피해조사 결과가 몇 명이라고 발표했습니까?

○증인 김영섭 278명 피해 봤다고……

○황정아 위원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 수가 362명으로 꺾충 뛰어올랐습니다. 게다가 해킹 사태 8월 5일부터 시작된 것은 왜 또 그렇게 숨겼습니까? 저희 의원실이 요청할 때까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황정아 위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듣고요.

피해지역은 또 왜 그렇게 무서워서 철저하게 가리고 계셨습니까? KT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김영섭**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발표할 때도 3개 지역, 금천 그다음에 광명·부천 이쪽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약 85% 정도 돼 가지고 그 일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무능이네요, 무능. 마치 광명·금천·서울서남부권에서만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가 서초·동작·일산 등 아예 다른 곳들의 피해가 밝혀졌는데 이게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의 하나입니다, 범죄이거나 무능하거나. KT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을 해야지 숨기고 가리고 축소하고,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까. KT가 숨기고 있던 피해 현황이 혹시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십니다.

KT가 거짓말만 늘어 놓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료 한번 보시지요.

처음에 소액결제 전수조사 했다고 발뺌하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ARS만 한정하지 않았냐, SMS 인증은 빠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더니 그제서야 인증 방식별 구분이 어렵다, 이제야 ARS뿐 아니라 SMS 등 소액결제 전체 건의 대상 피해 확인한다? 이제사? 이제야 SMS 등의 소액결제 전체 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맞기는 한가? 맞기는 하세요?

○**증인 김영섭** 예, 지금 데이터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도무지 믿음이 안 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카카오톡도 털리고 핀토피아 등에 강제 회원가입까지 당하고 PASS 앱으로 결제당했습니다. 이런 거 왜 KT가 조사 안 하고 있습니까? 은폐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정아 위원** 말장난도 한두 번이어야 국민이 속는 척이라도 하겠습니까. 이걸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 피해 드러나면 위증으로 처벌받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십니까?

○**증인 김영섭** 일단 처음에 ARS 기반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그때부터 ARS 기반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어쨌든 빅데이터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SMS하고 PASS 인증 여부도 지금은 전부 다 한꺼번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정아 위원** 잘못은 KT가 저질렀습니다. 귀책사유가 KT에 있어요. 말장난으로 보상 운운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입니다.

4월 달에 SKT 해킹 사건으로 유심칩 구매 대란까지 벌어졌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복제폰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핸드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금융정보가…… 이런 혼란이 저는 더 커졌다고 보고.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SKT 해킹 사건 이후에 KT를 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SKT에서 이동을 했는데, KT로 넘어간 분이 56만, LG유플러스로 한 오십 몇만 이렇게 100만이 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T 입장에서는 아마 상황을 좀 즐긴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드는데……

또 하나 문제는, 보세요. 판단력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경찰이 KT에 특정 지역에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게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상황을 통보해 줬는데도 고객 보호조치를 한 게 9월 6일이에요. 5일 정도, 6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김영섭 사장의 말씀 들어 보면 스미싱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초기 판단이?

그런데 쪽 보면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작·관악·금천·광명 쪽 해서 80%가 집중돼 있었는데 경찰이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왜 이렇게 늦게 한 건지……

이상중 KISA 원장님, 소액결제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KT와 LG유플러스에 해킹 정황이 있다고 통보해 준 게 언제지요? 7월 19일 맞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지금 소액결제 관련된 거는 9월……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해킹 정황, KT와 LG유플러스에 해킹 정황이 있다고 통보한 게 7월 19일로 돼 있어요, KISA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맞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데 KT는 자체점검을 해서 해킹 정황이 없습니다라고 통보한 게 이틀 뒤 21일이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맞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데 두 달 지난 9월 19일에 보니까 서버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KT는 이런 걸 스미싱이라고 초기에 잘못 판단해 해킹이 있는지도 뒤늦게 찾아내는……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김 사장님?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그거는 내부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은 다 통보했고 KISA에서도 해킹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체점검을 해 보니까 해킹 정황이 없습니다 하다가 두 달 뒤에는 ‘털렸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전문성이 뭐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지가 가장 의문이에요.

또 하나, 7월 달에 KT 해킹해서 몇 명이 나갔다고 돼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정보, 가입자식별번호, 단말기고유번호, 휴대폰번호가 얼마 나갔어요? 2만 명 나간 걸로, 2만 명.

내가 차관한테 물어볼게요.

7월에 발생했다는 KT 해킹과 8월 이후에 벌어진 소액결제 연관성이 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연관성 그 자체를 지금 합동조사단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해킹을 한 그룹이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금융정보가 나갔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내 개인 계좌번호가 있을 테고 비밀번호가 있을 텐데 이걸 알아야 결제가 되잖아요. 모바일 결제는 그냥 되는 건가?

박 원장님, 금융정보원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저의 질문.

○참고인 박상원 제가 KT는 사실 잘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소액결제는 휴대폰 요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계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신성범 위원 전혀 상관없다?

○참고인 박상원 예.

○신성범 위원 또 하나, 그러면 다시 한번 가입자식별번호, 단말기고유번호, 휴대폰번호가 나가면 복제폰이 불가능하다,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이번에 KT에서 나간 그 임시 정보 외에 복제 유심이 가능하려면 사업자하고 개인을 인증하는 인증키가 동시에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심 복제를 위한 그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IMEI도, 단말기식별번호도 2만 명의 그런 것들이 나간 정황이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만……

○신성범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7월 달에 발생했다는 해킹 정황과 8월 달에 소액결제의 실제 지출 이 문제 사이의 연관성은 합동조사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한 가지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7월 19일 날 프랙 보고서에 의한 해킹 정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19일 날 사업자들한테 통보를 할 때 그 해당 서버 중의 1대가 8월 1일 날 폐기했다고 하는 서버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결제 사건하고 7월 19일 날 저희가 통보한 그 당시의 그 해킹 정황하고 상호 연관성과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검거된 중국 국적의 이분들이 다 조선족입니까? 수사 과정을 들으신 바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1명은 500만 원 받고 아파트 밀집지역을 돌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고 1명은 소액결제로 탈취한 상품권을 현금화했다.

이거는 수사를 어디서 해요? 경찰청에서 합니까, 경기남부청에서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는 경찰로부터 관련된 상황을 공유받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사는……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경찰 수사와 별도로 또 민관 조사가 진행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구체적인 범죄와 관련된 행위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피해의 원인, 원인 발생 경로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조좌진 대표님, 우리 과방위에 취재 중인 취재기자님 한 분이 저한테 꼭 여쭙봐 달라고 그러는데 롯데카드를 자기가 털렸다, 재발급을 요청했는데 일주일 넘었는데 왜 재발급 안 해 주냐고 묻던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왜 재발급이 늦어져요?

○증인 조좌진 재발급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한 100만 정도까지 밀려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하루에 24시간 풀 가동해서 재발급할 수 있는 그 캐파가 6만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해소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는 아마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요새 해킹 등 정보보안 문제가 온 나라를 지금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는 어떻게 보면 테러보다도 더한, 어떻게 보면 테러에 준하는 국가안보 사안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응하고 있는 관련 주체들은 너무나 허술하고 부실해 보입니다.

특히 KT 김영섭 사장님, 지금 대응하는 과정에서 쪽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누장·은폐·축소 시도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영섭** 축소·은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되지만 저희들은 이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인철 위원** 그게 축소·은폐입니다.

지금 ISMS 인증받으셨지요?

○**증인 김영섭**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ISMS 인증 언제 받으셨습니까?

○**증인 김영섭** 받은 일자는 정보보안실장에게……

○**조인철 위원** 언제, 몇 년도에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사장님입니까?

○**증인 김영섭** 죄송합니다.

○**조인철 위원** 이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게 사장님인가요?

KISA 원장님, 인증 언제 해 줬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다 몰라요?

정보실장님, 언제했습니까?

○**증인 황태선** 인증 심사는 매년 사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사후심사 하고 있고 3년마다 재갱신하게 돼 있지요?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언제 재갱신됐습니까?

○**증인 황태선** 제가 기억하기로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2년 전에 갱신했고 이번에 사후심사를 받았습니까?

○**증인 황태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달……

○**조인철 위원** 아니, 도대체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차관님, ISMS 인증제도가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점검을 하는 제도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언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야까 이상휘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카이스트인가요? 제가 보도 보니까 펌토셀의 보안 취약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KT에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JTBC였던 것 같은데?

○증인 김영섭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보지 못하셨어요,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

○증인 김영섭 예, 보지 못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KISA 원장님, 보셨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펌토셀 말입니까?

○조인철 위원 그 보도 보셨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펌토셀을 13년 전에 KISA에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그 내용을……

○조인철 위원 보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우리 인증제도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계속 재심사하고 재갱신하고 매년마다 서면심사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 당시 13년 전에 한 거는 최근에 망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참고가 됐겠지만 그 당시의 기준하고 현재 기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10년 동안 반영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ISMS 인증에.

차관님,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12년도 연구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인증 항목과 인증 항목별 심사가 적정한지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여태까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한심하고요.

롯데카드 대표님.

○증인 조좌진 예.

○조인철 위원 언제 인증받으셨지요, ISMS-P라고 하는?

○증인 조좌진 7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언제 카드 털렸습니까?

○증인 조좌진 최초로 파일 유출된 시기는 8월 14일입니다.

○조인철 위원 인증받을 당시에 몇 개 항목 적합판정 받았습니까?

○증인 조좌진 그 항목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조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증을 ISMS-P까지 받으려면 101개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판정을 받은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털렸다는 이야기는 둘 중의 하나겠지요. 회사에서 판정받은 대로 안 했거나 두 번째는 그 체크리스트가 전혀 쓸

모가 없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증인 조좌진 인증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형태의 인증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모든 항목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일종의 샘플링을 통해서.....

○조인철 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회사의 ISMS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건가요?

○증인 조좌진 인증과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저희들 내부의 정보보호 관리실태가 부실했다라는 것이.....

○조인철 위원 인증제도상에 문제는 없는데 그걸 운영하는 회사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증인 조좌진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박정훈입니다.

이번 사태를 죽 보면서 느낀 게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인정하세요?

○증인 김영섭 예.

○박정훈 위원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한심하다는 말이?

○증인 김영섭 아닙니다.

○박정훈 위원 한심하지요. 내가 사장이라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조직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이 뒤집힌 게 한두 개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어요, 경고 사인도 다 있었고. 다 무시했어요. 이게 한국통신의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민영화된 KT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기부도 마찬가지예요. 과기부도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지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팸토셀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상희 위원이 가져온 이 팸토셀이 현재 문제의 근본이지요, 사장님?

○증인 김영섭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이거를 해킹을 해서 전파를 인터셉트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증정보를 가로채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이지요?

○증인 김영섭 여기서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얻었는지 확실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법 팸토셀 이것을 통해서 기기에 연결된 겁니다.

○박정훈 위원 차관님, 지금 이 팸토셀을 해킹을 한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서 파는 가짜를 가져와서 설치를 해서 인터셉트를 한 겁니까? 파악이 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정상 인증을 받거나 정상 접속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불법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이 된

겁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가짜를 사온 거지요? 가짜를 사서 설치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존에 쓰던 고객이 폐기했던 거나 이런……

○박정훈 위원 지금 중국 다크웹에서 팔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박정훈 위원 어떤 조치하셨어요? 중단시켰어요, 못 팔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조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게 지금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이게 기사에,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아직도 파악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일단 불법기지국은 더 이상 통신사망에 붙지 못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김영섭 대표님, 아까 13년 전에 이미 용역을 통해서 펌토셀이 위험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어요?

○증인 김영섭 13년 전부터 펌토셀 설치 시작했다는 것은 받았지만 그때 13년 전에는 제가 잘……

○박정훈 위원 김승주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나와 보시지요.

이 연구를 진행하셨지요, 펌토셀이 위험하다는 것을?

○참고인 김승주 예전에 한때 했던 적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당시에 KT에 이걸 알리셨지요?

○참고인 김승주 예, 알렸습니다.

○박정훈 위원 2015년 7월 20일 날 KT하고 미팅한 것 맞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그때쯤 미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뭐라고 했나요, KT에?

○참고인 김승주 저희가 취약점을 알려 드렸고……

○박정훈 위원 KT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그 당시는 일단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고……

○박정훈 위원 지금 김영섭 대표님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질의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회사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통신회사는 보안이 생명이에요. 보안 뚫리면 끝입니다, 신뢰도 떨어지고.

이미 저렇게 연구 결과, 이것 나랏돈 들여서 연구한 거지요? 그때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었지요?

○참고인 김승주 지금 화면에 띄운 자료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논문은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게 맞고요 오른쪽은 아마 국민대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한 것이 있고요.

○박정훈 위원 김영섭 대표님,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증인 김영섭 예,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면 이 펌토셀을 지금 다른 데 SKT나 LG유플러스는 장기간 안 쓰

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 대상이 안 된 거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영섭 예.

○박정훈 위원 그런데 왜 KT는 이걸 방치한 거예요?

○증인 김영섭 하여튼 관리가 부실합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한심하잖아요. 뭐하러 있는 조직입니까, 조직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국가기간통신망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그게 민영화가 돼서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는 회사인데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경고까지 무시하는 시스템이라면 조직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나랏돈 들여서 연구까지 하고 찾아가서 위험하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만났는지 파악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증인 김영섭 조사 결과라든지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대책……

○박정훈 위원 경고를 무시한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징계할 부분들 있으면 징계하시고 고칠 것 고쳐야겠지요?

○증인 김영섭 예,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차관님, 개인정보가 나간 게 5561명입니까, 아니면 2만 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KT가 발표한 숫자는 5561명에 해당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2만여 명의 불법기지국 아이디어에 노출된……

○박정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증키 없으면 복제폰 못 만든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닙니다. 지금 KT에서 확인한 나간 정보로 보면 임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IMEI 값이 나갔고……

○박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인증키까지 나가야 되는데 인증키는 본사를 해킹해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안 나갔으니까 복제폰이 안 만들어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복제폰을 만들기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유출이 안 됐다는 말씀……

○박정훈 위원 그러면 KT가 해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됐습니다.

○박정훈 위원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박정훈 위원 그러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복제폰 만들어질 가능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면밀히 다 보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아직까지 이것 파악 안 하셨어요? 인증키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일단 인증키는 안 나간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박정훈 위원 KT 신고가 맞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초기 신고하고 다 달라졌잖아요.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초기 신고했던 얘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과기부가 지금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고발조치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언론에 보니까. 실제 고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특히 서버폐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 지연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만약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이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 다수가 이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해소시켜 줄 책임이 과기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정말 이 사태를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립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KT뿐만 아니라 또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이버 안보체계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커와 보안, 정보보안과 해커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요. 지금 창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의 방패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형국이다 이렇게 느끼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AI 3대 강국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국가적인 목표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KT부터 묻겠습니다.

김영섭 대표님,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경제 핵심 인프라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허술한 보안체계 그리고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어떤 고의와 의도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허위보고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 매우 실망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섭 해킹 같은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전체적인 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러니까요. 대표님 뭐 하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SKT·LG유플러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문제되는 펌토셀 이게 코어망에 접속하기 전에 펌토셀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KT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이어서 한 번 접속하고 나면 그 뒤에는 위치정보나 소프트웨어 확인절차 없이 계속 망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시스템인데 맞나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웹토셀 관리 기능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섭 관리 상태가 정말로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웹토셀 몇 개 설치되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KT에서?

○증인 김영섭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8만 개 정도……

○이주희 위원 거의 20만 개에 육박하는 웹토셀을 두고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는 체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까?

○증인 김영섭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희 위원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보니까 웹토셀과 웹토셀 관리서버가 연동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된 웹토셀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처럼 불법 웹토셀, 폐기된 웹토셀 무한대로 계속 연동 가능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섭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사실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대표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KT 관계자들 다 아시다시피 KT가 원래 정부 부처로 출발했습니다. 정부 부처인 체신부 조직으로 시작해서 공기업인 한국 전기통신공사, 한국통신으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건재하다가 2002년 정부 지분을 뉴욕 증시에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길로 들어섰지요. 지금 이 사태 초래된 것 민영화 때문 아닙니까?

어쨌거나 현재 KT 만든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께서 유선전화 한 대 개통할 때마다 25만 원씩 꼬박꼬박 보증금 만들어 줘서 그 재원을 마련해 주셨고 그 재원을 기반으로 현재 매출 26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영섭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렇게 국민이 키워 준 국민 기업 KT가 어떻게 이런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 수준을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었을지, 이것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증인 김영섭 죄송합니다.

○이주희 위원 답하십시오.

○증인 김영섭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문제해결이 끝나는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서버폐기 과정 보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상세히 보면 증거인멸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 보시면 일단 7월 18일 KISA가 이메일을 통해서 최초로 해킹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KISA가 KT와 LG유플러스에 침해사고 사실 확인요청, 신고안내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KT, 지금 세 번째 칸인데요,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통보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영섭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거 다 공식 문서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8월 8일 날짜를 보시면 KISA에 침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월 21일은 징후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중간보고의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8월 8일에 최종적으로 침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표 보면 아시겠지만 8월 1일, 8월 6일 최종적으로 침해사실이 확인됐다는 확정 보고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총 8대 중에 6대가 폐기가 일어납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확인이 안 됐는데 폐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이 폐기와 관련돼 가지고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했는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주희 위원 이 정보 폐기, 서버폐기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 누구누구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섭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버폐기가 1년에 한 4000~5000대 된다고 하고 한 3000~4000대가 또 증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서버폐기는 그 규모나 또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팀장 수준에서 전결하고 폐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주희 위원 팀장 수준에서 전결, 폐기한다는 것 확실합니까?

○증인 김영섭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것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김영섭 대표는 언론보도도 안 보시고 나왔습니까? 이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몇 개인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KT와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는 단순한 소액결제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위기입니다. KT는 해킹 사실을 조기에 알고도 사건을 축소하고 지연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의적 은폐이고 또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입니다. SK에서 한 번 당하고 KT로 옮겨더니 더 크게 당했다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새 집에서 더 나쁜 강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KT는 계속해서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일 KT 관계자를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조사 내용과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8일에 그 전날 소액결제 발생 경로가 불법기지국임을 이미 KT는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 날인 9일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날 이미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입니다.

김영섭 대표님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영섭 제 기억으로는 9월 7일에 불법 펌토셀 아이디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정현 위원 이미 확인을 했지요.

○증인 김영섭 확인하고 9월 8일에 신고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신고했는데 저희 의원실에는 그 사실을 빼놓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뒤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국회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KT는.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해마다 KT 서버에서 침해 흔적 내지 침해 의심 정황이 발견된 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KT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에 외부 보안업체에 서버 전수조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결과들이 나왔고 해당 업체는 2018년과 2020년 운영 중이던 서버 2대에서 침해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1~2022년, 2024~2025년 서버 4대에서 침해 흔적이 포착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서버가 침해가 됐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증인 김영섭 그 내용이 지금 합동조사단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합동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원인 또는 경과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접 먼저 한다면 제가 보고 듣기로는 거기의 로그 같은 걸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조단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KT의 대응이 항상 그런 식입니다. 2023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서버 침해 시도가 있었고 실제 침해 흔적까지 발견이 되고 있지만 KT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랴부랴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해명도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만큼의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롯데카드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카드 인증코드인 CVC까지 몽땅 털렸지요, 조좌진 대표님?

○증인 조좌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정도면 뭐 다 털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조좌진 그 297만 고객들 중에서 유출된 정보의 규모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겁니까?

○증인 조좌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있는데 악성코드가 들어와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조좌진 탐지 시스템을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커가 저희들이 웹셸(webshell)이 설치되어지는 주요한 항목들은 탐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탐지하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웹셸을 설치해서 정보를 탈취해 나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악성코드의 감염을 최초로 확인한 일자가 8월 26일이었지요. 어떻게 확인하게 됐습니까?

○증인 조좌진 8월 26일 날, 온라인 결제 서버를 저희들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대를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그 두 대 서버의 동기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을……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온라인 서버 두 개 동기화가 안 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만약에 이 동기화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발견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조좌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정보보안체계의 역량상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보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롯데카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9일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롯데카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할 당시에 조좌진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성코드의 침입 사실만으로는 금융당국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렇다고 한다면 파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만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보안원에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증인 조좌진** 지금……

○**이정현 위원** 악성코드가 발견됐을 때라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증인 조좌진** 저희들이 8월 26일 날 침해행위가 있었던 거는 인지를 했고요. 31일에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9월 1일 날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8월 12일에 최초 악성코드가 침입된 것이었잖아요.

○**증인 조좌진**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8월 26일에 악성코드 감염을 최초 확인했으면 감염을 최초 확인했을 때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까?

○**증인 조좌진** 할 수 없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자금융법상 침해행위와 침해사고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사고라는 것은 침해행위에 의해서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마비가 되는 것으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법체계라든지 규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확인을 악성코드 감염됐을 때만이라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했다고 한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조좌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정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김장겸입니다.

류제명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장겸 위원 지난번 SKT 해킹사고 이후에 LG나 KT도 조심해야 된다면서 보안점검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러셨습니다.

○김장겸 위원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안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거 그냥 설마 설마 하다가 아까 이주희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AI 강국 노래 부를 때가 아닐 정도로 이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KT하고 롯데카드 이런 사태가? 근데 지금 장관은 어디 가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SKT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이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SKT 해킹 사건 때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미국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못매를 맞았어요. 보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했는데, 주무 부처의 장이 외국을 나갔다고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장관이 여기 나오셔 봐야—차관이 계속 대답하는 거를 봤는데—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안 들어온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정부가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최근 잇따른 통신사 여러 해킹사고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김장겸 위원 엄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무슨 출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엄중한 청문회에 나오셔야지, 아무것도 대답할 능력이 안 되더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안 인식, 의식 이런 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저 말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강조했는데 설마설마 하다가 이것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이 29일 이통 3사하고 만나서 간담회 가진다는 게 맞습니까, 그런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 부처 장관이—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고—조사 대상인 통신사 대표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번 간담회가 적정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있고요.

○김장겸 위원 걱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피의자하고 간담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그 통신사들은 담당 차관인 제가 직접 통신사들을 이번 사태 이후 계속 모아서 같이 이 사태 대응을 위한 논의들도 하고 있고요……

○김장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차관님은 지난번 7월 5일 날 SKT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KT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직접 발표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저희가 그때 KT하고 LG유플러스에 SK텔레

컴에서 발견했던 악성코드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드릴 바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아까 박정훈 위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동영상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소위 ISMI 캐처, 즉 가짜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이동가입자 식별정보 그리고 국제단말기식별번호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연 영상입니다. 이거 지금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 홍보 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까 박정훈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다음 PPT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데 이런 가짜기지국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지요,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차량에 싣고 다니는 고출력 장비, 소형 무선 기지국, 초소형 기지국 이것 배낭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초소형 모델까지 다양한 장비가 지금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어요. 홍보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집 범위 또한 이동통신 사용자의 모든 IMSI, IMEI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스템 사용 실시해서 대상에게 적발이, 탐지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런 무선통신 장비는 물품 품목이 따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직 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입통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아니, 더 큰 소를 여러 마리 더 잃으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이것 관세청하고 협의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이것 협업을 해야 되고요.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중국 블랙마켓에서 이미…… 이게 언론보도에 나온 겁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가짜기지국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언론보도를 보면 2024년 9월에 블랙마켓에 올라온 글에는 한국에 맞는 가짜기지국 한 것을 현물 보관 중이다. 고객이 한국에 반입했지만 사용하지 못해 다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걸 통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또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도를 보면.

이번에 붙잡힌 인물도 중국 교포지요? 이게 표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시장이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너무 대처가 늦고 안이한 것 같습니다. 관계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 부분들 저희가 부족한 점 있는지 면밀하게

돌아보고 이번에 확실히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류제명 차관, 배경훈 장관은 어디로 출장 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뉴욕 출장 중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대통령 뉴욕 총회 출장의 부대행사로 장관 행사 참여가 있어서요.

○**위원장 최민희**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진숙 위원장이 간 것은 FCC 간 거지요,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FCC와 관련된 업체 방문이었습니
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방미단 수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차이가 있고요.

띄워 보세요.

이런 건 명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통령 유엔 일정에 함께하고 있고요 매우 중요한 일정을 수행 중입니다. 판단은
위원님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차관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핸드폰이랑 카드 안 쓰는 국민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해킹 그리고 보안 관련된 질의는 국민의 매 순간 맞닿아 있는 안전
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과기정통부는 유일하게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합당
한 보안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말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님.

○**증인 조좌진** 예.

○**이해민 위원** 지난주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번 롯데카드 해킹 관련 작업이 본인
의 마지막 책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본인의 사임까지 포함한 인적채신을 고려 중이신
걸까요?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KT 김영섭 대표님, 롯데카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직접
피해 금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인적채신 하십니까?

○**증인 김영섭** 조사 결과 끝나면……

○**이해민 위원** 롯데카드 하신다잖아요. 설마 연임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연임 생각
하시면 저는 지금 상태면 국가재난 사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의식이…… 진짜 너

무 큰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관리 부실부터 한번 들여다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 방문했을 때 KT에서 제공하신 자료에서 뽑은 거예요. 지금 저 파일 차트에서 보여 주는 기지국 중에서 4.3만 대에 대해서 전수검사하고 체계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바깥에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불법 펌토셀은 저 바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SKT 관리 방법을 들어 보니까 KT는 완전히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소리는 KT 코어망은 자동문이에요. 해커들 보고 와서 가져가세요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 아침에서야 KT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펌토셀을 2014년부터 4000대의 옥외 펌토셀 도입했어요. 그런데 현재 KT가 관리하는 펌토셀 중 가장 오래된 장비는 2016년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나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년 동안 2015년까지 도입된 장비는 모두 회수됐습니까?

○증인 김영섭 모두 회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민 위원 그리고 저 답변을 보면 최근 5년간 3000대의 장비는 망실됐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3000대에 대한 전수 파악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망실은 회수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이해민 위원 전수 파악되고 있습니까, 3000대?

○증인 김영섭 3000대는, 제가 3000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이해민 위원 지금 불법 펌토셀 4대 나왔는데요. 저는 저 3000대도요 결국 잠정적인 불법 펌토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더 황당한 것은 KT가 한 책임 회피 부분이에요.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한 9월 8일 그날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을 바꾸셨습니다. 배상책임 조건에 ‘충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유로 인해’ 이렇게 바꾸셨어요, 하필 신고하시면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왜 바꿨어요, 이렇게 왜 바꿨냐고요, 사고는 왜 났고, 사고는 이미 나 버렸고 피해보상하기 그렇게 무서웠나.

이번에 개인정보도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후 피해보상 100% KT가 할 것인가, 입증 책임도 이용자한테 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KT가 다 복구를 해 주는 건가 이런 등등등 질문들이 막 떠올랐어요.

사고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이것 더 불리한 거잖아요, 더 좁힌 거니까. 불리하게 약관부터 변경할 정신이 있었냐라고 묻고 싶고요. 이 약관 변경 누가 최종 승인했습니까?

○증인 김영섭 그것은 아마 지금 배석자로 나와 있는 본부장이 서명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지금 관리도 부실하고 침해 신고하면 압습하게 배상책임 이런 것 바꾸

고 책임은 밑에 직원한테 다 미루시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사태 끝나면 사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 피해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피해를 입은 누가,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기기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IMEI 나간 것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그렇게 가벼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IMEI, 이것 기기 아이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니크 키잖아요.

저는 단말기식별번호 유출된 것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KT 대표님께서 아주 최악의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유출된 2만 명의 기기변경 지원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영섭** 기기변경은 어쨌든지 수사 결과 종합해 가지고 고려해 봐야……

○**이해민 위원** 기기변경 지원 안 하시겠습니까, IMEI 나간 것? 기기 아이디는……

○**증인 김영섭** 결과를 보고……

○**이해민 위원** 결과 보고요? 어느 세월에요?

이것 안 해 주면…… 제 IMEI 나갔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동하겠지요. 그러면 위약금 문제 또 튀어나옵니다. 거기까지 가고 싶으세요?

이것 위약금 문제까지 가지 않으려면 기기변경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차관님, 지금 보도에 따르면 개보위하고 국방부도 5년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정보 3만 8000건 유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은 전 국민 개인정보 다 털렸다고 가정하시고 보안 문제를 임하실 때 ‘어떤 특정 파트만 유출됐기 때문에 복제폰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 국민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는 가정하에 결합돼서 문제가 생길 것까지 가정하고 지금 보안 사태를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게 통할 때가 아니고 훨씬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이사님.

○**증인 조좌진** 예.

○**이해민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ISMS-P 인증을 받으신 거지요?

○**증인 조좌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ISMS-P하고 ISMS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따가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 보좌진 다 계시지요?

지금 현재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이사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롯데카드와 MBK의 경우는 국감 때 정무위에서 연계돼서 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중에 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민 위원처럼 연계해서 질문할 게 있으신 분은, 우리가 주질의가 다 끝나면 아마도 12시 30분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0분, 30분 시간을 내서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 쪽에 질문하실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들은 빨리 이것 위원님들한테 연락하셔서 알려 주세요.

○**김장겸 위원** 보내실 거예요?

○**최형두 위원** 오후에는 보내야지.

○**위원장 최민희** 예, 보내 드리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해킹 사태와 연관되어서 과방위에서 두 분을 증인으로 모셨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정무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계속 국감 중에 이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전 질의가 대개 1시 내지 1시 10분에 끝날 것 같고요. 그때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걸 빨리 메모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세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황태선 실장님,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조직의 대응TF 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거지요?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나면 그 프로세스는 일단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의 의무가 있지요?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우영 위원** 그러면 대응TF장으로서 유출사고가 있었다라는 아래로부터의 신고 접수가 최초 인지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증인 황태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게 소액결제 사고이신지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추가로 신고한 외부 용역업체에 의한 추가 신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우영 위원** 두 가지 사건 다입니다.

○**증인 황태선** 소액결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9월 8일 15시에 이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였고 동일한 날짜인 19시 16분에 KISA에 신고하였습니다.

○**김우영 위원** 서버 파기 인지 시점은 9월 15일로 그렇게 말씀했지요?

○**증인 황태선** 외부 용역업체에 의해서 나온 것이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차 신고를 9월 18일 23시 57분에 하였습니다.

○**김우영 위원** TF장은, 회사에 해킹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TF장 본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에게 있습니까?

○**증인 황태선**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우영 위원**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이런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보통신사업자는. 그 정보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누가 되겠습니까?

○**증인 황태선** ……

○**김우영 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KT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최종 책임자이고 이런 보안사고 피해 예방과 사건 최소화 또 재발 발생에 대한 총괄적 책임자지요?

○**증인 김영섭** 예, 보안사고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모든 문제는 총괄적으로 제가 책임입니다.

○**김우영 위원** 아까 그 매뉴얼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도표를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최종적으로 유출사고 대응TF장이 정보보안실장이고 그 옆에 위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아래 단위에는 기술분과·고객분과·대외분과·총괄분과가 있습니다. 총괄분과가 관련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와 업무보고를 받고 그걸 TF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TF장은 그 윗선인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조직도 표에 따르면.

그런데 대표는 이 해킹사고에 대해서 9월 달 돼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증인 김영섭**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 전문업체의 최종 결과 이것은 제가 9월 18일 날 알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증인 김영섭**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현장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부 다 스미싱으로 이렇게 알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김우영 위원** 보고를 전혀 안 받았어요?

○**증인 김영섭** 예, 언론보도를 처음에 접하고 관련 부서에 이게 무엇이나,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시하고……

○**김우영 위원** 결국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밑에 실무진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영섭** 총괄적으로는 제 책임이지만 실제 그때의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질 사안은 아닌 게 정보통신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 사건이 누출되어서 해킹 피해가 있으면 정보통신부나 KISA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그 요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폐기할 시에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표에 회사 경영에 대한 부실 관리의 책임이 있다, 적어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그런데 이미 SKT도 해킹 피해를 입었고 과거에 KT도 여러 차례 해킹 사건을 치러 본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대표로서는 회사가 해킹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KISA나 정보통신부로부터 해킹 우려 접수가 있었는지 그런 걸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홀히 했다.

실장님은 마땅히 고객의 안전, 보안을 책임지는 TF장으로서 그러한 우려가 접수가 되고, 그러면 성실하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할 TF장으로서 서버를 폐기하고 신고 내지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이것 혼자 독단적인 판단으로 하신 거예요? 대표에게 전혀 보고 안 했습니까?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에게 왜 보고를 안 했어요? 회사에 일어나는 중요한 고객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혼자 듣고 그냥 뭉개고 마는 겁니까? 본인이 다 책임질래요?

○증인 황태선 경위를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우영 위원 대표에게 최초 보고를 왜 하지 않았는가, 왜 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십시오.

○증인 황태선 외부 용역업체하고 저희 내부 보안팀이 KISA의 의심 정황에 대해서 받고 두 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침해 흔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ISA에 침해 흔적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외부 용역업체에서 인증서 유출과 관련해서는 의심 정황이 1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무팀장을 통해서 이 사업 부서에 8월에 서비스 전환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보안 우려를 감안해서 좀 당길 수 있는지 검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또 밑에 기술진들이나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고, 대표님은 나는 몰랐다 이런 거고.

KT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주들인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번에 상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대표·실장 고객에 대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다 위반하고 보안 책임 소홀히 하고 정보통신부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협조 요청도 거부하고 서버폐기 하고, 그러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우선 KT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KT는 서버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침해사고를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 따른 소액결제 사고다라고 처음부터 은폐 또는 축소한 경위들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고 여쭙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KT의 열한 가지의 잘못된—거짓말일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KISA가 KT에 침해 상황을 처음에 전달을 했지요, 7월 19일 날. 그런데 KT는 KISA에 오히려 침해 정황이 없다라고 회신한 것이 맞습니까?

○증인 김영섭 예,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한 적이, 침해사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KISA는 KT의 유출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증인 김영섭 침해 정황이 없어서 아마 신고를……

○최수진 위원 그런데 결과 어떻게 나왔지요? 결국은 기지국 침해사고로 신고가 되었

습니다.

세 번째, 경찰이 KT의 무단 소액결제 정황 통지 및 피해 분석을 9월 1일 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KT, 그럴 리 없다라고 발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증인 김영섭 죄송합니다. 잘못 판단……

○최수진 위원 그랬더니 결국은 침해사고 났지요.

그다음 네 번째, 무단 소액결제는 단순히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서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9월 10일 날 과기정통부 브리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사실상 침해사고 맞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증인 김영섭 예.

○최수진 위원 다섯 번째, 그리고 9월 4일하고 5일에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KT 자체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지요? 결과 보시지요. 9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KT는 가입자식별정보, 즉 IMSI 유출 고객 수를 5561명으로 유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마였지요?

○증인 김영섭 저희들이 최종 신고한 건 2만 30명입니다.

○최수진 위원 맞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기지국이 전수조사 결과 2개 발견된 이후로 아예 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몇 개 나왔지요?

○증인 김영섭 4개 나온 경로, 4개 나왔습니다.

○최수진 위원 중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착실히 조사하고 또 조심스럽게 발표하는 게 맞는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지금 피해자 278명, 피해액 1.7억으로 처음에 발표하셨으나 실제로는 2.4억, 362명으로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도 잘못 얘기하셨습니다. 일부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피해지역은 확산되었습니다.

열 번째, 서버 침해 없었다 그런 식으로 9월 18일 날 오후 3시에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서버 침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KT가 허술할 수 있습니까?

열한 번째, 인증키 유출 없다고 복제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유출 및 복제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KT, 오후에도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자꾸 근거가 축소되고 은폐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표님 한 말씀하시지요.

○증인 김영섭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언론이나 또는 고객 불안이나 국민 여러분들도 중간 현황 파악한 거라도 빨리빨리 발표해 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이거고. 또 VOC가 발생한다거나 추가 확인하게 생기면, 또 데이터 분석을 쪽 해 보면 사고당한 피해자나 또는 사고 건수나 또는 피

해 범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최수진 위원 저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더 넓고 앞쪽으로 더 가서 더 하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롯데카드 가신다 그래 가지고 롯데카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롯데카드가 역시 보름 이상 해킹 피해를 인지 못한 이유가 뭘니까, 도대체?

대표님, 왜 그러셨습니까?

○증인 조좌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해커가 저희들이 서버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웹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인력의 문제입니까, 기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안일한 태도입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조좌진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17년도에 업그레이드되어졌어야 되는 웹로직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안 된 부분들이……

○최수진 위원 안 한 거지요.

○증인 조좌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투자에 많이 소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지금 카드 비밀번호, CVC까지 유출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결제코드 이런 것들도 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롯데카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출된 경위, 유출된 양, 유출된 소스, 그 고객까지 관리가 모두 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증인 조좌진 예, 지금 전부 다 파악이 완료되어져 있고 고객들에게 통지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 대응 및 고객 불편에 대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나 프로세스 다 갖고 계십니까?

○증인 조좌진 어떤……

○최수진 위원 피해받은 피해액이나 앞으로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조좌진 예.

○최수진 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 류제명 차관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참 큰데 굳이 펌토셀이나 이런 것들을 저렇게 비인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잡아야 될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선 첫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불법적인 기지국이 운영된다, 전파국이 운영된다 그러면 전파관리소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본적으로 전파 인증을 전파 적합성, 전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기기들은 전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단속 책임이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펌토셀이라는 것은 음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고 전파의 커버리지가 20~30m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잡아야 되는 건 전파관리소인데 못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하실마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국민들한테 못 잡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일단 지금 통신사들의 망에는 더 이상 인증받지 않은 불법기지국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펌토셀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지국 같은 것은 타워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이것은 정말 초소형 중계기로서 어느 건물이나 어디에나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말 실력이 뛰어난 해커가 있다 그러면 펌웨어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자 공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안 결함이라는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일단 지금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펌토셀, 초소형 기지국에 대해서는 개별 기지국들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입증을 하나하나 다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증되지 않은 펌토셀들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또 인증되지 않은 기기가 작동하는 상태는 차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박상원 원장님, 한번 여쭙보고 싶은 게요.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무위 소관이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에서 2차 인증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휴대폰 결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OTP 형식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것이 소위 우리 흔히 얘기하는 2FA 인증, 투 팩터 어센티케이션(Two-Factor Authentication)이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진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참고인 박상원 OTP 인증은 저희 보안원이 하지는 않고 금융결제원 쪽에서 하는데 최근에 이런 해킹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인증체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 인증체계로 가야 되고요. 또 휴대폰 인증 쪽은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김영관 처장님, 사실 지금 이 얘기가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이랬을 때는 그냥 문자로 여섯 숫자 OTP를 생성해 가지고 보내고 결제가 간편하게

되는 것이 편의적으로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는 상황 속에서 소위 이중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2FA 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액 결제, 의심 가는 결제를 탐지했을 경우에 부가적인 인증을 해서 2FA를 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100원, 1000원 단위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지문 인증도 다 들어가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소액결제도 다 적용해 버리면 일차적으로 통신사 차원에서 데이터 누출이 아니면 인증 누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결제 과금 때문에 문제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어디까지인지도 좀 확인해 보고 하여튼 과기부랑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KT에 또 여쭙보고 싶은데요.

실무자 차원의 황태선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요. 결국 KT는 무수히 많은 유무선 장비들을 운용할 텐데 여기에 비인가 장비들이 들어가 가지고 잡힌 경우가 창사 이후에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합니까? 갑자기 누가 장비 하나 들고 와 가지고 꼭 이런 무선국 장비가 아니더라도 물리면 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인증체계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문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증인 황태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전문가가 또 배석하고 있는데 대신 말씀……

○**이준석 위원** 그러면 전문가분 나오세요.

○**증인 서창석** 지금까지 통신망 쪽의, 서버 쪽의 침해는 있었는데 이렇게 펌토셀 쪽의, 이런 가입자 쪽의 침해는 없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를 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감지된 사례가 그러면 없었다는 건가요, 펌토셀에 대해서는?

○**증인 서창석** 일단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불법 무선국이 저희 네트워크에 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준석 위원** 방금 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사업자에게 강제해 가지고 펌토셀에 대한 관리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장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누가 펌웨어 수정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중간자 공격을, 중간에 뭘 끼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증인 서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지금 청문회를 보는 분 중에 IT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물리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펌토셀의 상황에서 어떻

게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책임을 사기업에게 지운다고 말만 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보안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펌토셀이 물리적으로 설치될 때 물리적으로 접근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누군가가 해커나 와 가지고……

○**증인 서창석** 예, 물리적으로 접근은 막을 수가 없고요……

○**이준석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지하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서창석** 예,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장소나 공간에 대한 통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펌토셀이 위치한 공간에 누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지…… CCTV로 관리되는 공간에만 그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약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가서 만질 수 있고 열어볼 수 있고, 봉인할 수는 있겠지만 열어볼 수 있고 서비스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펌웨어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저는 보안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차관님도 설치 장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이런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소액결제 인증 방법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기회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ARS나 문자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어서 인증 과정에서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2단계에 걸친 인증, 생체인증이나 결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2단계로 하는 그런 강화된 인증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준석 위원** 지금은 소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예 또는 예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적용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기본으로 보급되었고 국민들의 정보 인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김영섭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해킹사고 이거는 그 자체가 용납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건 침해사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은폐·축소 이러한 부분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앞선 답변을 들어 보니까 처리해야 될 분량이 많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다고 표현하신 것 같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은폐·축소의 의도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고. 초기에 또 침해가 아닌 스미싱으로 의심하는 그런 판단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취지의 답변, 그러니까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지요. 은폐나 또는 축소의 시도는 아니었다.

지금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신 KT라는 국가기간통신사의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보면 솔직하게 은폐·축소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하셨던 발언은 제 판단으로는 은폐·축소의 연장선이에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보시고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KT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 일지예요. 7~8월 상황은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9월 상황만 보세요. 9월 1일에 광명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인정하시지요? 그냥 통보를 한 게 아니라 소액결제 피해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9월 4일에서야 KT는 원인 파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사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9월 5일에 ARS 비정상 결제,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이 시스템을 차단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때 처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KISA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9월 8일 신고한 내용입니다. KT가 신고한 거예요. 허위 신고예요. 시점 보십시오, 사고 발생 시간을.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 인지 시점을 9월 8일 15시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9월 1일에 통보를 해 줬는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9월 4일에서야 원인 파악 시작하고 그 전에 뭔가 파악을 했으니까 결제 차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상 징후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사고 인지 시점을 9월 8일로 합니까? 명백한 허위 신고지요. 이랬는데도 축소·은폐가 아니에요? 저 신고 자체가 실수입니까, 8일에도 이상 징후 없다고 허위 신고해 놓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과 해당 시행령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9월 5일에 ARS 비정상 결제를 차단시켜 놓고 신고를 9월 8일에 해요? 그러니까 이 위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인지한 시점도 허위로 하고 이상 징후가 없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집어넣고.

경찰 통보를 받은 9월 1일부터 그 직후 며칠 동안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가 이미 드러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기간 동안 KT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9월 1일 오후 4시경에 광명경찰서가 KT광명, 광명에서 일어난 소액결제 피해이기 때문에 KT광명에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KT구로의 소관이니 KT구로에 가 보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관이 KT구로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KT구로가 본사 법무실에 알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사관은 본사 법무실로 전화를 겁니다. 이때까지가 9월 1일 오후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본사 법무실에서 KT구로가 맞다, 담당 간부에게 알아보라 하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수사관이 통화를 시도하는데 통화가 안 돼서 다시 본사 법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부가 담당자 맞다, 휴

대전화 번호를 재차 알려 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직후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간부랑 통화가 이루어져서 수사관이 처음 해당 간부랑 만 하루만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담당 간부 왠 본사 법무실에서 저 사람이 담당자라고 했는데 ‘저는 장비 운용만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또 해맽니다. 그래서 법무실에 다시 문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에다 피해자 신원정보를 요구해요. 경찰이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재차 본사 법무실에서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서 또 달라고 해요. 이걸 언론이 뽕뽕이라고 보도하더군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 상황을 파악해서 언론에 알렸더니 뽕뽕이라고 표현합니다. 뽕뽕이 맞잖아요. 이래 놓고 역부족이었어요? 이래 놓고 일할 분량이 많아서 놓친 거예요? 어디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능력과 전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라는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냥 망가진 정도가 아닙니다. 상충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숨기려고 하는 이 음험한 조직문화가 KT 전체를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매우 후진적이고 부조리한 기업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KT 직원들한테 창피한 줄 아십시오. KT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들 직에 관한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지금 대표이사 직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 부적절하다? 어디 국회에 나와서 부적절을 따집니까! 수습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빨리 거취에 대해서 표명하는 것이 그나마 고객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KT 사태 관련해서 그간의 상황을 지켜보고 지난 9월 19일 날 과방위원들이 그 현장도 갔었어요. 그리고 오늘 질의를 보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들어요, KT가 특히 서버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고…… 저는 KT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이 가요, 오늘 보면. 조직적인 은폐를 위해서 조직적인 범죄를 KT 대표를 포함한 상충부에서 저질렀다, 이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에요.

하나하나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9일 날 KISA에서 KT에 해킹 체보 통보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21일 날 KT에서는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일단 확인된 것의. 여기 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서버폐기예요. 서버폐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8월 1일 날 폐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9월 19일 날 저희 과방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8월 6일 하고 8월 13일 날 폐기했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후에 자료로 확인된 것은 소프트웨어는 8월 10~12일, 하드웨어는 8월 12일 이렇게 폐기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얘기해 보세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훈기 위원 가장 중요한 서버폐기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을 바꿨어요. 이것을 국민 누가 믿겠어요, KT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말을 바꾼 것은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이고 범죄예요.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영섭 사실확인애 어쨌든 부적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KT라는 기업이, SKT도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전체회의에서도 질의를 술하게 했어요, 위원들이. SKT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KT가 한때 국민 기업이고 가장 큰 통신사인데 너무나 황당하고 창피해요.

그리고 제가 9월 19일 날 현장 갔을 때 뭘 느꼈냐 하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저 임원들도 대체 뭘 하는 건가, 뭘 알고 있나, 서로 의사소통이나 하나, 어떻게 조직이 저 정도 수준인가 참담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게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직적 증거인멸이고 범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KT의 행태가.

김영섭 대표, 조직적 은폐 인정합니까? 서버폐기에 대해서 은폐한 것 인정합니까?

○증인 김영섭 여러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또는 부족한 거나 이런 점이 많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직적으로 또 은폐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훈기 위원 모르겠어요. 은폐로 보여요, 그리고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고요, 지금.

과기부차관님, 원래는 서버폐기했다고 그랬다가 백업 로그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9월 19일 날 저희가 갔을 때는 폐기해서 없다 그래서 우리 과방위 내에서도 포렌식하거나 밝히기가 힘들다고 뒤늦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9월 19일 날 갔을 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폐기하고 없다 그랬잖아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사실관계 은폐나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서버 로그 백업이 확인돼 가지고 이제 사고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지금 그 로그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김영섭 대표, 그날 저희가 갔을 때 로그 백업 확인하고도 왜 거짓말을 시켰어요?

○증인 김영섭 그날 갑자기 오시게 돼서 저희들 보고 준비하고 등등 하는데 경황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했어야 되는데 아마 깜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대표님, 경황이 없어서 그 정도밖에 못 하면 대표 자리 당장 때려치고 나가세요. 그 정도 수준이면 거기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경황이 없어서 그 정도를 얘기를 못한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부문장 그런 분들도 똑같은데 다 옷 벗고 나가세요, KT에서. KT 수준이 그 정도예요?

김영섭 대표님, 시중에는 김건희의 낙하산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낙하산으로 와서

조직 장악도 못 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영섭** 낙하산 그런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또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19일 날 갔을 때 지금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과방위원들이 다 우롱당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많은 위원들이 그날 KT 광화문 본사도 아니고 서초동인가 그쪽까지 오라 그래 가지고 비 오는 날 길에서 한두 시간씩 시간 뺏기면서 다 갔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대표직 사퇴하길 생각 없어요?

○**증인 김영섭** 그날 오셨을 때 저희들이 전날 18일 날 백업 로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이훈기 위원** 잠깐만요. 그 중요한 얘기를 위원들이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든가 얘기를 했어야지요. 폐기했다고 얘기하고 폐기 날짜도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증인 김영섭** 그날 말씀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이 정도면 대표님하고 여기 간부들 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T 사장님,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지요?

○**증인 김영섭** 이 사진인지 모르겠으나 유사한 사진은 봤습니다.

○**박충권 위원** 지난 4월 SKT가 해킹사고를 당하고 나서 KT가 비웃었던, 그러면서 내세웠던 마케팅 사진입니다. 지금 똑같이 5개월 만에 KT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저는 마케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와야 할 것은 엄격한 책임 경영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부터 수많은 기업들까지 해킹에 당한 기관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관님, 지금 이 해킹 사태들 우습습니까?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통신업계 1위 기업인 SKT도 그렇게 탈탈 털렸는데 KT는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아닙니까, KT가? 그렇지요?

지금 사이버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고작 중국인 두 명한테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KT가.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확인은 됐습니까?

○**증인 김영섭** 그거는 경찰 수사가 나와 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박충권 위원** 아직 확인은 안 됐지요. 그렇지요?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하는 펌토셀이라는 게 사용이 됐는데 이게 KT의 초소형 기지국으로 변신을 해 가지고 가입자들의 통신을 가로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들의 배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되는 배후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국가적인 규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범죄 조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증인 김영섭** 제 예상입니다마는 중국 국적의 두 명이 검거됐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 배후에는 중국의 조직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박충권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여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김영섭**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펌토셀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옛날 대비 좀 간소화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도 당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큰 대기업이?

○**증인 김영섭**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박충권 위원** 너무 취약한 것 아니에요?

○**증인 김영섭**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옛날처럼 대규모 집단이 합동으로 수개월간 하는 이런 정도는 훨씬 더 벗어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고 보안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를 냈는데 보게 되면 소액결제가 우리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100만 원이 소액결제 한도 아닙니까? 99만 6000원, 99만 7000원 이렇게 결제했어요. 이렇게 당한 국민이 7명입니다.

사장님,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이렇게 당했으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소위 열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섭** 매우 화도 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충권 위원** 서버폐기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에 KISA가 KT의 원격지원상담서비스에 해킹 정황이 있다, 인증서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KT가 확인을 했는데 21일에 이틀, 3일 만에 KISA에다가 정황을 찾지 못했다,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고 8월 1일에 이 서비스 서버를 폐기했지요?

애초에 이 서버를 폐기하기로 계획했던 것이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8월 21일입니다. 6월에 KT가 공시를 하고 한 1~2월 정도 병행 운용하다가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8월이 되자마자 8월 1일에 바로 폐기했습니다.

이 서버가 폐기되면 그 침해사실들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포렌식을 합니까? 이게 증거인멸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8월 되자마자 바로 폐기했습니까?

○**증인 김영섭**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정보보안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황태선 정보보안실장님……

왜 6월에 공시했을 때는 1~2개월 병행 운용한다고 하다가 8월이 되자마자 1일 날 바로 그렇게 급하게 폐기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증인 황태선** 저희가 보안 전문업체하고 용역을 5월 22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원격상담서비스에 대한 침해 흔적 조사를 착수했고 그리고 KISA에서 의심 정황을 통보받은 이후에 외부 업체 조사 결과하고 내부 팀의 조사 결과를 크로스체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침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 KISA 쪽에는 침해 정황이 없음으로 회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외부 업체에서는 의심 정황으로서 미사용한 계정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게 정보통신망법상에도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KISA에서 그런 정보를 통보받고도, 물론 자체 조사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발견해 낼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도의적으로라도 증거는 남겨 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폐기하신 거예요? 애초에 얘기가 나오기로는 8월 21일 정도에 폐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황태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크로스체크를 했을 때 침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심 정황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보안책임 임원으로서 되게 좀 찜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8월경에 사업 전환, 서비스 전환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 서비스에 대한 조기 종료를 한번……

○박충권 위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KT의 잘못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범죄자들까지 은닉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류제명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디 누구 잘못이에요? KT 잘못입니까, 과기부 잘못입니까? 저는 과기부도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부족한 점도 깊이 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밀하게 조사해서 조사방해 행위나 또 자료 보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다고 하면 규정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 관계 규정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충권 위원 제가 질문할 게 정말 많은데 어쨌든 정부 대응뿐만 아니라 KT의 대응에 대해서도 추가질의로 꼼꼼히 체크를 해 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태선 실장님, 좀 아까 이런 찝찝하고 일부 뭐가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증인 황태선 의심 정황 1건이 외부 업체로부터 계속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서비스가 원래 전환계획이 8월경에 있는데 이것을 조기로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그 말은 의심 정황이 있으면 더 보존해야 되는데 찝찝해서 은폐하려고, 21일 날 서버를 폐기할 계획이었는데 조기 종료했다는 표현은 먼저 폐기했다는 게 되잖아요. 답 좀 제대로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다 바보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들어가지고요.

드디어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참 민망합니다. KT 해킹 피해 드러날수록 정말 이게 IT 강국이나,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금융거래며 또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서 통신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프레젠테이션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기업 같으면요 엄청납니다.

1페이지 보십시오.

우선 KT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KT는 데이터 브리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든가 AT&T에서 숄트 타이폰 같은 이런 중국 배후의 그룹한테 전체 데이터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버라이즌 같은 데서는 매년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DBIR이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KT는 발간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지금 발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사장님, 그것도 발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 한 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통신회사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막 뚫리고 해킹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각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롯데카드에서 드러났지만 롯데카드가 보니까 MBK가 소유하고 롯데카드도 그렇게 많은 고객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될 동안에 보안을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MBK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처럼 지금 연결되어 있고 IT가 발전해서 IT 강국이라 그러고 모든 결제를 다 통신을 통해서 하고 카드를 통해서 하는데 누굴 믿습니까?

지금 외국처럼 이렇게 엄청난 과징금과 손실보상, 징벌적 손해까지 맞아야 정신 차립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KT 사장님.

○**증인 김영섭** 하여튼……

○**최형두 위원** 오늘 충분히 들었으니까……

KT가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국가적 통신사로서 새로운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SKT, 특히 심각한 문제는 SKT 해킹사고로 인해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KT가 발생하고 롯데카드 터지고 알고 보니 MBK가 투자했는데 보안 투자 소홀히 하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가 IT 국가인데 왜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IT로 보면 우리보다…… 지금 중국이야 IT가 훨씬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 같은 나라한테 털리나. 창과 방패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은 최고의 정예 요원들이 군대처럼 몰려 가지고 우리를 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사회, 민주주의사회이고 공유하는 사회이고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일일이 막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보안은 큰 비즈니스도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이익 내려고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문제에서는 폐쇄사회가 개방사회, 열린 사회를 공격하는 이런 비극이 생겨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국가적 책무도 발생합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최형두 위원 이 KT 사고 지금 보니까 KT가 능력 신고하고 해서 늦게 대응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국가적 주요 사건, 이른바 메이저 인시던트(major incident)로 지정했습니까?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정확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외국 보겠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정부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뒤늦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통합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 때 이런 총리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월요일 날 총리 주재 긴급현안 점검회의 때 참석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정부는…… 내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게 SKT 해킹 사태 와중에 KT가 또 터진 겁니다. 보니까 롯데카드 또 터져요. 어디가 또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국가의 기능이 중요해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이게 해킹 대란 아니겠습니까? 전 방면에 걸친 해킹 대란입니다. 공공은 안 털립니까? 공공도 털렸을지 모릅니다, 이미.

중앙 컨트롤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SKT, KT, 롯데카드 이런 등등에서 또는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침투당하고 털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컨트롤합니까, 이런 상황 대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은 컨트롤타워가 있지요—KISA 이름 비슷합니다만—FBI 그리고 NSA, 국방부와 공조하며 민관협력,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최형두 위원 그런데 안보실을 중심으로 한다지만 안보실이 실제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안보실에 몇 명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실제 주무 역할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최형두 위원 그러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서 SKT·KT 그다음에 롯데카드까지 막 뚫리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걸 메이저 인시던트라고 해서 국가적 주요 사건이라고 지정하고 국가적 대응체계를 발동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여러 가지, 저희가 정부 내부의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SKT 때도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은 민간대로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가 같은 걸 내서 스스로 대비해야 되지만, 안 그러면 미국이나 이

런 나라 같았으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시스템을 바꿔 갖고 앞으로 더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만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 같은, 미국뿐 아니지요. EU 보십시오. 영국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특히나 적성 국가로 많이 둘러싸인 나라에서, 특히 초연결 사회인데 개방사회에서 이걸 누가 지켜 줘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거래를 하며 기업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식의……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 먼저 할까요?

○김현 위원 아니요, 1분 안 쥐도 돼요?

○위원장 **최민희** 안 쥐요. 아무도 안 줬습니다.

○김현 위원 아무도 안 줬어요?

○위원장 **최민희** 예.

○김현 위원 지금 준비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7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통신사 해킹 피해와 관련해서 과기부 류제명 차관님, 지금 과기부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28년 된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 통신사들의 사이버 해킹이나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꽤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터지면 후진국처럼 저희가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여러 가지 저희……

○김현 위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일단 저희 내부 대응체계나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킹이나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공격 기법 문제도 있고 합니다.

○김현 위원 해킹이 발전되는 거와 맞물려서, 김대중 정부 때 인터넷 고속도로 깔면서 세계 제일 강국으로 한 거 아닙니까, KT가?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김현 위원 그 선두 주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후진적인 상황이 닥쳤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원인 분석을 못 했다 또는 KISA가 느장 대응을 했다, 과기부 느장 대응했다 이거 지난 SK 때도 동일하게 제기됐고……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기지국 화재 사고 이런 것들 때마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2차관이 주재해서 관계 기관 대책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수차례 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당장은……

○김현 위원 수차례, 정확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보고 안 하셨지요, 의원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가 간담회하고 현안점검회의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따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계 기관 모아서 회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물어야 된다고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더 긴밀하게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SK텔레콤, 지난 2025년 4월 18일……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18일 날 있었고 2023년 LG유플러스 그리고 2025년 KT, 공식적으로 8월 5일이지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잡지 통해서 KT가 해커로부터 해킹당했다는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정보통신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기부가 최초로 인지한 시점, KISA가 최초로 인지한 시점, KT가 최초로 인지한 시점 다 다르잖아요. 좀 잘 하시지요.

그다음에 KT 과기부 출신 낙하산, PPT 한번 띄워 보세요.

KT 김광동, 박철호, 윤상웅.

거기 한번 보세요.

과기부 출신, 과기부 출신, 과기부 출신.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차관님?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KT로 과기부 출신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그……

○김현 위원 이거 째짜미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개연성 있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전직 공무원들……

○김현 위원 이해충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런 부분은 취업심사를 받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현 위원 아니, 취업심사와 무관하게. 취업심사 받았다고 해서 다 가고 이런 거 안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해충돌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다음 장 보세요, KT.

BC카드에 윤석열 정부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 오인서. 스카이라이프 최영범, 스카이라이프 김대희. 최영범이라는 분은 윤석열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낙하산인사, 이명박 정부 낙하산인사. KT알파에 윤석열 정부. KT IS에 검사 그다음에 KT 텔레캅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다음 보십시오.

검사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어요. KT가 정거장입니까, 지금? 국민 혈세로 투입된 KT에 저렇게 많은 검사들이 가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증인 김영섭 법무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에는 법무실하고, 그다음에 조사 내지는 이런 것들에 어쨌든 경험이 풍부한 감사실하고 그다음에 KT가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이슈가 있습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김현 위원 아니,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전하고 3배·4배 들어온 이유가. 그렇게 KT에 검사가 많이 필요한…… 이분들이 그러면 다 합니까? 대형 로펌에……

지금 이번에 KT 사건 나서 어디에 의뢰하셨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하셔야지요. 어디에 의뢰하셨습니까? 사건 의뢰를 다 별도로 하셨잖아요, 대형 로펌에.

○증인 김영섭 세종법무법인에……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로펌에 하고.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와 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KT가 통신사로서의 기능보다는 윤석열 정부, 그 이전 정부의 로비 창구지요, 로비 창구. 이런 거 개선할 생각 있으세요? 전문가들 얹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영섭 정보보안·정보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김현 위원 전문가들이예요, 이분들이? 검사들이?

○증인 김영섭 아니……

○김현 위원 예를 들어 추의정 감사실장, 특수부 검사인데 방통위에 파견 나와 있다가 변호사로 갔다가 다시 감사실장으로 왔어요. 무슨 회전문 인사입니까? 김후곤 서울고검 검사장, 이 사람이 KT에 뭘 안다고 지금 가 있습니까, 특수부 출신이?

바로잡으세요.

과기부는 KT에 대해서 이런 거 권한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 위원 권한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소액결제 피해예요, 국민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웹토셀 관리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거 보십시오. SKT는 별도 인증기간이 없습니다, 웹토셀 키에 대하여. 그런데 여기 핵심이 장비가 재시동될 때 재생성됩니다. 키를 다시 바꿔요. 그리고 7일 이상 트래픽이 미발생하면 웹토셀 차단, 3개월간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계속 쓰지 않는다,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으면 삭제하고 망 접속을 차단합니다.

LG유플러스 2년입니다, 인증기간이. 그런데 30일 이상 트래픽 미발생 시 웹토셀은 차단됩니다.

KT, 아까 10년이라고 그랬지요?

○증인 김영섭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저 한 달은 언제 생긴 거예요?

○증인 김영섭 지금 이 사고 이후에 한 달……

○위원장 최민희 사고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존 10년 인증기간 해 놓고 아무 장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관리 안 했다는 게 이거예요, SKT와 LG유플러스와의 차이가.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김영섭 대표님, 이번에 불법 펌토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2만 건 정도지요? 2만 명?

○증인 김영섭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피해액을 보면 피해 건수가 362명이에요. 왜 이렇게 작아요? 이 362명은 왜 피해를 당한 거예요? 답해 보세요. 왜 하필 이 362명입니까?

○증인 김영섭 저희들이……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짧게 답하세요. 362명은, 왜 하필 이 사람들이예요?

○증인 김영섭 왜 하필 이 사람들인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위원장 최민희 그럼 뭐……

○증인 김영섭 362명은, 저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불법 펌토셀하고 접속 이력이 있는 총인원이 2만 30명으로 지금 1차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위원장 최민희 그렇지요, 거기. 스톱해 주세요. 접속 이력.

무슨 얘기냐면 그 불법 펌토셀이 2만 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어. 이 상태에서 362명이 다른 업무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한 사람이예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맞지요?

○증인 김영섭 예.

○위원장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액결제를 위해서,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소액결제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증인 김영섭 생년월일, 성별을 추가로 입력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우선 통신사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이런 거지요?

○증인 김영섭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이건 이미 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제가 알기로는 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액결제 신청을 할 때 그런 정보는 입력을……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이거는 털렸다는 걸 전제로 해야 답이 나오지요. 해결책이 나오지요.

그러면 펌토셀만 하나 접속하면, 펌토셀로 KT 내부망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도 쉽고 소액결제가 가능한 환경은 이미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증인 김영섭 불법 펌토셀이 망에 연결되는 이 관련……

○위원장 최민희 또 잘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불법 펌토셀은 KT 내부망에 어떻게 접속했어요?

○증인 김영섭 그 부분에 접속을 어떻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접

속했는지는 어쨌든 경찰 수사 또는 실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원장 최민희 왜 자꾸 경찰조사 얘기가 나와요?

○증인 김영섭 아니, 거기서 실물 같은 걸 봐야……

○위원장 최민희 내부 협조자가 있었나요?

○증인 김영섭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시다만……

○위원장 최민희 왜 확인되지 않았다고 자꾸 하세요? 그럼 뭘 밝힌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

류제명 차관, 어떻게 불법 펌토셀 장비는 KT 내부망에 접속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분명한 것은 KT가 기기별로, 펌토셀 자체의 기기에 내장된 유심정보나 인증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호화 통신을 하지 않은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인증 절차하고 거기서 통신의 암호화 문제는 또 약간 구분을 해 봐야 되는데 암호화되지 않은 것도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최민희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이 일이 안 생겼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김영섭 대표님, 암호화하셨어요?

○증인 김영섭 통신의 암호화…… 통신 구간별로 암호를 어떻게 하는지, 뭐는 하고 뭐는 안 하는지는……

○위원장 최민희 몰라요?

○증인 김영섭 우리 네트워크부문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는 게 없어요.

네트워크본부장 나와 보세요.

빨리 좀 해 봅시다.

인가된 펌토셀 장비가 KT 통신장비에 접속하지요, 끊겼다 다시 접속할 때?

○증인 서창석 인가된 것은 접속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인가된 거. 미인가 아니고 인가.

○증인 서창석 예, 인가된 거는 접속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KT 통신장비와 다시 연결될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지요?

○증인 서창석 한 번 접속된 인가된 장비는 그런 재인증 절차 없이 기존에는 접속이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냥?

○증인 서창석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 과정에서 3GPP의 통신표준규격에서 해야 하는 암호화 작업은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증인 서창석 예, 기존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미인가 펌토셀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접속이 돼요?

○증인 서창석 그때는 기존의 인증정보가 그 기기에 탑재되고……

○위원장 최민희 불법 펌토셀에?

○증인 서창석 예, 불법 펌토셀에 탑재가 되면 접속이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어떻게 탑재가 돼요, 불법인데?

○증인 서창석 그거는 기존에 저희 펌토를 해킹해서 그 정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존에 쓰던 장비를 불법으로 신호 증폭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폐기해야 될 펌토셀을 폐기 안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증인 서창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지금 이 내부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신 거지요, 이거 관련하여?

○증인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 외에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다른 방법 뭐가 있어요?

○증인 서창석 현재는 저희 DB에 있는 것만 지금 접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SKT가 얘기한 대로 어떤 장비들이 리부트 할 때, 파워 온오프 할 때 인증 절차를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어쩌다가 접속이 차단됐을 때 내부망에 다시 접속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증인 서창석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지금 차단된 순간 다시 접속할 때 거기에 허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해킹의 허점이?

○증인 서창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다시 연결될 때 그때 만약에 SKT처럼 재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 일 막을 수 있었지요?

○증인 서창석 예, 저희 실수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뭐가 실수예요? 그렇게 쉽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증인 서창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하루에 1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들고 10만 원 벌려면 힘든데 지금 총해서 2.4억, 2억 4000이 털렸는데 무슨 이걸 실수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KT는 지금 장비 관리도 부실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또 이상한 거냐면요 이 펌토셀 10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제가 KT 쓰기 때문에 지니TV 있거든요. 그거 3~5년마다 셋톱박스랑 이거 다시 갈아 주겠다고 하세요, 3~5년. 그거 갈면 돈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펌토셀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한 거예요, 지금 KT는.

들어가고요.

○증인 서창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

김영섭 대표, 이거 내부자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우리 발언시간은 7분씩 꼭꼭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거 답하세요.

○증인 김영섭 내부자가 연계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경찰이 그것도 수사 중인가요?

○증인 김영섭 아마 그 원인 규명 과정에서 내부자가 만일 있으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 그리고 금융보안원, 이제 분에게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위원님은 이정현 위원과 이해민 위원……

○최형두 위원 최형두도 하겠습니다, 김장겸까지.

○위원장 최민희 아까 이미 신청하라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단 지금은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코드를 해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심었는지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좌진 저희들 온라인 결제 서버 내에 웹로직 1개가 17년도에 업그레이드가 안된 그 허점을 타고……

○이정현 위원 2017년에 웹로직 프로그램 48개에 대해서 보강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를 놓치셨다는 얘기지요?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놓쳤습니까?

○증인 조좌진 그 웹로직 관련되는 상대방 회사가 해외의 아주 소규모 페이사여서 트랜잭션(transaction)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가 놓쳤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은 서버에는 웹로직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8년 동안 몰랐다는 겁니까?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48개 말고 그 이상의 웹로직 프로그램 중에서 아직까지 감지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조좌진 나머지는 다 전수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러면 2017년 때는 전수조사를 안 한 겁니까?

○증인 조좌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의 웹로직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이정현 위원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에 대해서는?

○증인 조좌진 아니, 지시를 받고 나머지는 작업을 했는데 그 하나를……

○이정현 위원 하나를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수준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롯데카드 로그 기록 최대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까?

○**증인 조좌진** 서버에 따라서 다릅니다. 1300개 서버가 있는데요 그 1300개 서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일반적으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보관합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자, 앞서 하나 놓친 그 웹로직 프로그램의 경우에 이번에 악성코드가 심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그 전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졌거나 해킹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그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모르실 거 아닙니까?

○**증인 조좌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가 이 정도로 취약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게 2019년 5월이었지요?

○**증인 윤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2022년부터 매각을 시도하고 있고 올해도 롯데카드를 매각할 과정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윤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보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100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에서 밝혔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매각하는 그런 과정인데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윤종하** 저희가 금융사 투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현 위원** MBK파트너스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 상황을 보면 말이지요 올해 정보보호 예산편성액이 128억 원, 지난해 편성액은 151억 원입니다. 편성액으로만 따지면 15.2%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편성액 151억 가운데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1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롯데카드에서 발표한 바로는 지난해 실제 투자가 117억이고 올해 세운 예산이 128억이니까 예산을 늘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건 편성액으로 따지면 15.2%가 줄어든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속이듯이 자료를 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BK파트너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1100억 원의 예산을 보안에 투자하겠다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사모펀드가 결국에는 단기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안 투자와 같은 비용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파일 하나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 이거 꼭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모집인들의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큼니다. 2014년에도 카드 사태가 있었을 때 롯데카드를 비롯한 3개 회사에서 1억 400만 건의 정보가 유출이 됐었고 그때 카드 모집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정지라든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이때 카드 모집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아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조좌진** 그 부분은 과거에도 그랬었고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구체책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밝히셔야 됩니다. 2014년에도 관련해서 보전 약속을 60%라고 했다가 실제 30% 지급에 그쳤다고 하는 게 지금 카드 모집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이분들의 하소연 정확하게 잘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좌진** 예,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조좌진 대표님, ISMS-P 인증 올해 7월에 받으신 거지요?

○**증인 조좌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P가 들어갔다고 하면 개인정보까지 안전하게 다루는 보안체계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저는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보안인증제도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설명을 말로 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자료를 도식화했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결제 서버에 있는 웹로직 프로그램 48개 중의 하나가 보안패치가 될 때 누락이 됐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웹셸 악성코드가 설치가 된 것이잖아요. 맞지요?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런데 하나가 누락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패치를 해서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원래 해킹은 전체 시스템 보안레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시스템의 보안레벨이 올라가더라도 제일 낮은 곳이 있으면 전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관리는 그런 개념하에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7월 달에 ISMS-P 받으셨다 그래 가지고 보안인증 받은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대체 인증해 주는 곳에서는 뭘 기준으로 평가한 건지, 국민이 과연 국가의

인증 믿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기업에게는 면죄부가 되어 가는 보안인증체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그리고 대표님, 고객 보상 방안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크게 첫 번째는 카드알림서비스 무료 제공, 두 번째는 차년도 연회비 면제, 세 번째는 최대 10개월 치 무이자 서비스 제공인데 이것도 다 연말까지지요? 맞나요?

○증인 조좌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런데 카드알림서비스 월 얼마짜리 서비스지요?

○증인 조좌진 55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550원이에요? 차년도 연회비 보통은 한 2만~3만 원 정도 되겠지요?

고객정보인데 너무 적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객정보를 2만~3만 원 수준으로 생각한 건가?’ 이렇게밖에 인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까지 조금 더 면밀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CI, 즉 연계정보 이용기간은 연계정보를 주민번호하고 분리해서 보관·관리해야 한대라고 되어 있어요. 연계정보가 같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CI(연계정보) 값은 주민번호 대신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암호화해서 사용하는 고유값인데 주민번호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비식별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CI 값하고 주민번호 값이 같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데 한 서버 안에 같이 있었나요?

○증인 조좌진 예, 이 부분……

○이해민 위원 그러면 같은 DB 안에 있었나요?

○증인 조좌진 아니요, 저희들은 DB가 해킹을 당한 건 아니고요 서버가 당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CI와 주민번호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정보통신 그 법 시행령 자체가 27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물론 그 게……

○이해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국감 때 따로 과기정통부에도 짚을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리고 그냥 아주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그걸 같이 둔다는 것은, 같은 서버에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안레벨에서는.

그래서 저는 KT가 관리 포함해서 총체적인 난국이라면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서 보안 인식 자체가 정말 낮았다 말씀드리고, 과기정통부는 KISA하고 함께 제대로 된 보안인증체계 손을 보시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는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어도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조좌진 대표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에서 2017년도에 이미 취약점이 발견돼서 경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작은

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증인 조좌진 그게 저희들이 경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 특정한 오라클 웹로직 자체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전 카드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중에 그 당시에 그 관리업체가 해외의 작은 업체……

○증인 조좌진 관리업체가 해외의 작은 업체라는 게 아니라 그 웹로직과 연결되어져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해외의 작은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장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상원 원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미 소위 오라클 웹로직에 대한 경고는 2018년, 2024년, 이 PPT에서 보듯이 계속 경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웹서버가 전자금융 기반시설이지요?

○참고인 박상원 예, 맞습니다. 전자 기반시설이고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금융회사는 연 1회의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박상원 예, 작성해 가지고요 금융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으면 그동안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취약점을 계속 롯데카드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박상원 롯데카드가 취약점은 알았고요. 아까 롯데카드 대표가 얘기한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서버 중에 1개 관련해서 그 취약점 패치하는 걸 놓친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면 PPT 5번 띄워 주시지요.

조 대표님, 지금 롯데카드 이용약관 제45조에 보면 ‘약관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해민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10개월 무이자 할부…… 지금 보니까 유출된 게 카드번호, CVC 번호까지 다 유출됐는데 10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건 너무 한가한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증인 조좌진 혹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CVC라든지 민감정보까지 나간 고객이 28만 명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람서비스라든지 그리고 피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서비스, 그리고 무이자 10개월, 그다음에 차년도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 보상체계는 정보 유출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또 2~3일 기다리셔야 되고 또 불안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객의 불안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소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김장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카드 해지하고 탈퇴하려고 그래도 쉽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을 하나 샀다 이러면 롯데카드로 해서 이걸로 만드시 지불대금이 월별로 나가고, 1년이든 나가고 그걸로 해서 할인을 받고 해서 계속 1년 동안 싫으나 좋으나 롯데

데카드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해지·탈퇴가 지금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위약금 지불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조좌진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 예를 들면 렌탈이라든지 이런 장기, 안마의자를 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약은 저희 회사와 소비자가 맺는 것이 아니라 렌탈 회사와 소비자 간……

○김장겸 위원 아니, 그래도 대금을 내가 지불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금은, 산 거는 당연히 지불해야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지·탈퇴가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에 직면했을 때에는 롯데카드 회사 측에서 당연히 그걸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지 않고 하는 그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조좌진 위약금 발생 없이 지금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조인철입니다.

아까 롯데카드 대표님께 이해민 위원님도 그렇고 몇 가지 확인했는데 패치 하나가 누락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1차 질의 때 ISMS 인증 관련해서 운영상 롯데카드 측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증인 조좌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쭙볼게요.

카드 이용자들 포인트 제도 많이 이용하시지요?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만약에 롯데카드를 믿을 수 없어서 내가 탈퇴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카드포인트 어떻게 합니까?

○증인 조좌진 예를 들면 항공사 마일리지, 엘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은 카드 해지와는 관계없이 고객들이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요? 카드가 없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증인 조좌진 마일리지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저희들이 대한항공……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대한항공하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포인트제 있잖아요, 포인트.

○증인 조좌진 그게 포인트의 종류별로 상황이 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엘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 유통망 안에서는 그냥 현금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포인트……

○조인철 위원 뭘로 씹니까, 그것을? 그러면 어디에 기록이 돼서……

○증인 조좌진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조인철 위원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조좌진 예, 고객이 확인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현 위원도 이야기하시던데 요새 저희한테 계속 문자 오는 게 모집인들이예요. 모집인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많이 짚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문자를 받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인 조좌진 우선 본 사태와 관련되는 부분의 가장 큰 책임과, 총체적 책임은 일단 제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인철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조좌진 예?

○조인철 위원 모집인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전에?

○증인 조좌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집인들이 예를 들면 영업 정지라든지,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당하면 모집인들이 활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롯데카드를 맡고 나서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인철 위원 그전에 롯데카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증인 조좌진 예.

○이정현 위원 2014년.

○증인 조좌진 14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인철 위원 저희한테 문자 오는 것 보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미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집인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생계가 곤란할 정도가 됐었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요 문자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당국으로부터 어떤 제재조치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모집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겠습니까?

○증인 조좌진 저희들 입장에서요 모집인들을 리텐션(retention)을 해서 같이 가는, 저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진심으로 그 대책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5분 주세요.

대표님, 이번에 롯데카드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297만 명 맞지요?

○증인 조좌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이 중 카드번호, 비밀번호 두 자리, CVC까지 유출돼 실제 결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28만 명 맞지요?

○증인 조좌진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이 중에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서 저장하지 않았나요?

○증인 조좌진 이게 일부는 암호화돼 있고 일부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것은 기술적인 거라 혹시 뒤에 누구 나와 계시면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는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최용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롯데카드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했나요?

○증인 최용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 유출이 돼도 이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거지요?

○증인 최용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나머지 카드번호 암호화되어 있나요?

○증인 최용혁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원래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는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번에 유출당했던 시점에 해커가 평문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암호화되어지는 과정까지의 시간, 그 차이를 계산해서 암호화되기 전에 평문을 가져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문으로 유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번호는 유출된 게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복구화가 어려워서 안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증인 최용혁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둘 다 암호화된 것도 있고 평문으로……

○위원장 최민희 암호화 안 된 것도 있다?

○증인 최용혁 예.

○위원장 최민희 이것 자료 더 받습니다.

윤종하 부회장님, 지금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MBK파트너스가 사모펀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에 대하여 좀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 받아들이십니까?

○증인 윤종하 예, 국회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커다란 것, 본질적인 문제는 놔두고 지난번에 저희가 롯데카드 방문했을 때 대표이사께서 향후 5년간 1100억을 정보보안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MBK파트너스도 지원하실 거지요?

○증인 윤종하 예, 저희가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소홀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그럼으로써 보안체계가 약간 미비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주로서도 저희 경영진과 개진해서 투자가 미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걸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님.

○참고인 박상원 예.

○위원장 최민희 롯데카드의 경우는요 지금까지의 해킹사고와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출입구, 침입경로가 확실한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패치를 없애지 않은 한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 더 찼찼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침입경로가 이렇게 확실한 경우가 있나요?

SKT 침입경로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요? 못 밝혔지요, 류제명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구체적인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직 안 나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참고인 박상원 최근에 해커들이 침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 유출했을 때 자기들의 침입 흔적을 삭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침입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08년도 침해사고가 있었고요. 2~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밝히기가 좀 쉬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세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1100억 보안 쪽에 투자해서 최대한 보안시설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참고인 중에 김승주 교수님은 여야 위원 다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이 단지 SKT·KT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게 나라 전체가 털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라 특별히 모셔서 10분 정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최형두 위원 그러면 이석하신 뒤에……

○위원장 최민희 이석하십시오.

10분 드리십시오.

○참고인 김승주 제가 국회 청문회 자리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까지 마련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보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과방위에서 계속 목소리 내 주시고 또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아까 프랙 보고서를 많이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프랙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털렸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랙 보고서를 보면 행안부, 외교부, 통일부 그다음에 방첩사 이런 곳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공유한다거나 회의록을 공유한다거나 또는 메모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온나라시스템도 털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온나라시스템이 털렸는지 여부, 즉 프랙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 정보기관도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코로나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보안에 있어서의 절대 원칙은 망분리, 폐쇄망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용 PC는 인터넷과 단절한다. 그런데 이게 연결이 시작된 게 코로나 때부터고요. 그 이후에 AI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연결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망을 전부 다 끊어 놓은 상태에서 보안을 하다 보니까 무균실 같은 거지요. 그

런데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AI 정책을 해야 되고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걸 먼저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황 파악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신사들은 계속 압박을 해 주셔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수조사를 시작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상임위에서 나서 주셔서 현황 파악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실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터지면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잘 압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모아서 또 대책으로 내시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정과제 중에 국방 관련해서 3축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3축체계라고 하는 것이 일단 탐지를 잘하자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쏘기 전에 탐지를 해서 그 전에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원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3축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이버 분야에서도 이 3축체계 관점에서 사이버 3축체계를 어떻게 만들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탐지입니다. 저희는 이걸 전문용어로 사이버 인텔리전스(cyber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KT 얘기 굉장히 많이 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7월에 처음 얘기를 들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나 하면 프랙 보고서에 KT가 사용하던, 즉 고객상담 서버에서 사용하던 SSL 암호통신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보 당국이 좀 일찍 입수해서 그걸 업체들에게 통보해 준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SSL 인증서가 유출됐다라는 걸 먼저 안 것은 외국에 있는 2명의 해커입니다. 프랙 보고서를 작성한 해커지요. 애네들은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면 중국 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얻은 겁니다. 이런 걸 사이버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에서는 일반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인텔리전스 첩보를 우리는 왜 거쳐서 입수하느냐 이걸 좀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곳과 MOU도 체결하고 C-TAS라고 그래서 정보공유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국의 2명의 해커만도 못하다라면 사실은 사이버 인텔리전스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탐지가 됐다 하더라도 방어를 해야 되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 방어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정부의 예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부의 예방 능력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아까 제일 많이 나온 게 ISMS 또는 ISMS-P 인증체계입니다. 이 ISMS 인증체계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기본 건강검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관이 기본적으로 정보보호를 잘하고 있는가, 기밀자료라든가 개인정보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지요.

이번에 ISMS-P 무용론이 나왔을 때 저는 업체도 잘못이지만 정부의 관리 부실을 한번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이건 기본 건강검진 같은 거라서 해킹을 100%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언론에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긴급 업데이트하라고 공지한 보안 취약점이 8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보안 취약점이 8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2025년에 ISMS-P 인증서가 나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관리 부실이거든요. 기본 건강검진 때 걸러 줘야 될 항목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방과 관련해서 이런 평가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통신장비는 보안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들은 무조건 보안성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들, 펌토셀을 포함해서 보안 기능이 있는 통신장비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보안성 평가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무력화겠지요. 무력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로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롯데카드나 SKT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건 ‘로그 기록이 제대로 보관 안 돼 있어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가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로그 기록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은 롯데카드만 하더라도 취약점이 방치된 건 8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그 기록이 그것보다 훨씬 짧게 보관돼 있다면 그사이에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또 미궁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KT 사건도 그렇고 롯데카드 같은 경우도 해커가 외국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럴 경우에는 국제공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공조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축체계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과방위를 중심으로 또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는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은 업체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업체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면 그걸 경감 사유로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가 똑같이 유출돼도 어떤 곳은 하루 만에 복구를 했고 또 그 피해 사실을 다 알렸고 어떤 곳은 1년을 지체했어요. 그러면 하루 만에 조치를 한 데는 분명히 경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래서 나왔던 DBIR(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해외에서는 피해 구제 노력이 경감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기업은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거든요. 그걸 과징금의 경감 사유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체계화시켜서 과방위를 중심으로 챙겨 주시면, 우리가 지금 모두의 AI 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교수님, 지금 명패를 만드는 것 같은데 잠깐 그 앞에 앉아 주시지요.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이 질문하실 게 있대요.

혹시 다른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정현 위원 김승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김현 위원 저도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다른 위원님들 질문, 두 분.

그러면 7분씩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7분씩 하지 말고 좀 빨리 끝내야지요.

○이정현 위원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 내용이……

○최형두 위원 내가 아는 이야기 나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정현 위원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하지요.

○최형두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7분, 7분 먼저 하시고 가세요.

○최형두 위원 저는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예.

○최형두 위원 교수님 지적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부 칸막이로 가고 있고. 관료주의라는 것이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KISA는 KISA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게 9·11 때 알카에다한테 미국이 털렸던 그 실패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DBIR 같은 것도 저도 눈여겨본 것이…… 그런데 SKT도 안 하고 KT도 안 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롯데카드도 마찬가지고. 고객 통신의 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쭙보고 싶은 게—제가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갈 텐데—국가 체제, 외국에서 우리가 좀 착안해야 될 3축체계에서 특히 인텔리전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응체계…… 어제, 그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일과성으로 그칠 확률이 큼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 체제를, 이런 3축체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국가안보실 이야기합니다만 국가안보실이 엄청 바빠서 이것도 지나가면 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거거든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요?

○참고인 **김승주**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산하기관이든 정부 부처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에 어떤 기사가 뜨면 그 대응 자료를 만드시느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3축체계 얘기를 꺼낸 겁니다.

뭐냐 하면 어떤 표어 같은 게 중심으로 하나를 딱 잡아 주지 않으면 산만한 정책이 남

발되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가, 그 지향점을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 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라든가 어떤 식으로 유관기관 배치를 할까를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정보 공유입니다. 지금 기관 간 어떤 특정 영역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지요. 공유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주 알짜배기 정보는 잘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실제 알짜배기 정보가 공유될 수 있을지 국가안보실하고 한번 토론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는 업체도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업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는 정보를 맨날 달라고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정보 공유체계—제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김현 간사님 먼저 하실게요.

○김현 위원 지금 발제를 짧은 발제지만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류제명 차관도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롯데카드 건에 관련해서는 협조체제가 잘 구축돼서 회의를 하고 대응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뚝 떨어진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정비를 해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참고인 김승주 맞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어느 차원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됐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SK텔레콤 문제나 아니면 LG유플러스 문제나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 불거졌던,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고도화되는, 말씀대로 코로나 때 모든 정보를 어쨌든 다 모아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역으로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안 됐다는 건지 좀 불투명해요.

○참고인 김승주 정보 공유체계는 예전부터 마련돼 있었고요.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 대응할 때는, 특히 해킹사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KT 이번 건도 물론 포함해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참고인 김승주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실제로 업무를 해 보면 유관기관 간에 바로 그 딱 인지한 타이밍에……

○김현 위원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참고인 김승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해킹됐을 때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

해서 되려,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딱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을 내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게 흐지부지돼서 대응을 못 했던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참고인 김승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현 위원 아니, 그런 일도 있지요. 이번에도……

○참고인 김승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보 공유의 적시성 그다음에 신속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통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로 보면 1단계에서는 과기정통부 담당 국장이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하고 담당 부처하고 공유를 하다가 그게 격상됐을 때, 피해가 생기고 규모가 커졌을 때 국가정보원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그게 민간이 됐든 국가 정보기관이 됐든 아니면 국가전략자산이 됐든 공유해서 그걸 격상시키는 것을 지금 국정원이 하도록 돼 있단 말예요. 그게 작동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승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서는 지금 체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정보를 공유한다라고만 써 놓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얼마나 빨리 공유하는데’ 이런 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지 못했나?

○참고인 김승주 그렇지요. KISA가 받는 정보를 보면 이렇게 걸러지고 걸러지고 한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김승주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프랙 보고서 얘기 하시면서 정부가 털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사실로 확인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정보나 기업의 정보 차원을 넘어서 명백한 국가적 안보 위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참고인 김승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참고인 김승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건 개인정보에 집중해서 논의를 했더라면 프랙에 실린 것들은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까 온나라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린 건 저희 정보기관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도 말씀드린 거고요. 온나라시스템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들, 지자체 모두 포함해서 거기서 논의되고 있던 회의록, 보고서, 메모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해커가 이 시스템에 산하기관을 통해서 침투해서 거기서 통일부와 해수부 직원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탈취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했다, 여기까지는 프랙 보고서에 있고요 그걸 사실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 범위가 도대체 어디인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고서가 유출됐는가, 그다음에 계정이 털린 공무원이 딱 둘인가 아니면 더 있는가, 그다음에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는 더 있는가 아니면 이 하나인가, 이 모든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 봐야지만 아는 거고요.

온나라시스템 말고도 공무원들이 쓰시는 GPKI, 공인인증서 관련 소스코드도 유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부메일 서버의 소스코드도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커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대검이라든가 이런 주요 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서 피싱한 사례도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내용들이 해커 1명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해커들은 팀을 짜서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 도구들을 가지고 움직이면 피해는 훨씬 더 광범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정현 위원 공무원의 아이디, 계정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CDR이라고 있잖아요?

○참고인 김승주 예.

○이정현 위원 콜 디테일 레코드(Call Detail Record), 누가 언제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건데 이 CDR이 유출됐을 경우에도 꽤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승주 CDR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외국 같은 데서는 2016년도부터 통신사 해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통신사는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중요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통신사의 중요한 정보는 통화상세기록, 즉 CD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파악하면 주요 공직자나 군 주요 인사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만나고 동선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미국의 9개 통신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때 월스트리트저널은 통화상세기록, CDR 여부부터 조사를 했고요. 조사한 결과 트럼프 캠프 인사부터 시작해서 주요 공직자의 통화상세기록이 나갔고, 그리고 해커들이 더 나아가서 감청 장비에까지 접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망분리, 폐쇄망 정책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 또 기관들,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그동안에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참고인 김승주 일단 그게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보안업체는 약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면은 있습니다. 과거에 보안 관련한 법 제도 자체가 보통 포지티브 규제 그래서 어떤 것, 어떤 것 하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하는 경향이 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망분리로 하던 것이 이제 다 무력화됐으니까 조금은 창의적으로 미국처럼 또는 유럽처럼 보안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AI를 도입해야 되니까 2~3년 내에 단기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단기간에 역량을 키우

려면 인력도 많이 뽑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정현 위원 롯데카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롯데카드 측에 질의를 했었는데 CVC 등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가 처음에는 모두 암호화됐다고 했다가—앞에서도 롯데카드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만—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았거나 암호가 해제된 상태로 유출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인정보가 평문 상태로 24시간 이상 로그 서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니까?

○참고인 김승주 보통 로그 기록에는 주요 정보를 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킨 거지요. 그런데 재미난 건 SKT와 롯데카드가 그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SKT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민번호가 전부 다 암호화돼서 DB에 보관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시서버 두 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개발자들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버고 모든 암호화된 데이터는 일단 임시서버에서 풀려서 일정 기간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해커는 거기에 악성코드를 심었던 거고요. 유출 여부는 로그가 부족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돼 있는 곳에서는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었으나 로그 서버에서 풀린 채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자산 파악 자체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팜토셀과 관련해서 2010년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팜토셀에 대한 허용 규제완화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 김승주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당시에 이동통신사가 무선국 개설신고 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효과까지도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규제완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승주 사실은 그때 규제완화를 하면서 팜토셀에 대한 안전성 대책이 같이 나가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안전성을 갖춘 것들을 허용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완화를 하는데 팜토셀에 대한 안전성 대책은 좀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후 시간에 계속 계실 수 있나요, 교수님?

○참고인 김승주 제가 2시 반에는 이석을 해야 됩니다.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최민희 질의하십시오, 7분.

다른 위원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씀은 오프라인에 있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 김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금 더 질의응답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쭙보시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AI 정책, 우리 지금 AI 3대 강국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국가적으로 정보보안 상태가 어떠한지 전수조사가 너무나 절박하고 이것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독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은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인 김승주 일단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악성코드가 없는지 아니면 로그 같은 것도 전부 다 봐서 우리가 놓친 흔적이 없는지를 보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 외에 프랙에서 언급된 것들은 일차적으로 체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다른 곳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요.

○이주희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대응해서 헤쳐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저희 과방위 내지는,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또 다른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법규와 법령에 유기적인 사이버보안 업무에 서로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간 작동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법규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상세히 여쭙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된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국가 정보보호 TF라도 긴급하게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고인 김승주 지금 우리나라 전반을 동시다발적으로 검사를 하려면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입니다. 국가안보실 3차장실인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견 나간 인력과 기타 등등이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를 몰으셔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AI 정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지금 딱 하나 우리가 해외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결국 AI는 클라우드에 넣게 돼 있는데, 외국에는 이 클라우드가 민간용과 정부용으로 나뉘어지고 정부용은 톱시크릿용, 시크릿용, 일반용 이렇게 다시 나뉘집니다. 그리고 AI를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방·외교·안보에서 쓰는 AI는 톱시크릿용 클라우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용 AI는 일반 정부용 클라우드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제도 자체가 민간용 하급 인증제도밖에는 마련돼 있

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합당한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해서 인증도 받게 해야 모두의 AI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저희가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될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과기부차관님께서 교수님 말씀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클라우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안 인증 기준 자체를 상중하 이렇게 3등급 체제로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등급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업자들도 인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중등급·상등급에 대한 것들은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망 분리 상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클라우드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정원하고 과기정통부가 또 시범사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해서 클라우드 시대에도 보안을 갖춘 클라우드 활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빨리 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7분 쓰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프랙 보고서에 나타난 정부 부처 해킹 관련하여 지금 과기정통부는 뭘 할 수 있어요? 국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된 공공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책임이 있는데요. 정부기관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국정원하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국정원과 행안부가 지금 내부 서버 해킹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급히 해야 될 게 각 부처, 해킹당했다고 추정되는 부처를 먼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처를 해킹 여부 전수조사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되지?’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애매모호해지고, 그래서 이걸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ISA 원장님, KISA는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여러 말을 10분 동안 하시고 또 지금 하고 계신데 KISA는 뭐 하고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ISMS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주요 기반시설에 너무 협소하게 돼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요 기반시설도, 통신 3사라든지 이런 데는 몇백 %씩 확대…… 옛날에는 방화벽 위주로 스위치라든지 네트워크 위주로 돼 있었는데

코어망까지 다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ISM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체크 기반에 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지금 KT가 펌토셀 관리가 허술한 것 오늘 나와서 들으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통신장비마다 장비별 고유번호가 있지요. 맞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이게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때 이 장비별 고유번호를 확인하니까, 안 합니까, 현재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프로세스상으로는 확인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만 해도, 고유번호가 확인이 돼도 사고 가능성은 확 줄어요. 왜 주냐면, 그러면 이걸 고유번호가 있는 사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해야 되는 데 폐기하지 않은 펌토셀을 활용했다고 경우의 수가 줄게 되거든요.

원장님, 제가 정파와 상관없이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물러나 주십시오. 저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위험이 터지는 것…… 정말 KISA 원장은요 이 분야에 대한 완전 전문가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검찰수사관이 와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정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저도 통신을 전공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저는 통신 전공하고 사이버 쪽에 오랫동안……

○위원장 최민희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전 국민이 다 보는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KISA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우리가 그동안 다 봐 왔는데 정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국가기관의 KISA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되고, 이래야 AI 3장으로 가지 이게 검찰이……

지금 김현 위원 자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KT의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KT 엉망돼 가고…… 진짜 이걸 중심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전 국민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걸…… 가능하면 저는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정말 100% 동의하고 늘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침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잖아요. 저는 AI전략위원회의 한 파트에 이 보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그 부분만 좀 보태 드리면……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보안TF를 별도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TF뿐만 아니라 거기의 중요한 한 기구로, TF로 시작해서 기구로 들어가서 이걸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AI 3장과 우리의 보안 강도를 높이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 부분 잘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전 질의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 김승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한 뒤에 다시 적절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인 김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도 안 해요?

○황정아 위원 조금 이따가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전에 KT에 제료제출 요구한 것 받으셨나요, 위원님들? 자료 받았어요? 아까 KT에 해킹 대응 매뉴얼 받기로 했었잖아요. 받았어요?

제출하셨나요?

○증인 김영섭 위원님께서 받으시고 보좌관들께서 열람하셨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김우영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시간은 몇 분씩?

○위원장 최민희 7분.

○한민수 위원 7분이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영섭 대표님, 오전에 정보보안실장도 말씀하셨는데 외부 업체에서, 원격상담서비스에 의심 정황 1종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언론보도는 7월 9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면서 얘기한 게 7월 22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증인 김영섭 예.

○한민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7월 22일이라고 하더라도 KT가 KISA에 침해 정황 사고 신고한 게 며칠입니까? 9월 18일이지요?

○증인 김영섭 예.

○한민수 위원 자정 가까이입니다, 23시 57분. 그러면 근 두 달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 뭘 했습니까? 이때라도 바로 조치를 했어야지요.

또 하나, 그러면 7월 22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걸 십분 감안해서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왜 서버폐기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서버폐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증인 김영섭 서버폐기를 신중히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서버폐기를 정보보안실에서 사업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 걸로 압니다.

○한민수 위원 이게 보안의식이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뭔가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증인 김영섭 예, 반성합니다.

○한민수 위원 적어도 국가기간통신망을 자처하고 있는 KT면, SKT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뭐가 발견됐다 하면 가입자 늘리고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안에도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SKT 사고 이후에 KT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계세요?

○증인 김영섭 알뜰폰까지 합하면 약 1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습니다. 월 평균 22만 명 넘게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영섭 예.

○한민수 위원 그분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KT로 옮긴 지 겨우 한 달 됐는데 이제는 또 어느 통신사로 가야 하나’ 이것 제 얘기 아닙니다. 이번 사태 터지고 기사에, 커뮤니티에 남긴 우리 국민들의 한탄입니다. 좀 찾아 보세요, 오늘 여기서 지적받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증인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제는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데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정말 국민들의—뭐라고 해야 됩니까—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SKT 때도 유영상 SK 대표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유출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이것 개인정보 아니냐 묻은 적이 있어요.

김 대표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 개인정보 맞지요?

○증인 김영섭 예, 개인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가 안 읽어 드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정보를 만났는지, 이건 발표가 되겠습니까만 결과적으로 무단 소액결제라는 실제 금전적 피해가 나왔습니다. SKT에서는 실제 금전적 피해까지는 밝혀진 건 없지요?

○증인 김영섭 예.

○한민수 위원 어떤 사태가 더 심각합니까?

○증인 김영섭 제 생각에는 양쪽 사태 다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 발생한 게 아주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 당국이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만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범인은 실제로 잡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KT 고객안내 및 케어 방안 1·2·3번, 이것 내가 김영섭 대표께 읽어 보라고 하고 싶은 정도예요. 그것 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번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00% 책임지겠다.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다. 3번이 신속하게 피해 고객에 대한 추가 보상을 마련하겠다. 이런 고객안내와 케어 방안이 KT 보안망이 신뢰를 잃어 가지고 정말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객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방안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섭** 이 고객안내 케어 방안은 초기의 버전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강화해서, 확실하게 해서 고객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당연하지요.

KT 이용약관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영섭** 예.

○**한민수 위원** 정말 제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옮긴다거나 할 경우에 회사 내부적으로 위약금 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2만 30명 피해가 발생한, 정보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민수 위원** 아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KT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고객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증인 김영섭**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사 결과, 최종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피해 내용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한민수 위원** 실제 금전 피해가 없었던 SKT가 지금의 KT처럼 안일하게 초기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김 대표나 KT 임원진들이 KT를 그동안 아껴 오고 사랑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십시오.

○**증인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 위원** 포항남·울릉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조사 중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조사 중인 사건이라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겠습니까마는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사회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차관님 소신도 들어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현상이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알아

보고 또 가늠해 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아시고요.

용의자 체포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2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상휘 위원 16일 날에 체포가 됐고 17일 영등포에서 검거가 된 걸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용의자가 확실합니까? 그냥 용의자 선입니까 아니면 범죄적 사실이 확실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용의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상휘 위원 기관으로부터, 지금 민관 같이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범죄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합동조사단에는 경찰이 같이 합류해서……

○이상휘 위원 같이 합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용의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A 씨 같은 경우에 경찰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 반복해서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진술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다 그러면 국내에 야기되고 있는 어떤 반중에 대한 정서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윗선이라는 이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말씀드렸듯이 상세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뭔가 좀 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의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순전히 이익적 관점에서의 조직이란 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떤 목적이 주로 있을까요? 현금을 이렇게, 소액결제를 이 정도 목적으로 했기에는 너무 이게 방법 자체가 사회적 파장이 큰 얘기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도 지금 소액결제, 무단결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여러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 또 여러 단계들이 그냥 간단한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이게 간단한 시도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약간만 확장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국내 사이버보안에 대한, 거의 뚫렸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들도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중국에 있는 배후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신빙성을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것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취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나 말이지요 북한의 해커 가능성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황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취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걸 국민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민생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뚫리게 하는, 그 허점을 다시 한번 공략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은 KT라든가 SKT라든가 등등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적 개념을 갖고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지난 4월에 SK텔레콤에서 2324만 명 개인정보 유출됐고 예스24, SGI서울보증 이런 데도 지금 해킹 피해를 당했고 최근에는 KT하고 롯데카드가 해킹당했습니다.

차관님, 통신사 해킹 근본 원인 찾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법적 권한이라든지 실행 계획이 없는 반복되는 선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드맵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조만간 저희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부처가 이번에는 IT 보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주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특히 통신사에 대해서는 보안 상태, 통신망 관리 상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좀 더 전방위적으로 한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취 위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KT나 SKT나 이런 것 보면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이상취 위원** 그만큼 감독과 그만큼 여기에 치밀성을 좀 더 요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국민의 재산권, 국민의 것인 전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방어막이 허술하게 뚫린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과기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취 위원** 근본적인 원인 규명 이게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16일에 발표됐지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알고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여기에 보안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보안 관련된 주제로 123개 중에 하나가 들어 있

습니다.

○**이상휘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글썽요, 지금 사이버보안의 주관 부처도 과기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주로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서 민간 분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미국 같은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보안청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상휘 위원**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없습니까? 전문화된 어떤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정부 내부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들과고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위원** 국정과제에서 다루어졌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필요한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 AI만 자꾸 치중하면 안 되거든요. AI가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안에 취약성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상휘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김영섭 대표님,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죽 답변을 들어 보니까 김영섭 대표님은 대표가 아니라 무슨 바지사장 같습니다. 대표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표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표를 하십니까? 추가 피해 드러나면 위증 처벌받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씀 주시지요. 답변 주세요.

○**증인 김영섭** 추가 데이터를 지금 분석 중이기 때문에, ARS 인증 말고 SMS 인증이라든지 PASS 인증 부분은 데이터를 분석 중인데 거기서 추가 피해 또는 피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정아 위원** 제대로 일 못 하시면 아마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실 건데요.

이번 사태에서 잘못은 KT가 저질렀지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귀책사유는 KT지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말장난으로 지금 보상 운운하지 말고 정신적 피해까지 법적으로 배상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영섭**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

를 해 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 주세요.

○**증인 김영섭** 위약금 면제는 어쨌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또 피해 내용,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아니, 이런 당연한 책임도 회피할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대표입니까?

KT가 지금 영업정지를 시켜야 할 정도로 이렇게 악의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심각한 게 이번 사태에서 과기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기부가 뭔가 봐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류제명 차관님, KT는 9월 15일에 인지를 했고 18일 23시 57분에 서버 침해 신고를 했는데 과기부는 무려 18일 22시경에 신고 계획을 알았다고 하네요?

민관합동조사단 나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민관합동조사단이 나가 있어서 하는 일이 뭐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9월 8일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침해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9월 9일 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그 분야에 관련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8일 날 저희에게 알린 사실은 기존의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를 저희들한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15일부터 18일까지 봐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좀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들은 15일 날, 사후에 외부 보안점검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요. 저희한테 신고된 18일 이전까지는 이 보고서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래서 3일간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매번 KT·LG유플러스 괜찮다, 이제 와서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SKT 해킹 사건 때 다른 데까지, KT·LG유플러스 살펴봤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의 축소·은폐 시도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과기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KT의 주장처럼 저게 진짜 전수조사입니까? VOC 조건 돌리고 ARS 조건 다 돌리고 이게 전수조사예요? 축소조사지.

김영섭 대표, 지금 ARS 전수조사만 해 놓고 국회 자료에는 ARS라는 조건은 빼고 자기네들 전수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허위자료 제출 아닌가요?

차관 말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허위성 여부는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서 책임 소재를 가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KT가 발표한 이 조사 범위는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김영섭 대표님이 언론들한테 저희 의원실 보도 반박으로 KT가 조건에 조건을 걸어서 지금 축소해서 산출해 놓은 피해자들을 뽑아놓고 ARS 피해 외 인증수단도 포함한 피해 내역이라고 밝혔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장난을 치려다가 말실수를 좀 하셨는데 KT가 결국 ARS 외에 SMS 등 인증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바로 어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SMS 피해 없었습니까?

○**증인 김영섭** 374건의 사고를, 피해를 당한 고객 764건에는 SMS 인증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포함되어 있었지요?

○**증인 김영섭** 예,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고 있었는데 ARS에만 조건을 뒀서 피해를 축소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화면 보시지요. 피해자 화면인데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읽어 보시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자 인증입니다. 문자 인증. 안 보이십니까?

SMS 피해를 KT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또 축소·은폐를 한 거고 지금 없다고 한다면 위증을 대놓고 한 건데 지금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SMS 피해도 일부 있다.

대표님, 저희가 소액결제 이루어진 모든 고객들에게 현황 고지해서 그림자 피해를 찾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하셨습니까?

○**증인 김영섭** 그때 당시에 ARS 인증 방식의 사고가,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ARS 이거를 데이터를 돌려 가지고 범위를 확장한 겁니다.

○**황정아 위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지금 AI 시대에 무슨 결제 방식을 알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태도니 국민들이 KT를 더 이상 못 믿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차관님 연봉 어떻게 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

○**황정아 위원** 1억 4000 정도 되시지요?

차관 연봉의 한 3배 가까이, 4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KT가 범무법인 세종에 소액결제 사태 자문 맡긴 것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자료 보시지요.

최근 5년간 과기부에서 세종으로 이직한 인원들이 있는데 평균 월급이 구백 얼마에서 3400으로 뛰어요, 월급이. 연봉으로 무려 4억 1000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이직자는 전 2차관과 전 기조실장입니다. 전부 다 KT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차관,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세종에 이직한 전직 과기정통부 출신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정아 위원** 왜 KT가 세종을 법률자문으로 했습니까? 전관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 주세요.

○**증인 김영섭** 이거는 법무실에서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가장 많이, 크게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이 어딘가를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세종으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신성범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 가운데 왜 KT에서 초기에 경찰에서 통보를 받고도, 소액결제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왜 스미싱으로 판단했느냐에 대해서, 사장님 잘 모르시는 눈치라서……

여기 보니까 정보보안실 상무 나와 계시지요? 마이크가, 좀 나와 보시지요, 상무님. 직급을 좀 밝혀 주시고.

○**증인 황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정보보안실장 황태선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제 질문에 답을 해 보세요.

초기에 9월 1일 날 경찰에서 통보를 했는데도 왜 스미싱으로 판단한, 그 정도로 어려운 사안입니까?

○**증인 황태선**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신성범 위원** 알고 있기로는, 뭐 알기로는……

○**증인 황태선** 죄송합니다.

피해 고객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스미싱의 어떤 피해 유형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 김영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범 위원** 누가 판단을 한 건데?

○**증인 김영섭** 정보보안실장의 담당 업무가 아니고 초기에 신고 왔을 때의 처리는 뒤에 배석자인 다른 상무께서 하셨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요.

최우혁 국장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인데 나와 보세요.

KT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스미싱이다 아니다 판단, 기술적 근거가 없습니까? 기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볼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제가 그걸 갖다 구분하는 건 조금 더 전문가인 저희 부단장을 부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범 위원 지금 최 정책관님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에 들어가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예, 제가 단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성범 위원 단장이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예, 단장이고 부단장이, KISA에 이동근 본부장이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동근 본부장 나와 보세요.

전부 다 왜 이렇게 판단이 늦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겁니까? 이동근 본부장 말씀해 봐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초기에 피해자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이 조금 느리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찰 쪽으로 피해자분들이 신고가 집중이 됐고 관련 서에서는 좀 특이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유형인지.....

○신성범 위원 아니, 경찰에서 통보하면 당장 달려가서 전문가들이 붙어야지. 경찰 수사과나 형사과에서 뭐 기술적인 스펙을 잘 모를 거 아니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경찰도 전문 수사관한테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떤 유형의 공격인지를 경찰 쪽에서도 분석을 그때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데 김영섭 사장님, 이게 자꾸 왜.....

이상휘 위원님이 보여 준 펌토셀, 이거 KT 안에서는 기가 아토(GIGA Atto)라고 불려요? 사장님.

○증인 김영섭 예, 지금 펌토셀은 전부 다 기가 아토라고 부릅니다.

○신성범 위원 그렇지요? 어찌 됐건.

그거 관리하는 게 24만 2000대입니까?

○증인 김영섭

○신성범 위원 이거 사장님이 뭘 모르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24만 2000대고 SK 7000대, LG유플러스가 2만 8000대라는데 KT가 많은 이유가 뭐냐?

○증인 김영섭 25만 6000대입니다.

○신성범 위원 25만 6000대.

○증인 김영섭 총 공급받은 수량이 25만 6000대입니다.

○신성범 위원 25만 6000대.

현재 정상 운영이 25만 6000대. 정상적으로 운영.....

○증인 김영섭 정상 운영은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18만, 약 19만 됩니다.

○신성범 위원 19만 대. 그러면 6만 대 어디에 가 있어요?

○증인 김영섭 나머지 재고로도 한 2만 대가 있고 등등 해서 지금 18만, 약 19만 됩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데 망실된, 잊어버린 뭐 이런 게 다 나타난 거 아니고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예, 연동.....

○**신성범 위원** 중고시장에 등장하고.

해외에서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이 펌토셀 이거 제작 기술에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까, 이 제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증인 김영섭** 이 제작은 국내 업체가 설계를 하고요, 생산은 전부 다 중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들어옵니다.

○**신성범 위원** 조좌진 대표님, 이게 보니까 똑같은 패턴인데 누장 신고하고 또 막 겁이 나니까 은폐하고 하는 건데 왜 초기에 1.7기가밖에 안 된다, 정보유출 없었다 그 판단은 또 누가 한 거예요? 이 판단을.

가셨나? 미안해. 미안…… 오전에 미처 못 봤네.

이걸 보니까 KISA 원장님, 이게 죽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KISA가 막 모든 걸 책임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차관님도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약간의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국가정보원 안에 국가사이버관리단 만든 게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5월 달에 만들었잖아요. 이때 낸 보도자료가 있는데 보면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게 거창했다고.

그래서 국정원·과기정통·행안·기재·산업·국토·금융위·군·경찰·인터넷진흥원,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2023년 5월에 국사단(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출범할 때의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전체 정부 부처가 다 달려든다 이런 원시적인 대처보다도 류제명 차관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해 보신 인터넷진흥원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지금 현재 국사단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다시 그걸 정비해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이게 SKT 해킹 때도 보면 민관합동조사단에 국정원을 넣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들어오면 뭐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그런 오랜 오해와 선입견 때문에 자꾸 제의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보안정책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그 다 이어그램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 통합관리실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차관님, 이 이야기를 아까 정부 부처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현재 국정원에 사이버안보센터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3년 보도자료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이버위기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거기 단장이, 과기정통부에서 파견 나간 국장이 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하고 협업, 협조 관계를 이렇게 진

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정원에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문제 이런 문제는 국정원법에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나 또 저희 망법상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공유 범위 또 이런 것들에 법률적인 문제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체계가 잘 작동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거를 지난번에 SK 파동 때 이미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그런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으면……

아니, 그리고 해킹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이미 있어요.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겁니까? 과기부의 이니셔티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그 부분은 저희 문제라기보다 국정원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하고 지금 차관이 얘기한 게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질문하는 건데 답변 제대로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대리 김현 여기 신성범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저희가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아니,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펌토셀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했고 그 결과는 다 공유됐다는 걸로 오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섭 사장님, 지금까지 펌토셀 몇 개 샀는지 아세요?

○증인 김영섭 예, 요새는 아토셀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25만 6000개를 구입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옛날 거는요?

○증인 김영섭 옛날 거는…… 그때는 약 1만 9000대……

○조인철 위원 1만 9000대입니까?

○증인 김영섭 예, 옥내 펌토는 1만 9000대 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옥외는 없습니까?

○증인 김영섭 옥외는 지금 소형의 불법기지국……

○조인철 위원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지금까지 총 27만 9000대 샀다고 돼 있습니다.

○증인 김영섭 옥내 펌토하고 그다음에 아토 펌토 다 합쳐서 27만 5000대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신형 펌토가 25만 6000대?

○증인 김영섭 예.

○조인철 위원 구형 펌토가 옥내에 1만 9000대, 옥외에 3200대.

○증인 김영섭 그런데 제가……

○조인철 위원 옥외의 3200대는 지금도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KT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증인 김영섭 옥외 펌토는 제외한 숫자를 불러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옥외 펌토는……

○조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머지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회수했느냐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회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고 옥외 펌토 3200개는 지금도 운영 중이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형 펌토는 더 취약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SMS 인증은 계속 받고 있고.

이상중 원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조인철 위원 이런 것들은 체크리스트에서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이번에 문제된 펌토셀 관련해서는 체크리스트에 아마 포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인철 위원 체크리스트에 이런 것들이 빠져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래서 이번에 다각적으로 지금……

○조인철 위원 누가 가서 이걸 심사를 합니까? 전문가들이 합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심사 위임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

○조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가 아니고 자격증 있는 분들, 교육받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것도 많지도 않고 서너 명이, 그렇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1개 조에 6명 정도, 6~7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한 기관에 60명이 나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1개 조에 한 6~7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조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4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조인철 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이걸 간소화를 한다고 하셨지요, ISMS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여러 가지 인증 부담을 좀 낮춰 주는 측면에서 비용 측면이나…… 그런데 조사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건 잘못된 이야기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가 좀……

○조인철 위원 당시 보도자료에도 보면 점점 항목 경량화, 80개 항목을 40개로 낮춰 준다. 이걸 문을 허술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깎아 주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이런 항목을 낮춰 주거나 하는 것은 거의 문을 열어 놓겠다라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이걸 다시 개선할 생각이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그 당시에 말씀해 주신 경량화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낮춰 주는……

○조인철 위원 중소기업이었던 대기업이었던 간에, 보안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이번에 항목 자체가 적절 한지……

○조인철 위원 오히려 중소기업이 아니고 사업 특성상 보안이 더, 인터넷을 많이 쓰거나 이런 곳을 강화하고 덜 쓰는 곳, 영향력이 적다라고 하는 것에 낮춰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다 나눠서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정책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부분,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조사 항목들하고 각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지금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개선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KT만 해도 펌토셀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27만 대, 거의 28만 대를 사 가지고 몇만 대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2013년도에 했던 것은 펌토셀에 보안 취약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음에도,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방식을 제대로 안 맞춘 거지요, 한 번도 점검해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KISA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를 그냥 보고서로 끝난 거지요. KISA에서 한 거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외부 연구로 하셨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

○조인철 위원 얼마짜리였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 당시에 제가 금액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를 했으면 어디다 쓰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썼어요? ISMS에도 지금 반영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어디에 썼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펌토셀의 취약점을 두세 가지 정도 노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인철 위원 이렇다면 연구보고서를 당시에 작성했던, 발주했던 사람들에게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쓴 거예요, 도대체?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 최수진입니다.

제가 KT의 매뉴얼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005년 5월 23일 처음 제정해서 한 24차례 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침해사고 등급분류 기준을 5등급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인 거지요?

○증인 김영섭 제가 몇 등급이라고 현장에서 파악하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최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안 담당자 계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황태선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1등급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등급으로 언제 격상이 됐지요?

○증인 황태선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게……

○최수진 위원 대강.

○증인 황태선 22년인가 23년 경우를……

○최수진 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증인 황태선 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 개정됐는지.

○최수진 위원 확인해 주세요. 이것 바로 해 주세요.

○증인 황태선 예, 그러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1등급, 특히 심각단계에 있을 경우는 대개 심각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늦어진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프로세스가 저는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KISA의 신고가 늦어졌지요? 한 3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니면 사장님이 하실래요? 답변 누가 하실래요?

○증인 황태선 제가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여기 전사침해사고대책본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침해사고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대체 여기는 매뉴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등급인 경우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증인 황태선 소액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인지 시점, 9월 8일 15시에 했고 그 신고는 당일 날 19시 16분에 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늦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꼭 전사침해사고대책본부하고 사전 협의해서 신고하신 겁니까, 아니십니까?

○증인 황태선 전사협의체에서 사고를 같이 인지했고 4시간 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것도 내부 프로세스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만약 1등급이라면 심각 경보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1등급 심각 경보의 경우에 정보보안실이 전원 비상 출동했나요? 저는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황태선 예, 직책자 모두……

○최수진 위원 2시간 이내에 필수 인원, 1시간 내에 하계끔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부분정보보안관리자도 2시간 이내에 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매뉴얼대로 했는지가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실제 사고가 터졌을 때 고객한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여기 다 써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증인 황태선 ……

○최수진 위원 여기 읽어 드릴게요. 개인정보 유출 시 고객대응반은 고객통지문안을 최적화하여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지체 없이 72시간 내에 통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지하셨습니다? 통지 방법은 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수단으로 몇 시간 내에 하셨습니다?

○증인 황태선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고 문자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문자 통지 진짜 하셨습니까? 그리고……

○증인 황태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뒤에 배석한 임원이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수진 위원 아시는 분 아무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영걸 발언대에서 —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김영걸입니다. 문자 통지 다 했습니다.)

몇 시간 내에 하셨어요?

(○김영걸 발언대에서 — 문자 통지는 그때 침해 신고하고 11일 날 3시에 5561명에게 문자 통지도 했고 그 외에 그때까지 침해 신고가 안 된 1만 9000명에 대해서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며칠 지나고 했다고요, 사고 터지고 나서? 9월 언제요? 시점이 언제라고요?

(○김영걸 발언대에서 — 11일 3시에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됐고요. 72시간이잖아요. 사고가 8월 27일 날 터졌는데 9월 11일 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는 이유는 연락처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주객이 전도돼서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신고센터 언제 운영, 지금 오픈하셨나요?

있잖아요. 내가 매뉴얼이 많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폴랑 20페이지, 22페이지 갖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따 다시 또 여쭙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류제명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최수진 위원 이렇게 KT의 늦장 신고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기업은 당연히 문제지만 과기정통부도 똑같이 대처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안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신고가 접수가 돼도 실제로 과기정통부에서 공동조사 착수를 한 시점이 9월 9일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하루이틀 터진 것도 아니고, SK가 4월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터질 때마다 맨날 초보처럼 행동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리고 북한 해커그룹 김수기로 추정되는 KT 서버 사건이 지난 6월 28일 날 보도된 것도 있는 걸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9월 19일이나 조사에 착수하고. 그리고 펌토셀 이용한 KT 소액결제 사고가 8월부터 했는데도 말씀드린 대로 9월 9일에서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 일지, 지금 준비됐을까요? PPT 준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이어서 서버폐기 과정을 계속 짚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서버폐기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 일지 순서대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KT가 정보 침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더라도 계속 좀 짚겠습니다.

최초 KISA가 침해사실 확인하고 신고 안내를 한 게 7월 19일입니다. 이때부터 민관합동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간 KT가 두 단계에 걸쳐서 서버를 폐기했습니다. 1단계는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을 한 대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이에 6대를 폐기한 것인데요. 이때 최종 침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기 전에 벌써 폐기를 했다는 지적 아까 했습니다.

다음 2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랙 보고서가 8월 8일에 개인키 유출 현황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대표님, 이 프랙 보고서 당시에 인지하셨을까요, KT에서?

○**증인 김영섭** KT 실무진들은 정보보안실에서는 인지했고 저는 8월 8일, 8월 10일까지는 회사에……

○**이주희 위원** 정보보안실에서 인지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8월 11일에 과기정통부가 KT 기업의 자체조사 자료제출 요청했지요? 이미 이때 벌써 두 번째 지적이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법령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KT는 8월 11일에 이 과기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틀 뒤에 8월 13일 8대 중에 남은 2대 서버마저 폐기를 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증인 김영섭** 서버폐기 실제 의사결정 및 집행은 정보보안실에서 하고……

○**이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결사항인지 어떤지는 나중에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KISA가 제보를 받아서 KT에 사실확인 요청도 하고 과기부에서 직접 조사한, KT에서 조사한 자료까지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일, 이런 것 늘 있는 일인가요?

○증인 김영섭 늘 있는 일은 아니네요. 정말 이것도……

○이주희 위원 늘 있는 일 아니지요. 한 달 사이에 벌써 두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면, 게다가 프랙 보고서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공개까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보보안 관리자들이나 또는 KT 자체적으로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적어도 1단계에서 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2단계에서는 폐기를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영섭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계속……

○이주희 위원 대표님 지금 그렇게 생각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지금 KT에서 이 두 달 사이에 벌어졌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오면 제가 적용 법령을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상황만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파기 절차 어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 원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정보 보관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파기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다른 법령,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증거인멸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를 인멸할 때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범죄 정황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그 해당 물건은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식적인 일이 지금 KT에서 일어나지 않았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정말 저는 좀 의문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로그 문제입니다.

지금 8월 20일, 다시 돌아가 주실까요?

8월 22일에 KISA가 침해사고 관련해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조사 협조 요청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8월 25일부터 현장조사 진행 중이지요? 맞습니까?

○증인 김영섭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저희 과방위원들이 지난주에 KT를 방문하고 나서야 올해 5월부터 진행됐던 서버 전수조사 사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백업 로그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번 주 월요일 합동조사단에 백업 로그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출된 거 맞나요?

○증인 김영섭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떠들썩했던 SKT 유심 정보유출 사태 아시지요? 그래서 그때 대표님 지시로 서버 전수조사 일어난 거지요? 그렇게 진행된 거지요?

○증인 김영섭 예, 제가 그때 SKT 사태를 보고 뭐 이게 SKT만의 일이겠냐 해 가지고……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증인 김영섭 전부 다 실태 파악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업으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주희 위원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그러면 백업 로그가 존재했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 전문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연히 로그 없이 조사가 안 되고 로그 백업 자체가 필수인데 원칙적으로 지금 정보통신을 다루는 회사에서 이런 거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고 이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백업 로그를 발견한 것처럼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야 제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섭 저는 뭐 백업 로그 이런 것, 제가 IT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잘 몰라서 나중에 침해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좀 묻겠습니다.

제가 실태조사 당시에, 저희 현장조사 당시에 여쭙았는데 정보보안 업무 몇 년 하셨지요?

○증인 황태선 제가 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만 30년째입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수십 년간 정보통신 업무, 보안 업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비단 실장님뿐만 아니라 KT 내에는 이런 정보보안에 대해서 수십 년씩 종사한 전문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침해 확인 지적을 받고도 경각심도 없이 서버폐기를 두 차례나, 중간중간 정부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서버폐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백업 로그의 존재를—선의로 해석해도—모르고, 알았다면 이것은 더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제야 백업 로그가 있었다는 거 알았다 또는 이제야 제출하는 거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증인 황태선 ……

○이주희 위원 하실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황태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희 위원 예, 하시지요.

○증인 황태선 당초 사실은 제 지시로 인해서 8월 말 서비스 전환 계획이었던 것이 조금 당겨지는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안실에서 인지하기로는 이 VM 서버, 가상화 서버입니다. 가상화 서버가 서비스 전환, 8월 1일 자로 즉시 삭제되는 줄 알았는데 이 시스템 운영 부서에서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8월 1일, 8월 6일, 8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서버가 삭제되었다. VM 서버가 삭제된 건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의원실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이주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KT 해킹 사태의 핵심 경로로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펌토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적으로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코어망에 있는 관리 서버 그리고 통신을 통해서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게……

○이정현 위원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펌토셀이 해킹에 이용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증인 김영섭 지금 확실하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접속됐는지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KT 자체조사로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증인 김영섭 지금 KT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25만 6000여 대를 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펌토셀과 합법 펌토셀의 차이가 뭡니까?

○증인 김영섭 합법 펌토셀은 KT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합법 내지는 정상 관리 펌토셀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난 펌토셀은 불법이고 또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류제명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섭 대표가 말씀하신 합법과 불법 펌토셀의 차이가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KT가 관리하는 기기의 일련번호나 또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망에 접속된 것만이 합법적이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모두 불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기본적으로 전파법 제58조를 보면 전파 환경이라든지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적합성평가를 거쳐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펌토셀은 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펌토셀도 기본적으로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정현 위원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펌토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고시를 개정해서 펌토셀 규제를 완화했지요,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님? 그 내용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실은 이때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업무를 같이 담당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류제명 차관이 답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류제명 차관님 알고 계세요, 이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정현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규제완화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펌토셀 기지국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기지국으로 그 당시 분류를 한 게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규정, 규제완화한 것이 지금 돌아보면, 앞에서도 김승주 교수가 지적을 했었는데 규제완화와 함께 안전대책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모든 기본 통신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보안 기준이 적정한지를 모두 평가를 다시 해서 통신망이나 이용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은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현 위원**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젓이 유통되는 불법 통신기기 IMSI 캐처라고 하는 것, 류제명 차관님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어떤 장치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임시라고 하는 IMSI를 무단으로 캐치를 해서 통신에 특히 2G 같은, 지난 통신세대에서 통신을 감청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범죄 목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IMSI,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이것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치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리바바에 보면 저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7000만 원에서 한 1억 2000만 원대에 이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합법적인 기지국을 흉내내서 인근 모바일 장치들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통화라든지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을 가로채는 불법 통신장비인데 이게 버젓이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생각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중앙전파관리소가 불법 무선기기를 단속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이버라든지 쿠팡, 중고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알리바바

라든지 이런 해외 유통 과정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정현 위원 앞서 김승주 교수가 해커들의 보고서와 관련해서 정부가 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부분은—프랙 보고서를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정부 부분의 보안 침해사고는 국정원과 관계 부처가 따로 있어서 제가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CDR이라고 하는 것을 저하고 김승주 교수하고 아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콜 디테일 레코드,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통신했는지를 보여 주는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건 좀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지난번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있어서도 이 CDR이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CDR은 굉장히 중요한 통신의 기본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돼야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일부 CDR이 평문 형태로 일부, 전부 다 노출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위공직자라든지 군 지휘관, 외교 라인 이런 사람들의 CDR이 노출될 경우에 이게 정말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 제가 보안 인식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류제명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김장겸 위원 PPT 하나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께서 SKT 해킹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정부 발표 몇 개월 만에 이 KT 서버가 침해된 정황이 6건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자신만만했는데 왜 이렇게 또 KT 서버 침해 정황이 드러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신사의 서버는, 아까 금융 쪽에서 롯데카드가 한 7000대의 서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통신사들은 그것의 한 5배, 6배의 방대한 서버를 운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서버를 운영하는 분야가 될 텐데요.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가 된 BPF 도어라는 특정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가 전방위적으로 SKT의 모든 서버를 이 백신 프로그램과 EDR이라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하는 작업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 부분만 집중했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데 다만 KT하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같은 똑같은 강도로 그런 서버를 전수조사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SK텔레콤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검출 작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모든 서버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장겸 위원 조사에서 그 부분은 안 드러났다 이 말씀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겁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그거 자체가, 물론 KT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는데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기부 그리고 KISA의 역량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렇게 사고가 계속 나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해킹 방어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량이 뛰어난 곳은 국정원이지요. 그렇다고 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해킹의 방어와 공격, 여러 가지 기법상……

○김장겸 위원 그런데 그게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또 사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막 약간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민간기업이라도 과기정통부가 요청을 하면 국정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킹,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돼 있고……

○김장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 법은 아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간 분야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수집과 국민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 및 국가 배후의 테러조직, 해킹조직에 의한 것은 국정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국제 및 국가 배후의 해킹조직 등에 의한 것들은 국정원하고도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요. 그런 법적인 충돌 문제나 또 정치적인 여러 우려가 없다면 전체적인 역량을 다 모아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장겸 위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KT 관련해서 KT가, 지난번에 SKT 위약금 문제로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도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위약금 면제하는 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면제해야 된다 이런 게 팽팽하다가 지난 7월 3일 대통령이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다음 날 과기부가 SKT 해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약금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SKT에서 KT로 넘어왔고 KT로 넘어온 분이 이번에 또 당했고 또 당한 분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옮기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됩니까, 위약금 같은 문제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난번에 저희가 위약금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저희가 조사 결과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로 이런 안전한 통신제공의 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좀 결과를 밝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섭 대표님.

○**증인 김영섭** 예.

○**김장겸 위원** PPT 11번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KT 보안부가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알람이 부가서비스인데 KT 앱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이게 KISA하고 KT가 공동으로 대처한다, 무료 부가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가입 신청을 저희 의원실에서 해 봤습니다. 바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료됐다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종료가 됐다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증인 김영섭**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참 어처구니없는……

○**김장겸 위원** 그러면 KISA 원장님, 이것 언제 종료됐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제가 이것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료가 됐는데 지금 가입하면……

○**위원장대리 김현**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질의 마무리하게요.

잘 안 들리니까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7년 전에 종료가 됐는데…… 김영섭 대표님, 그런데 지금 가입하면 가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의원실에서 해 보니까, 직접 보좌진이 한번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7년 전에 종료가 된 서비스를 지금 가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 4월 SKT 해킹사고 때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안내까지 했다고 그래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김영섭 대표님.

○증인 김영섭 예.

○김장겸 위원 조직을 진짜 한번 다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김영섭 저도 조직의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일정 수준, 건전한 수준으로 높이고 하는 방안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지금 차관이 답변한 내용 중에 혼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2025년 1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전에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2024년 8월에 만들어졌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현 2024년 8월에 만들어지고 2025년 1월 달에 보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위기 실무매뉴얼은 그대로 다 가져온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현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아까 얘기했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매뉴얼하고 상충이 되면 그러면 매뉴얼을 무시하고 법으로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제가 좀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저희가 주무 부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이버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정원이 제정한 매뉴얼인데 정보통신 분야……

○위원장대리 김현 아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위기……

○위원장대리 김현 그러면 사이버 분야에 위기가 발생하면 민간 영역을 포함해서 사이버, 국가·공공기관 포함해서 민간 영역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그런데 민간 영역은 국정원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융보안원 원장님 계시지요, 이 자리에? 가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까 오전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카드는 이번에 사건 발생하자마자 국정원의 조력을 받아서 해커의 침범 사유를 확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KT는 지금 국가전략자산 아닙니까? 롯데카드보다 훨씬 더, KT가 7개 범위가 있고 지난번에 SK 할 때도 4개가 있고 그 분야가 빠져 있어서 국가자산이 아니어서 회의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다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

까, 지난번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의 구분을 칸막이를 딱 쳐 놓고 대응을 제대로 못 한 이유를 법률 소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지난번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요? 오전에도 얘기했고 지난 2025년 5월 달에 그 큰 파동이 벌어졌을 때 과기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작동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약속을 하신 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왜 도돌이로 지난 2025년 5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2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아까 김장겸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김현 김장겸 위원의 질문에 틀린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는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나.....

○위원장대리 김현 민관합동조사단 얘기하는 게 아닌 것 아니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과장 선에서 회의를 하고 국장까지 올라가서 차관까지 올라가는 그런 체계를 이미 매뉴얼에 다 소상히 만들어 놔는데 차관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제 말씀은.....

○위원장대리 김현 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김영섭 대표님, 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의문입니다.

아까 관리 부실 이야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타사처럼 KT에서도 미사용 펌토셀에 대한 자동적인 차단 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지요. 설치부터 인증 과정, 미사용 펌토셀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가 담긴 펌토셀 운용 매뉴얼을 달라고 KT에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매뉴얼에 의거해서 관리 중이래요. 매뉴얼을 달라고 했더니 매뉴얼에 의거해서 관리 중이다.....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가져온 게 이거예요. 이걸데, 이게 뭐냐 하면 맥내형 철거 표준운용 매뉴얼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필요용품, 전동드릴, 전지가위, 절연장갑, 니퍼, 안전화..... 진짜 필요한 펌토셀 운용 매뉴얼은 어차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시다. 수십만 대 장비 운용하면서 기본적인 운용 매뉴얼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긴장감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고요. 이것은 대표 이하 임원급들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저는 직원들이 불쌍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녹장 신고하고 피해보상 조건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IMEI 유출된, 아까 전에 답을 못 하셨어요. IMEI 유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기변경 하실 겁니까?

○증인 김영섭 검토해서……

○이해민 위원 검토요?

○증인 김영섭 예.

○이해민 위원 IMEI 유출 대상에 대해서 기기변경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증인 김영섭 수사 결과 보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해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제가 기기변경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KT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하실 거면 저는 SKT 사태 때처럼 위약금 면제 검토 과기정통부에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설상가상 제가 되게 불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KT는 위기관리센터 포함해서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나 유사시, 재난 시 사용될 국가지도통신망 같이 국가 주요 통신인프라 사업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증인 김영섭 예.

○이해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김영섭 대표는 사퇴 안 하면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보안 인식으로는 큰일 나요. 대통령실 통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맡깁니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 여야 할 것 없이 과방위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것은 제가 좀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액결제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번에 KT 해킹 사건 관련해서 피해 일어난 걸 보면 건당 평균 60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해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소액결제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이걸, 정확한 이름은 사실 이통사 과금시스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저 KT 씁니다—한도액이 100만 원이에요.

차관님, 100만 원이 소액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소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해민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KT 대표님, 대표님께는 60만 원이 소액입니까?

○증인 김영섭 소액이라고 하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커가 빼 가면서 한도를 늘리면서까지 빼 갔다고요.

이번 해킹 시나리오 중 한도 늘릴 때 사용자 동의 받고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KT 대표님?

○증인 김영섭 사용자가 한도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니요, 사용자 동의 받고 늘리게 돼 있냐고요?

○**증인 김영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요.

먼저 이것 관련돼서요 차관님, 한도 규제 관련해서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안을 과기정통부가 조금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액이 소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통 3사 아직 게시지요? KT 포함해서 사용자가 한도에 대해 그리고 변경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UX 바꿔 주세요. KT·SKT·LG유플러스, 이것 변경 내용 의원실로 국감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남아서요.

KT 대표님의 오전 질의를 보다가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고 계세요. 그중에 좀 심각한 것 하나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도 그러시고 여야 할 것 없이 KT의 기업문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기정통부 출신, 검사 출신 그런 낙하산 이슈 말고도요. 사실 기업문화라는 게 사람이거든요.

KT는 작년 10월 AICT로의 전환을 이유로 해서 저임금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직 인력들을 전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제가 받은 제보만 해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6명이 사망합니다.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며 자괴감이 들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몰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업무 분위기,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문인력 감소하고 경직된 사내문화, 저는 이것도 보안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KT 대표님은 이번 해킹 문제 말고도 직원의 연이은 사망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퇴하시라는 소리예요.

KT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영섭 대표는 버티기로 보이세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 보여 주신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KT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롯데카드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 해킹 사건 관련해서 지난번 SKT 때처럼 피싱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피싱문자로 인한 피해, 책임지고 단속하셔야 합니다. 이거 예산에도 반영해 드렸잖아요. 방통위에서 이거 관리 부실로 나타나면 국감에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까 이걸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 황태선 실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시고요.

김영섭 대표님, 구형 원격상담서버 해킹 의심 인지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영섭** 저는 8월 11일 오전쯤에 정보보안실장으로부터 프랙 보고서 이런 내용

하고 침해사실 흔적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 보고를 받으면 ‘침해 의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과기정통부와 KISA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임하라’ 이런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덮고 맙니까?

○**증인 김영섭** 그때 보고서에 침해 흔적이, 어쨌든 통보 온 것을 자체조사를 면밀히 한 결과, 확인 결과 침해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가……

○**김우영 위원** 그래서 서버폐기를 지시하셨나요?

○**증인 김영섭** 서버폐기 같은 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7월 19일 날 최초 의심 인지하셨잖아요?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8월 6일 날 2대 폐기하고 8월 11일 날 과기부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12~13일까지 6대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해킹 의심된다고 정보 당국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고 보존하고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무 부서에서 저것 폐기했다고 하셨지요?

○**증인 황태선** 경과 사항을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우영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서버폐기는 본인과 무관하다,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증인 황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건 본인의 지시입니까?

○**증인 황태선** 제가 서비스 조기종료 검토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제가 그때 현장 가서 방문했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8월 11일 날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고……

저 매뉴얼을 한번 봅시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조직이고 대응TF장이 실장님이고 실장님 위에 대표 단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위기관리위원회 있고.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실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대응 총괄 지휘 및 대내외 보고예요. 대외라고 하면 KISA나 정부를 얘기하겠고 대내는 대표를 말해요. 대표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다음 장.

유출사고 대응TF장은 유출사고 발생에 대하여 대표(CEO)에게 보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행정행위든 일반적인 회사의 일이든 간에 보고를 하면 결재권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명령 하달을 합니다. 이런 서버에 대한 침해사고가 있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국에 협조하고 정확하게 그 사안의 근원적 문제를 찾을 때까지 협조하라.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당연히 대표가 지시를 해야 돼요. 지시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대표님, 서버 폐기 지시했어요?

○증인 김영섭 8월 10일 날 제가 보고받을 때는 7월 22일 그때 이미 자체 확인을 하고 확인상 전혀 침해 흔적이 없다……

○김우영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ISA가 8월 11일 날 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왔잖아요. 그 사항은 보고받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섭 아닙니다.

○김우영 위원 정부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료제출 요구합니까?

○증인 김영섭 제가 보고받을 때는……

○김우영 위원 보안사고의 의심이 있고 이게 중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직후에 서버를 폐기해요, 그 전날 대표한테 보고가 올라가고. 그러면 대표는 보고만 받고 가만히 있었다치고.

실장님, 본인이 지시해서 폐기했습니까?

○증인 황태선 제가 서비스 조기 검토 요청을 한 것은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그것을 멸실시키려고 했어요?

○증인 황태선 그것은 명백한 제 판단ミス였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 판단 미스의 동기가 상급자의 지시 없이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지금 대표님이 실장님을 임명하신 거지요? 언제 임명받았어요?

○증인 황태선 24년 5월입니다.

○김우영 위원 대표님 취임 이후지요?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하급자로서 대표의 안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증인 황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 제가 봤을 때 김영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비서실장 두 사람, 그런 사람들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고 내란의 뿌리인 정치검찰 이런 사람들이 다 KT 내부에 둘러싸고 앉아 가지고 지금 김영섭 체제 구하기, 거기의 희생양으로 지금 실장이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대표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대표는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의 주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보통신망법에 돼 있는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온 결과는 서버의 삭제·폐기예요, 이건 중대한 증거인멸이고. 그걸 실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감당하겠다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인 황태선 저희가 그때 판단하기로는 침해 의심이 있었습니다. 침해 흔적이 발견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외부 업체하고 저희……

○김우영 위원 수사든 해킹에 대한 조사든 간에 모든 것은 의심되는 단서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KISA나 과기부, 정보 당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정보를 줍니까? 그리고 거기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조사해서 정보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고 그러려고 정보보안실장의

역할을 하는데 대표가……

○위원장대리 김현 1분만 더 넣어 주세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대표님, PASS 약정, 책임한계 관련 조항을 왜 삭제했어요? 배상 한계, 그것 9월 15일 날 삭제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영섭 제가 그것을 나중에 실무 담당 상무한테 확인해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KT만 삭제한 게 아니고 통신 3사가 전부 다 공통 문안을 같이 올렸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건 천만의 말씀이시고요. 9월 15일은 이 사건에 대한 폐기, 서버폐기에 대한 확인이 되는 시점이에요, 9월 15일, 9월 18일. 그때 왜 하필이면 배상책임과 관련된 면제조항을 삭제를 합니까?

이거는 명백히 회사의 대표가 주권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본인에게 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영섭 일병 구하기 조치로 지금 전 사가 나서 가지고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랑곳없고 엄연한 애꿎은 실장한테만 책임 뒤집어씌우고……

실장님은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현 정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황태선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조사 갔을 때 정보보안 업무를 한 지 30년……

○증인 황태선 예, 올해로 30년……

○위원장대리 김현 30년이고 KT에만 계셨던 겁니까?

○증인 황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보안……

○위원장대리 김현 여러 어디어디 경유해서……

○증인 황태선 신입은 LG EDS에서 시작했고 HP코리아, 여러 보안 벤처기업을 거치다가 KT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그렇지요. 그러면 보안 업무만 30년 하셨잖아요?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CEO한테 처음부터 보고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보고를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증인 황태선 소액결제 관련된 건은 분명히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현 270만 명이 연루돼 있는 건입니다.

○증인 황태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CEO……

○위원장대리 김현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보고가 다 된 거지요?

○증인 황태선 예, 소액결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 소액결제가 아니라 8월 초부터, 이 문제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IT 분

야를 잘 모르는 김영섭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 KT 사장님,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유출하고 침해의 차이가 뭐니까?

○증인 김영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출은 우리 정보가 어쨌든 여러 가지 수단 또는 방법에 의해서 나간 거고, 어쨌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밖의 어떤 목적으로 우리 중요한 정보 또는 망에 들어온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충권 위원 하여튼 유출됐는데, 유출하고 침해 차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은 됐는데 어떤 피해 사례가 없었나……

○증인 김영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 사례는 없어도 침해가 확인되면 그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북한의 해커조직인 김수키가 KT의 인증서를 탈취했다고 하는 것은 유출입니까, 침해입니까?

○증인 김영섭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런데 KT는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말씀 바꾸시는 겁니까? 원래 KT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KT가 서버를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KT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KISA가 지난 7월 19일에 최초로 KT에 해킹 정황이 있다라고 통보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하고 나서 침해사실이 없어서 보고를 안 했고 그리고 KISA에서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없어서 서버를 폐기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서는 침해라고 얘기하시고 또 KT 측 답변을 보게 되면 KISA가 해킹 정황이 있어서 KT에 얘기를 했더니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침해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안 했고 그리고 KISA에서 추가 요청이 없어서 서버를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증인 김영섭 그때 제가 알기로는 KISA에서 연락 온 것은 침해의 정황 이런 얘기를 정보보안실에서 받았다고. 그래서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침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래 가지고 아마 침해 흔적이 없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9월 20일 날 우리 의원실에 답변을 한 것은, 이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김영섭 의원님 실에 보고한 내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박충권 위원 그러면 KISA의 권고, 그러니까 해킹 정황이 있었다라는 권고를 받고 나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뭐니까? 침해였는데, 침해사실이 있었는데 왜……

○증인 김영섭 침해였다가 아니고 아까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침해 확인을 해 보니까 침해 흔적이 없어서 침해가 된 게 아니구나, ‘침해 흔적이 없음’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방금은 침해라고 하셨는데 또 침해 흔적이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인 김영섭 침해 정황이 있다고 연락을 받고 조사를 해 보니까 침해 흔적이 없어서 그래서 침해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영섭 예, 인증서하고 인증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유출하고 침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출된 것은 침해가 아닙니까, 인증키가 유출된 것은?

○증인 김영섭 그때에 그렇게 판단한 내용은 정보보안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정보보안실장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증인 황태선 저희가 7월 22일에 KISA에 회신했을 때 침해 흔적이 없다고 회신한 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한 기준은, 저희가 외부 용역업체하고 원격상담서비스에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 팀에 의해서 2차 점검을 하였고 그때 조사 결과가 침해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외부 업체에서는 침해 의심은 있다, 의심 건수 하나는 무엇이나 하면 미사용 계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 내부에서 이걸 확인했을 때 원격상담서비스를 최초 만들 때 만들어진 계정인데 그때 운영 부서가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의심 정황은 남겨야 된다고 해 가지고 계속 흘러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 자신도 이 부분이 침해…… 이 인증서가 외부에서 발견된 건 분명한데……

○박충권 위원 아니,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침해 흔적이 없지만 인증서가 유출이 됐고 해킹 정황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유일한 증거인 서버를 폐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KISA의,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박충권 위원 KISA는 왜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KISA는 왜 대응을 이렇게 했냐고요. KT에 추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증거들을 보존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일단 저희들은 신고를 받고 동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박충권 위원 그러면 지금 KT가 침해 흔적이 없기 때문에 KISA에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랬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얘기가 없으니 서버를 폐기했다, 이것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증인 황태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KISA……

○박충권 위원 의도적으로 이렇게 KISA와의 연계를 끊고 증거를 인멸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황태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판단 착오했습니다. KISA 쪽에다가 사실 이것을 한번 판단을 물었어야 됐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서비스

전환이 일어나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킹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기업 하나에만 맡겨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수많은 개인정보들……

과거에 KT는 2012년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개인정보들이 해킹당해서 유출됐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지요. 증거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킹 정황이 있었는데 KISA에서는 적어도 증거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9월 15일 날 우리가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서버가 백업됐다는 것을.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킹 흔적이 정말 중대한 해킹 흔적이라도 발견이 되게 된다면 고의적인 증거인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이것 상임위 차원에서 정말 엄격하게 따져 보고 고발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대응도 이렇게 기업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KT도 처음이 아니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SKT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터진 지 지금 불과 몇 개월입니까?

이것 대책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류제명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런 활동이 가능하게 된 현재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만 앞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통신 3사한테는 저희가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면 바로 검증위원회의 판단을 구해서 바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통신 3사의 동의는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부터는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황만으로도 정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과기부도 업무 과중이 걸릴 것 같고 기업에서도 직권조사를 받게 되면 업무 마비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실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것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판단 결과를 무조건 통신사업자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아시겠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들의…… 대한민국의 일평균 해킹 시도 건수가 160만 회를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 있을 때

마다 직권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일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시적인 의견 교류를 한…… 그런 거르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정부로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런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박충권 위원 추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자료 요청도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릴게요.

○김현 위원 지금 차관께서, 제가 분명히 아까 법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확인시켜 드렸는데 왜 또 박충권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차관님.

차관님이 차관을 처음 해서 지금 법 때문에 이것 직권조사를 못 한다고 하지만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들, 과장, 국장 그다음에 유관기관 간의 그런 회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매뉴얼이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전시키는 차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경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건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나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를 뒤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런 매뉴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안보실이나 국정원에 위기경보 상향 등을 건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보통신망법상 신고를 기반으로 구성해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취지예요, 우리 다 알아서.

제가 법 발의한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법까지 발의했는데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런 위기 사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김현 간사가 지적한 대로 하기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안보실에 보고하고 국정원과 협의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이런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제일 먼저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번에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했습니다. 즉시 공유가……

○위원장 최민희 며칠날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침해사고를 받으면 바로 국사단에 통보하는 절차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답하세요.

김현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신속성인데 신속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알아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황태선 실장님, 질문이 실장님께 물려서 질문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책임은—할 수 없습니다—인정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면 그건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책임을 조직의 논리로 또는 다른 이유로 짊어지시는 것만은 꼭 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건 참 견디기 힘들 거예요,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서버 파괴와 관련해서 외부 업체의 의견은 미사용 계정에서 의심 정황 1건이 있다는 거였고요. 미사용 계정으로 뚫린 게 이번 롯데카드 사건이에요. 그것에 계속 찢찢했다고 하셨어요.

외부 업체의 이러한 의견을 김영섭 대표에게 보고했습니까?

○증인 황태선 원격상담시스템 관련……

○노종면 위원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황태선 보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증인 황태선 그때 당시……

○노종면 위원 본인이 이와 관련된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정황이고 찢찢한 수준이니까 보고 안 하신 건가요?

○증인 황태선 ……

○노종면 위원 하여튼 보고는 안 했다?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KISA에도 안 알렸고?

○증인 황태선 KISA에는 침해 정황이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예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본인 책임으로 지금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의심 정황을 CEO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KISA에도 알리지 않은 점, 이것 다 본인 책임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서비스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쪼뼛쪼뼛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조기 종료를 판단하신 거지요?

○증인 황태선 예, 유출 정황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서비스 진행하다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더 찾거나 증거를 보전하거나 이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해되실 거고.

서비스 조기 종료를 지시한 겁니까, 요청한 겁니까?

○증인 황태선 정확히는 요청하였습니다.

○노종면 위원 요청을 했더라는 것은 서버폐기를 전제하고 요청하신 거예요? 이 요청을 수용하면 서버는 폐기되는 겁니까?

○증인 황태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서버가 폐기됨을 알고도 관련 부서에 요청한 거예요?

○증인 황태선 예, 해당 서버는 VM서버라 해서……

○노종면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데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서비스 조기 종료 요청을 받아들이면 서버가 폐기됨을 알고도 그 요청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됐고 그리고 이 상황을 CEO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증인 황태선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본인이 그렇게 다 한 거예요, 보고 없이?

○증인 황태선 대표님께는 보고하지 않았고 제가 서비스 조기 전환 검토 요청은 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누가 이 요청을 수용한 겁니까? 수용한 책임자가 누구예요?

○증인 황태선 여기에는 사업 부서하고 실제……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회사 사람인데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이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증인 황태선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실무 또는 임원까지는……

○노종면 위원 대표님, 이 해당 서비스 종료하는 실무 책임자 누구예요?

○증인 김영섭 C 부문, 사업 부문의 신 무슨 상무……

○증인 황태선 신영준 상무.

○증인 김영섭 신영준 상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증인 김영섭 오늘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서비스가 조기 종료되면 서버는 폐기되고 이 서버가 폐기되면 백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당시에 몰랐더라도 사후에 그렇게 확인됐어요?

○**증인 황태선** 거기까지도 확인 못 하였습니다.

○**노종면 위원** 증거인멸이 맞네요, 그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서 KT가 9월 1일 광명경찰서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상황을 통지받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접수 안 하고 부서들, 지사들 뺑뺑이 돌려서 대응이 늦어졌다. 결국 KT는 9월 5일에야 의심 가는 비정상 결제의 차단조치를 취했다. 대표님, 아시지요?

○**증인 김영섭** 예.

○**노종면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소액결제 피해, 이 피해 건수가 전체 소액결제 피해 건수의 3분의 2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증인 김영섭** 예.

○**노종면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일 양이 많아서, 대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뺑뺑이 돌리는 바람에, 회사가 회사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안 하는 바람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막았어야 하는 그 추가 피해를 못 막은 거예요. 이래 놓고도 사후에 KISA에 누장 보고했지요? 그 보고가 또 허위였지요? 그런데 이게 은폐·축소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김영섭 대표고. 부인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실 겁니다, 못 하셔야 되고요.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유출된 IMSI·IMEI 건수가 2만여 건이라고 KT도 인정하고 있어요. 더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주로 어떤 서비스 가입자가 이런 유출 사고를 당했을 피해자입니까?

○**증인 김영섭** 소액결제 서비스……

○**노종면 위원** 아니요, 2만여 건이요. 어떤 가입자예요, 어떤 서비스 가입자예요? 3G예요, LTE예요, 5G예요?

○**증인 김영섭** 5G·LTE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추가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저 기사 보십시오. 이게 9월 11일 자 김영섭 대표님 휘하의 실무 본부장이 발표한 거예요, ‘IMSI 유출 전부 다 LTE다’. 언론들이 일제히 다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김영섭 대표님이 알고 계신 대로 5G 가입자가 소액결제 피해의 95%로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9월 11일에 실무 본부장이 저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노종면 위원**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KT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신호체계에 관한 발표였다. 그때 5G가 펌토셀에 접속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신호가 LTE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9월 11일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보도가 저렇게 돼서 5G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심여 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

KT는 가만히 있었어요.

김영섭 대표는 5G 피해자가 있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증인 김영섭 근자에 알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5G는 5G로 통신을 하다가 5G가 약하게 되면 LTE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데, 5G 가입자가 LTE로 연결되는 건데 불법 펌토셀은 전부 다 LTE·4G에만 연동하도록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보고드리는 거였다고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저 보고를 한 배석자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세한 사항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종면 위원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답은 좀 들어 볼까요?

○노종면 위원 아니요,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더 주시면 지금 하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김영섭 대표님, 아까 사과했나요? 오늘 사과했습니까, 국회에 와서?

○증인 김영섭 예, 사과드렸습니다.

○이훈기 위원 누구한테 사과했지요?

○증인 김영섭 국민과 그다음에 고객과 그다음에 유관기관 고생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합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훈기 위원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한 거예요?

○증인 김영섭 진심입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KT는 이런 사고가 났는데 마케팅,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어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입자 이탈 막자, 보조금 보따리 푼 KT’, ‘해킹 숨기고 보조금 살포, KT 가입자 장사에만 몰두’ 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번. 9월 19일 날 가입자가 1328명이 줄었어요. 그랬다가 이런 마케팅을 하고 20일 날 689명이 늘었어요, 22일 날 339명이 늘고. 저게 아이폰17 출시되고 저렇게 한 거예요. 타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고 있어요. SKT는 사고가 나고 그때……

그리고 지금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KT가 기준 요금제를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만 원 낮춰 가지고 SKT하고 LG유플러스보다 더 경쟁력 있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일 오후부터는 보조금을 최대 101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이라고 있어요, KT가. 지금 이럴 때예요?

사장님, 대표님, 지금 이럴 때예요, KT가?

○증인 김영섭 제가 말씀드리……

○이훈기 위원 아니, 됐어요.

SKT는 그때 사고 나고 50일간 신규 가입 중단했어요. 과기부에서 행정지도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50일간 가입 중단해서 79만 명이 이탈했어요. 그 반사이익으로 KT는 그때 35만 명이 증가했어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KT는 이런 사고를 내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가입자 유치하는 게, 아까 사과를 진심에서 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에요? 기업, 도덕적으로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SKT도 오늘…… SKT는 뭐예요, 그러면?

○증인 김영섭 제가 SKT 사태가 발생했을 때 KT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하고 그랬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지금 어디보다도 보조금 많이 살포하고 이려고 있잖아요, 가입자 줄까 봐. 반성하고 고객 입장에서 뭘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규 가입자 중단해야지요, 이럴 땐. 그리고 SKT는 정보유출이 많이 났지만 피해는 확인이 안 났어요, 사실은. 아까 사과한 것을 누가 믿겠어요, 국민들이, 가입자들이? 진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KT가 이렇게 하는 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에요.

한번 보시지요.

KT가 2012년에 873만 명 정보유출됐어요. 과징금 7.5억 내고 끝났어요. 2014년에 1200만 명 정보유출. 이때도 과징금 7000만 원밖에 안 냈고 심지어는 이후에 일부 취소됐어요.

다음 PPT 볼게요.

SKT 이번에 과징금 1348억 원 부과했어요. 이것 매출액의 1%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번에 SKT 사태가 커서 법적으로 매출액의 3%인 최대 3000억 이상 맞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348억 맞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KT는 2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피해는 아직 확인이 안 났어요. 이 정보를 갖고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KT는 피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SKT에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 KT는 과징금 한 3000억은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3000억?

KT 매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증인 김영섭 KT 매출액은 약 20조 돼 갑니다.

○이훈기 위원 매출액의 3%면 6조 6000억이에요. 최대 3%, 매출액의 3%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6000억 과징금 먹어야 돼요. 각오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정도 각오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과징금은 그것을 결정하는, 조사해서 결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다음 PPT 볼게요.

제가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일 경우에 지금 매출액의 3%인 것을 4%로 1%p 상향 조정하고 해킹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대정부질문 때 총리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도 그렇고 정부도 해킹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한다고 하셨고 구체적 법안 들어갈 때 의견을 내신다 그랬는데……

이게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신 3사들 되게 해이해져 있어요.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보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서 통신 3사들이 정말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과기부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IT 보안의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들을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그런 징벌적 과징금도 검토해 볼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KISA 원장님, KISA는 지금 SKT 사태가 나고 KT나 계속…… KISA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몰라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국민들이 안전하게……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이버보안을 책임지고……

○이훈기 위원 해킹 및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아니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 KISA 예산이 얼마예요, 1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이훈기 위원 3000억 중에 65%를 지금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지금 우리 침해대응본부에는 한……

○이훈기 위원 그런데 KISA가 이런 큰 사고가 계속 났는데 한 역할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은 저희들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지금 원인 분석이나 피해 복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하시니까.

검찰 5급 사무관 하다 갑자기 차관급 원장 되셨지요? 윤석열의 사람이지요, 이상중 원장은? 여기에 김영섭 KT 대표는 김건희 사람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제가 2017년도에 공무원 퇴직했습니다. 그 후에 저도 나름대로 사이버 쪽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온 분들이 다 망쳐 놓고 있어요, 지금.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국민들이 오늘 이 청문회 지켜보면서 무슨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거 큰일났구나,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절망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벌써 KT 불법기지국 켐토셀은 KISA에서 13년 전부터 보안 취약을 지적했는데도 그냥……

이미 KT 해킹했던 가짜기지국은 중국 온라인에서 대놓고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KISA가 해킹 정황을 전달했는데 KT는 침해 정황 없다고 회신하고, 그래 가지고 그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최초 발생하고.

해킹 전문지 프랙이 개인정보 탈취를 해외에서 발표를 하지요. 이 사람들은 아까 김승주 교수께서 점심시간 직전에 발제하시던 것처럼 외국에서 해커들을 해킹해 가지고 알아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정부기구라든가 우리 내부에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8월 10일 날 과기정통부가 해킹 의혹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또 KISA가 침해사고 신청을 요구하고, 9월 2일 날 급기야 경찰이 연쇄 소액결제 피해 발생을 안내하고 9월 2일 날 과기정통부가 KT에 신고를 권유했으나 거부했다 그러고, 9월 8일 날 KISA에 침해사고가 신고되고 9월 9일 날 비로소 과기정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아까 김승주 교수가 3축체계 언급했지요? 인텔리전스부터 신속대응·공조·공유 이런 것들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 여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거 쪽 보면 전혀 그게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과기정통부만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과기정통부도 뭐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닐 테고, 김현 간사께서 매뉴얼이 있다 했는데 매뉴얼대로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청문회만 끝나면 대충 뭐 이전에 그런 것처럼 또 유야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걸로 해서 SKT가 지금 수천억의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승주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기업에게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경고가 가야 돼요.

DBIR(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같은 미국의 버라이존이나 AT&T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번 당해 봐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무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실수를 공유해서 스스로 고치려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과징금 같은 걸 감면해 준다는가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겠지만……

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나와 있으니까.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아시지요? 이게 뭐 정말 파이프라인이 돼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가시적인 위기상황이니까 국가적 기반시설 위협으로 판단되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안보실이 바로 개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개입 여부를 판단합니까? 이게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국가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개입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지금 저 매뉴얼, 아까 김현 간사님이 말씀해주신 정보통신 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이런 데에 따라서 저희가……

○최형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영국에 NHS(국민건강보험) 워너크라이(WannaCry)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국민보호, 서비스유지, 최우선 대응 체제로 발동했는데 만일 이런 것들이, 지금은 랜섬웨어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막 침투해 가지고 잠복해 있습니다. 일정한 순간에 의료·교통·전력

분야에서 유사한 사태가 나면 위기대응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

○최형두 위원 걱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공식 표준절차, 인시던트 리스폰스 플레이북(Incident Response Playbook)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정부도 이런 게 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저희가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대응매뉴얼들에 따라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왜 내가 보면 KT 사안이 발생했는데 위기가 여러 군데서 감지됐는데 비로소 KISA에 뵙니까, 침해사고 신고되고 KT가 이제 트래픽 차단하고……

지금 6월 26일부터, 7월 19일부터 계속 여러 정황이 있는데 대응이 늦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3축체계에서 첫 번째 첩보(intelligence),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공유되고 가동되는 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늘 걱정하듯이, 제가 우리 차관님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련 부서들이 이것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평소의 대비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결국에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합 컨트롤타워, 미국의 CISA, 그다음에 유럽의 ENISA 같은 국가 단위의 통합된 사이버 대응체계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민관협력과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가 함께 총괄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시스템은 그게 좀 미흡한 게 사실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보라고 하신 것과 함께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상 사이버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최형두 위원 그만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최형두 위원 그렇게 띄웠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고 곳곳에 터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아까 보고 시점……

○최형두 위원 들으세요. 나중에 발표할 때 하시고.

그리고 또 분산된 보안체계의 통합 관리도 심각합니다.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뉘는 칸막이식 대응체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도 있고 그런데 주무 부처의 조율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위협은 초국가적이고 초산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원화된 관리감독부지요, 이게 총체적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안 인력 양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 보안 담당자 중에 겸업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63%, 64%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도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사이버보안 인재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만 이 보안 분야의 인재 양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일 텐데…… 그냥 뭐 이게 KISA에서 벌써 13년 전부터 KT에 펌토셀에 좀 문제가 있다, 펌토셀이 보안에 취약하다 이러면 그때부터 좀 대비도 하고 해야 되고.

6월 26일 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가동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ISA가 해킹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신속하게 정부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전혀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이 체제, 이 사실. 이 사실부터 정부가 새로운, 아까 김승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축체계에 따른 통합적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아까 통보 시간 확인을 못 해 드렸는데요.

○위원장 최민희 예, 그거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서 KT가 KISA에 신고한 게 9월 8일 19시 16분이고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 본 게 2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사단에 통보한 거는 다음 날 익일 9월 9일 05시에 저희가 국사단에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인재입니다, 이번 일이. 그래서 보안성이 취약한 문제도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KT의 통신 인력……

PPT 안 띄우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신 인력의 구조조정과 인프라 관리 취약한 점, KT에서요.

인원을 많이 감축하셨지요, 김영섭 KT 대표님?

○증인 김영섭 예.

○김현 위원 얼마나 감축하셨어요?

○증인 김영섭 희망퇴직자까지 합하면……

○김현 위원 30% 인력 감축하셨지요? 이걸로 연임하려고 그러셨지요? 이런 거 실적으로 해서.

○증인 김영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들 많이 배치시켜서, 검사·과기부 출신들 많이 배치해서 로비 창구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KT 구축형 서버 조기 폐기 이런 거 하셔서 증거인멸하셨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IT 분야의 비전문가인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인재다라는 거고요.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 지켜보셨지요? 지켜보셨지요?

○**증인 김영섭** 그때 제가 잠자고 있어 가지고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 위원**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김영섭 대표의 입장은 뭐니까?

○**증인 김영섭** 제 개인적 입장은 말씀……

○**김현 위원** 왜 개인적 입장이 없습니까?

○**증인 김영섭** 개인적 입장은 있습니다.

○**김현 위원** 개인적 입장 얘기하십시오, 대표로서.

○**증인 김영섭** 뭐, 정말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잘못된 일이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의 잘못된 일이잖아요. 맞지요?

○**증인 김영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추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영섭 대표를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김영섭** 저의 KT 대표 선임은 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짓으로 들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기부의 능장·미온적 대처…… 앞서 제가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느냐라고 물어봤고 받은 바에 따르면 9월 10일 날 긴급 간담회를 했는데 이거는 통신 3사 회의 개최한 거, 차관께서.

그다음에 정보보호 근본혁신 TF 발족식을 했고 총리 주재 회의 9월 22일 한 것 말고는 앞서 얘기했던 사이버위기대응 평가회의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지요? 그다음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5년 7월 달에 단 한 차례 했고 그 뒤에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 미가동했어요.

이게 조사 권한이 없어서 대응 못 했다는 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2차관께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된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다음에 KISA의 허술한 위기 대응. KISA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가짜기지국과 관련된 공격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고…… 이런 회의 진행된 건 아시지요? 모릅니까, 싱가포르에서 이런 회의가 진행된 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갔을 거 아닙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해당 단에서……

○**김현 위원** 여기에 갔을 거 아닙니까, KISA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김현 위원** 이렇듯 가는 사람 따로, 대응 따로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인사의 무능력함이 KISA 안에도 만연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KISA 대표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겁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저는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김현 위원** 이렇게 허술한 대응을 해서 제대로 대처 못 하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을 겁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김현 위원** 거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자리가 아니에요.

KISA 대표로서 지금 벌어진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라, 위기관리에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판단과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신고 들어온 즉시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즉시 프로세스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오전부터 나와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원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김현 위원** 그런데 왜 국가와 민족입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왜 국가와 민족입니까, 거기에? 어느 국가하고 어느 민족입니까, 지금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KT 대표님.

○**증인 김영섭** 예.

○**김현 위원** 앞서 누가 임명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언론보도 안 보시나요?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1대 주주가 현대자동차로 변경될 때 본인은 시장에서 팔았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증인 김영섭** 예, 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지금 KT 최대주주 현대자동차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임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이사회에서 했으니까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증인 김영섭** 저희들 이사회는 8명의 사외이사가……

○**김현 위원** 그러니까……

○**증인 김영섭** 이사 추천도 하고 자기들 선임도 하고 합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와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바로잡을 생각이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제가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전혀 없고요.

○**김현 위원** 그러면 보세요. IT 전문가가 아닌 KT 대표가 해커에 의한 해킹이 됐는데 정보도 모르지요, IT 전문가도 아니지요, 그다음에 폐기된 것도 본인도 모르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증인 김영섭 총체적인 관리 책임은 당연히 CEO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럼 본인이잖아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증인 김영섭 그래서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우선할 일은 이 사태 종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내용을 모르고 보고받지도 않고 증거 인멸·은폐 그런 의혹이 있는데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IT 전문가가 아니라면서요. 빨리 그만두고 제대로 된 전문가가 들어와서 수습하는 게 이 사태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증인 김영섭 하여튼 사태 해결이 빨리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모르는 사람이 무슨 최선을 다합니까?

○증인 김영섭 전문가를 찾아보고 등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7분 주세요.

류제명 차관, 2024년 6월 7일 윤석열 정부가 2026년까지 10만 인재 양성을 하겠다, 사이버보안, 그런 발표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이게 2026년까지 신규 인력을 4만 명 더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면 올해 2025년이잖아요. 지금 몇 명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했는데 몰라요, 이 중요한 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 KT가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여야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요. 보셨지요?

류제명 차관, 저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은 열한 가지 거짓말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다 거짓말, 그 얘기 들으셨지요? 기억이 안 나세요?

KT가 이 사태에서 계속 보고도 거짓말하고 서버폐기 날짜까지 왔다 갔다 한 것 들었지요? 지금 못 들으셨어요?

○증인 김영섭 제가 말씀……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류제명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최민희 들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KT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많은 부분에 허술한 대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허술한 대응을 왜 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반적으로는 위기관리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쪼아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그런 거예요? 왜 역량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 통신사 중의 하나가 왜 이 지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평소 대응 훈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완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같은 말 반복하는데, 나라가 멸망할 때 위기 상황에 대응 못 하면 멸망하지요, 나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KT 그 상태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히셨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거기가 과기부 퇴직자 낙하산 장소냐 이런 지적도 하셨고 검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KT 사외이사 하면서 되지도 않는 경영자 뽑고 이래서 지금 망해 가는 게 아니냐.

지금 민영화됐다고는 하지만 과기부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과기부가 ‘나 아무 상관없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이상하지요, 이 구조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 부분도 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해킹 사태가 드러날 때 7월 18일 날 익명의 해커가—화이트해커지요—국정원과 KISA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상중 원장, 맞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것 언제 보고받았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저희들은……

○위원장 최민희 저희들이 아니고 원장이 언제 보고받았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단독방으로 바로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7월 18일에 보고받았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19일 날 과기정통부에 보고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7월 18일 날 익명의 화이트해커가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즉시 보고 안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18일 날 신고가 들어왔고 19일 날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신고가 아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보고를 하면서……

○위원장 최민희 화이트해커가 알려 줬다니깐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보고를 하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화이트해커가 KISA에, 왜 KISA에 보냈겠어요. 국정원 외에 KISA가 제일 대응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냈겠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화이트해커 2명이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그들에게 이런 통보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정통방법에 의해서 아까 인텔리전스 수집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스캐닝도 못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화이트해커가 그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즉시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그 해당 업체에 즉시 통보해 가지고 검토를 하게 한 후……

○위원장 최민희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전문가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을 해요?

화이트해커 2명이 하는 일을 왜 대한민국은 못 할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 하신다면서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부끄럽다. 화이트해커가 2명이 밝힌 일을 왜 대한민국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저희들은 정통방법에 의해서 스캐닝 자체도 못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이것 어느 단위에서 대응합니까, KISA는 이런 일이 들어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침해대응본부에서 합니다. 위협대응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디지털위협대응본부에서 하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중에 어디서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대응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협대응단에서 하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기 탐지대응팀이라고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 탐지라고 써 뒀네요. 탐지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탐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C-TAS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유되는 자료들 중에서 분석하거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쓸데없이 들고.

화면 띄우세요. 그림 3개 하나하나 띄우세요. 그림이 3개였나요, 2개?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 2개 아시지요?

○증인 김영섭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것 아시지요, 이 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서 어느 것 택하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2개 다 제가 지인한테 받은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다고 택하셨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이쪽에 있는 것은 제가 KISA 가기 전에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데 사진 찍은 것……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때 받은 거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 주저리주저리 말씀하지 말고요. 이 그림 2개 다 아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2개 다 제가……

○위원장 최민희 제가 끝까지 팔 테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 드려요.

또 띄우세요.

여기는 몇 번이나 가셨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몇 번 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 출장이 여의도나 이런 데 잡혔을 때 거기 이비스호텔에 숙소가 잡힐 때 거기 갑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 아시지요, 어쨌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몇 번 갔냐고요. 출장 갈 때 간다 이건 엉뚱한 답이잖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 외에는……

○위원장 최민희 제가 이걸 그냥 물어보겠어요? 제가 이 호텔 몰라서 물어보겠냐고요. 여기 몇 번 가셨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가긴 갔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 그러면 기억 못 한다는 건 여러 번 갔다는 뜻이에요? 한 번 갔으면 한 번은 기억 날 것 아닙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저기에 아까 그 사진을 준 지인이 거기에, 그 호텔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 두 번 지인 사무실에 방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말 책임지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이비스호텔에 출장 때 숙소는 거기서 했을 때가 몇 번 있고, 그 외에는 그 친구가, KISA 오고 나서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사무실에.

○위원장 최민희 이것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한번 봅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손 안 드시는 분은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일곱 분.

○최형두 위원 그런데 왜 민주당만 해요? 한 명 줄이면 내가 빨게.

○위원장 최민희 그런 것 없어요.

○최형두 위원 균형이 있어야지, 그래도.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해민 위원부터 시작할까요?

5분 드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슬라이드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5분이요.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차관님, 오늘 많이들 언급하셨듯이 얼마 전에 통신 3사 전수조사를 과기부가 했지요. 그때 뭐라고 발표를 하셨냐면 과기정통부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해킹 흔적 없어’ 그리고 특이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 보면서 면피용 발표라고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기정통부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T·LG유플러스도요 그때 이런 식으로 통친 것 후회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과기정통부가 그때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했다가 최근에 KT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SKT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발견 안 되었던 것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바보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KT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악성코드는 알려진 순간 아웃데이티드(outdated)예요, 옛날 버전이라고요. 그것만 검사하면 어떡합니까? 그것 이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걸 고쳤어야 되고요. 검사 자체가 모자람이 있었다면 조사 방법을 고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의 부실 조사가 지금 KT 사건을 대형 사고로 이끈 원인 중 하나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과기정통부에서도 시정조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감 때 다시 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KISA는요 오늘 제가 보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응당 가져야 하는 전문성을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방위 위원님들이 KISA 원장님께 지금 보면 깊은 전문적인 질문을 하지를 못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과기정통부가 유일하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안을 함께 담당해야 할 기관이 KISA잖아요. 전문성 언급한 제가 민망합니다, 전문성이 너무 없으셔서. 너무 모르셔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것을 원장님 답변만 조합하면, 축약하면 뭐였냐면 ‘몰랐다. 몰랐다. 파악 못 했다’, 원론적 발언 말고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차관님, 과기정통부는 지금 현 상황의 KISA 형태 그대로 두면 보안 관련해서는 KISA랑 함께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돌아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새로운 정부에서의 보안에 대한 의지는 완전히 새롭고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그걸 보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버넌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국감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것과 함께 계획 좀 정리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김영섭 대표님, 아까 분명히 과기부 전관들이 포함된 법무법인 세종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도움이 되는 법무법인이어서 선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영섭 예.

○황정아 위원 KT 해킹 사태 관련해서 과기부 전관들이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선임 기업으로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끝나기 전에 과기부 전관들이 법무법인 세종에서 KT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답변 주세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차관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종에 과기부 전관들이 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 안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취업 과정은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업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계 법령,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런 법령에 위반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왜 KT가 세종을 법률자문으로 했겠습니까? 전관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과기부가 KT에 왜 이렇게 박절하지 못한 겁니까? 허위신고를 해도 봐줬고 침해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걸려도 봐주고 ARS에 국한해서 하지 말고 진짜 전수조사 하라라는 지시조차 지금 안 하고 있고.

차관님, 이 전관들이 암약하고 있는지 진상조사라도 해야 할 판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정아 위원 다들 이런 정도면 과기부가 뭔가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소액결제 현황 전체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지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김영섭 대표님 들으셨지요?

○증인 김영섭 예.

○황정아 위원 KT가 가리면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서버를 폐기해서 사실을 숨기려다가 결국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KT의 지금 행태들이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프랙 보고서 해킹 사건 관련해서 KT가 처음 KISA로부터 통지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증인 김영섭 7월 16일 정도……

○황정아 위원 7월 19일입니다.

8월 12일 KT가 사안을 들어도 계속 묻개고 있으니까 KISA에서 명확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예.

○황정아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 KT는 ‘서버가 폐기되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영섭 예.

○황정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님, 프랙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가 KT 데이터인 게 맞다 확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증인 김영섭 7월 22일 신고 때에 그 전에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저희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보고에 따르면 8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버폐기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증인 김영섭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어쨌든 8월 13일 날 최종 폐기된 걸로 압니다.

○황정아 위원 8월 13일.

7월 19일부터 계속 묻개 것도 모자라서 자기네 데이터인 걸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폐기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영섭 ……

○황정아 위원 데이터 인지 후에 폐기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증인 김영섭 데이터 인지라고 하시면 어떤……

○황정아 위원 프랙 보고서의 데이터가 KT의 데이터인 것 확인하셨지요?

○증인 김영섭 침해 데이터가 아니고 어쨌든 침해 정황, 침해 흔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황정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중순에 이미 용역업체가 침해 정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침해 정황이 있다고. 용역회사에서 보고받은 게 이미 7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서버를 폐기해요? 이것 완전범죄를 꿈꾼 것 아닙니까?

주요 고비 고비마다 서버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고의적인 축소·은폐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영업정지 수준입니다.

대표님, 용역업체가 서버 침해 의혹이 있다고 당시에 보고 직접 받으셨습니까?

○증인 김영섭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안 받았으면 이건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신고를 안 하고 계셨던 겁니까? 용역업체의 주장은 계속 묵살하고 서버는

폐기하고 신고는 회피하고, 이러니까 KT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8월 22일 날 프랙 보고서 관련해서 KISA에서 KT에 데이터 유출 내역을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고지한 사안입니다. ‘침해사고 정황이 있으니 침해사고 신고를 진행하라. 정황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강조까지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신고를 안 해요? 법이 이렇게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도 있는 뷔페입니까? ‘아니, 그래서 뭐 어찌라고’ 수준의 처참한 발상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왜 이러셨는지.

○**증인 김영섭** 제가 알기로는 침해가 확인되면 신고하는 거고 침해가 확인 안 되면 ‘침해 흔적이 없다’ 이렇게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허위 사실 신고한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 김영섭**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나중에 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아까 보안 책임자님 나와 주세요.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 확인하셨습니까? 침해사고 등급기준 2등급은 언제고 1등급은 언제부터 했지요?

○**증인 황태선** 그 등급 개정은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16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최수진 위원** 1등급은 언제 됐습니까?

○**증인 황태선**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자꾸 이런……

위원장님, 여기 지금 자료제출 한번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세우시고요. 자료제출……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부 매뉴얼에 의하면 침해사고 등급분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객정보 유출 소액결제 관련해서 그 등급이 현재는 1등급인데 2등급하고 1등급으로 올린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등급은 언제부터 언제였고 1등급은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그 기간에 대한 요청을 계속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안 책임자가 계속 모른다고 해서요, 그 기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들으셨지요?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일단 답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계속 모른다고 하셔 가지고……

○**증인 황태선** 등급제 개정에 대한 시기를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바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바로 주시고요. 오늘 중에 주시고요.

○**증인 황태선** 예.

○**최수진 위원** 그다음에 대표님이 이것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액결제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KT 자체조사를 통한 피해 구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KT가 최근 3개월, 6월 1일부터 9월 10일 간 제한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그전부터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전수조사 기간을 최소 1년은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섭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KT의 담당 조직에 제가 알아봤는데 아까 황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MS 문자하고 그다음에 PASS 인증 이런 것하고……

○최수진 위원 PASS 인증도 다 보셔야 됩니다.

○증인 김영섭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 중요한 순서대로, SMS 문자 인증 기반 이렇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간은 1년 정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증인 김영섭 기간도 급해서 그때 6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은 25년 1월 1일부터 전수조사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25년 1월?

○증인 김영섭 예.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1년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KT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감정보가 탈취된 흔적 또 데이터가 원래 서버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증인 김영섭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듣고 아는 것은 인증키 그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폰은 불가하다 이렇게……

○최수진 위원 그러면 인증키 유출에 의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 않다, 결국은 복제폰은 뭐가 됐든 상관없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영섭 인증키가 지금까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제폰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최수진 위원 책임지십시오.

그다음에 복제폰 생성 2차 피해 해서 지금 SMS 고지하고 유심 교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SK처럼 이 일을 먼저 마무리하시고 신규 가입 중단 등 대책 마련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증인 김영섭 지금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당장 여러 가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없는 전 고객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또 피해 내역이 발생하

면.....

○최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를 빨리 최소화하고 피해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장사를 하셔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고객에 대한 가입 여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재앙 수준의 해킹 피해에 대해서 KT는 누구보다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열한 번의 반복적인, 반복된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신뢰를 잃었고 총체적인 사고, 규모, 해법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T 신규 가입자도 과연 들어올까 그것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T의 이런 부실 대응에 대해서 정말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모든 직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타개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재산 보호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KT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과기부에 할 얘기 오늘 너무 많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정부와 같이 분명히 책임지고 이 일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하고 국감 때는 그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류제명 차관, 신규 인력 2026년까지 4만 명,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그 자료 확보했어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가 숫자를 지금 받았는데요, 위원장님.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숫자들이 좀 복잡해서요.

○위원장 최민희 예, 그러세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류제명 차관님, KT도 문제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과기정통부의 감독 부재 또 책임 방기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과기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대가 이번 KT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저는 보여져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1차 브리핑을 과기부가 9월 11일 날 했어요. 긴급 브리핑을 KT 사태와 관련해서 했는데 그때는 불법기지국 두 대라고 그러고 피해자 278명 그리고 7일 뒤에 9월 18일 날 2차 브리핑에서 불법기지국 두 대 추가 발견, 피해자 362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이에 9월 15일 날 이미 서버 침해사실을 인지했어요, KT는. 그런데 조사의 주체인 과기부는 18일 날 브리핑 때 이 서버 침해사실 인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기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리고 다음 PPT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면이 이날 과기부가 브리핑하는 날인데 이날 이 사진 보면 차관님 저 옆에 있고 이 앞에 있는 분이 KT 분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날 브리핑의 대부분을 KT가 주도를 했어요. 아니, 조사의 주체인 과기부가 조사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브리핑인데 KT가 와서 변명하듯이 브리핑의 주체처럼 대부분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그림이 과기부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조사를 해서 과기부가 발표를 해야지 왜 KT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사고를 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무슨 조사 결과를 발표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과기부의 한계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단계단계마다 복기해서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고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다음 PPT 볼게요.

KT에서 9월 8일 날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 개정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 모듈 미적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명시했어요.

그런데 변경 내용은 충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적, 정책적, 주관적인데 노력을 하면 배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9월 8일 날.

그런데 9월 5일 비정상 통신 패턴에 대해서 KT가 이걸 알고 법정 신고기한이 24시간이면 9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기고 9월 8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그 안에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을 변경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준칙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신고를 지연해서 시간을 끌고 배상과 관련해서 나중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의도적으로 모르게 준칙을 개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표, 얘기해 보세요.

○증인 김영섭 이 준칙을 변경 신고한 담당 상무가 지금 배석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듣고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변경한 내용도 배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준칙이지만 이용약관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기부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업무준칙 개정에 대해선?

○증인 김영섭 그때에 왜 그렇게……

○이훈기 위원 아니, 과기부차관님한테 물어봤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이용약관과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만 준칙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 이게 준칙이지만 이용약관에 준하고 이것에 따라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위원장 최민희 그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일단 들어보지요.

○위원장 최민희 아까 담당자 있다고 했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김영걸 발언대에서 —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이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KISA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거를 대행하는 업체 딜로이트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9.2조 1항과 9.9항에 있던 중복된 문구를 하나 없앤 겁니다. 원조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안전성의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KISA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예시 문구 2번입니다. 동일하고요.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다 동일하게 있는 문구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이훈기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정감사 관련 안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우선 이 안전부터 처리하고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8시10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일시, 대상, 방법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이고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86개 기관입니다. 또한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10월 20일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8시11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5년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중 기관증인은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경우 기관장·국장급·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여 국정감사 계획서의 기관별 일정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구

체적인 명단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각각의 출석일시 등은 역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국정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3.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8시12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업무현황 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어제 기준 총 7002건의 자료 요구가 집계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 부처에 발부할 예정이며 추후 접수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수진 위원님, 오셔야 돼요. 마지막 의결할 때 안 계셨어요. 다시 해야 돼요.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최수진 위원님 오시는 대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관련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피감기관의 명칭 변경과 기관증인의 추가 및 소속 변경, 부처 인사에 따른 기관증인 변경 등 경미한 수정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18시17분)

○위원장 최민희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우선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저희가 통신 3사에 대해서 3G 펌토셀 운영 현황, 보안 취약점 검토·보완 경과 및 계획을 요청했는데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KT에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도 했는데 서버폐기 진행·보관 관련한 결재 라인들 명단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사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양이 많기는 하나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5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아까 제가 상세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것처럼 서버폐기를 만약에 의도적으로 했거나 알면서도 과실 내지는 중과실로 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일 있었던 내용을 보면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발생했던 SK 사태 이후에도 KT가 전혀 경각심 없이 일반적인 업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확인이 된 것 같고요. KT는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인 조직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제명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2014년도 11월에 과기정통부에서 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도입하신 것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당시에 이런 워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소액결제 피해자가 통신사에게 민원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 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에게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 종결하고.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 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빨리 신속하게 구제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차관님, 이 서비스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 본 결과 당초 목표로 했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비단 KT뿐만 아니라 3사 다 공히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김영섭 대표님, 대표적인 통신사 KT에서 이 원스톱서비스 그동안 잘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시나요?

○**증인 김영섭** 그동안에 잘 운영되었다고는 제가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이번 사태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피해 그다음에 어쨌든 피해 본 즉시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상을 다 하고요.

○**이주희 위원** 그런데 사후적인 대책 말고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게요.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7일에 KT 고객센터에 소액결제 피해신고 접수되었지요? 모르십니까? 8월 27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KT는 9월 1일 또는 2일에 경찰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분석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에야 이 민원에서 비정상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 확인한 것 맞지요?

○**증인 김영섭** 그때 8월 말에 된 것은 아마 고객센터를 통해 가지고 스미싱 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추정하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PPT를 보면 8월 27일 최초 신고 이후에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아까도 지적이 나왔는데—무려 66%, 지금 현재 피해액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10년 전에 도입된 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최근까지 정말 잘 작동이 되었다면, 예를 들면 통신사도 마찬가지로 과기부도 마찬가지로 이 조치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이 사태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는 제도도 지금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 그래서 차관님, 통신사가 일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책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제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될 곳은 정부기관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 제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일단 내부에서 전수조사 꼭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발표만 하고 제도가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것 절대 지금 정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동의합니다.

○**이주희 위원** 그래서 민관합동조사 언제까지 되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간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맞습니다. 신속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주희 위원** 추가로, 시간이 없는데 우선 몇 가지……

김 대표님, KT의 이번 피해 ARS 인증 방법으로만 발생했다고 발표하셨지요?

○**증인 김영섭** 처음에는 그게 대부분이라서 그걸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SMS 그다음에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부 피해자들이 누군가 자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PASS 인증을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비정상 접근했다고 자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피해를 실제 느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도 그렇고 더 열어 두고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전부 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 더 안 됩니까?

.....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세요.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국민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잘 지켜질 것이라고 한때는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간통신회사 KT가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고 또 SKT나 LG유플러스도 지금의 상태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통신사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류제명 차관님,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잇따른 해킹사고로 인해서 통신사에 대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들을 근본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발표 전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대표님, 지금 KT의 이용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잠깐 큰비를 피하고 나면 나중에 SKT나 LG유플러스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다시 이용자들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설마?

○**증인 김영섭** 그런 기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휴대전화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국제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출 범위는 당초 발표하신 것보다 더 확대가 됐었고요. 혹시 복제폰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영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증키가 나가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복제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류제명 차관님,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일단 지난번 SK텔레콤 사태에서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복제에 필요한 유심과 단말 복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은 안 됐다고 보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
러 루트로 어떤 정보들이 나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 접속 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일체의 부정한 접속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KT는 해킹 사실을 일찌감치 파악을 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던 것이고요.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정부는 고의적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KT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라든지 법적 책
임을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제명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 조사단 결과 그러한 책임 소재가 있으면 분
명하게 엄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통신회사 오퍼스(Optus)의 해킹 사건입니다. 2022년에 약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호주 정부는 즉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신 규제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고
요. 피해자에게는 신분증 재발급 비용과 신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오퍼
스 CEO는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OPM의 해킹 사건입니다.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
방인사관리국에서 2200만 명의 미국 전현직 공무원의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미국 의
회와 감사원이 전면 조사에 나섰고 연방인사관리국장은 사임했습니다. 이후 보안 인프라
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와 제도 개편이 뒤따랐던 것이고요.

이처럼 해외에서는 해킹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신속하게 해킹 피해라든지 수사 상
황이라든지 내부 조사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사퇴합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
섭니다. 이후에 제도를 확실하게 개선합니다. 이런 네 가지 조치, 신속한 공개와 책임자
사퇴,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아무리 믿어 달라,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겠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후땀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한다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청문회가 열
리기 직전까지도 피해 범위는 불투명했고 피해자 보호대책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시작하기 전에 LTE 신호 전환 관련해서 아까 답하실 분 있다 그랬잖아
요? 그분 좀 나와 주시고. 그리고 업무준칙 변경과 관련해서 답하셨던 분 있지요? 같은
분이신가요?

○위원장 최민희 예, 같은 분이세요.

○노종면 위원 대기해 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5G는 신호가 약하면 자동으로 LTE로 전환된다, 그게 잡힌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맞아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네트워크기술본부장 구재형입니다.)

맞아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예, 맞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1일 자 보도된, 유출된 건 모두가 LTE다 그렇게 발표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재형 발언대에서 — 당시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기자분이 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보도가 저렇게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제가 확인을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저 보도를 확인을 못 했다고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예, 제가 저 보도는……)

저 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아시지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예, 지금 보고……)

또 하나, 해커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해 가지고 LTE 신호가 더 커지게 해서 피해자의 폰을 강제로 접속시키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구재형 발언대에서 — 기자 브리핑 때 그런 방식을 썼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말했어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예.)

그러면 다음 것 보세요.

발표를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5G도 간단하게 신호 전환돼 가지고 뚫릴 수 있는 거다, 실제로 뚫렸다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보도가 나오면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습니다.

다음 것 보세요.

그런데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해커가 고의로 5G 고객이 80%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영섭 대표님도 ‘쓰다 보면 신호가 약하면 5G가 자동으로 LTE로 전환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5G 고객을 노리고 해커들이 그 신호를 전환시켜서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은폐·축소하는 쪽으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5G 가입자가 80%인데 LTE 신호를 잡는 그 장비에 잡혔으면 대부분이 LTE이고 예외적으로 5G가 잡히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 95%가 5G면 5G가 더 강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커의 고의성이 더 강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실질적인 사후 대책이라도 찾아지는 거지요.

들어가십시오.

(○구재형 발언대에서 —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준칙 변경 관련해서 표준 규정을 따랐고 타사도 내용이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김영걸 발언대에서 —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것 보십시오, PPT.

이게 SKT 거예요. SKT 가장 최근에 변경할 때 면책의 범위를 줄였어요, SKT는. 원래 있던 면책 항목들을 확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KT랑 같아졌어요, 저 부분에서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LG텔레콤은 아예 면책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다음 것 보시지요.

KT, 어떻게 바꿨습니까? 9.9, 밑에 있는 것 저게 같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중복된 문장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맞더군요. 저걸 삭제한 것을 가지고 타사랑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사는 배상책임 항목을 줄였습니다, 삭제하거나.

그런데 KT 보십시오, 개정 전과 후. 앞선 위원님들이 이미 다 지적한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부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노력을 취하면,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이걸 주관적으로 평가할 대목이기 때문에 저걸 넣어서 KT에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배상책임을 면하려고 꼼수를 쓴 거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런 의도에 대해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처럼 거짓 해명을 하면 안 되지요. 타사랑 똑같다니요? 완전히 거꾸로 바꿨는데. 제 지적이 틀려요? 타사는 면책 범위 줄인 것 아닙니까?

(○김영걸 발언대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조 9항에 있던 내용은 9조 2항 1에……)

그 부분은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영걸 발언대에서 — 두 번째……)

그러니까 A를 물어보면 A와 연결된 A-1, A-2는 안 봅니까?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대답하자?

그리고 9.2.1 저것은 아침부터 질의가 나왔던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김영걸 발언대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서 KT의 책임을 슬그머니 줄여 뒀는데 그 부분 지적은 모른 척하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질문은 9.9니까 저것만 대답하자? 그게 책임져야 할 회사 고위 간부의 자세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왜 그랬는지……

○이훈기 위원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아, 추가질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공격이지요 사이버 공격은 국가 세력을 배후에 두거나 또 AI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아주 조직화되고 고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나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침투 흔적과 침투로 인한 노출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변질지,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우리의 칸막이 행정을 보면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주요국들 역시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기반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또 사이버 복원력, 회복탄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SKT, 이번엔 또 KT, 개별 기업이 타깃이 돼서 혼나고 있습니다. 혼나고 있는데, 이 사이버 위협이 지금 개별 기업 단위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위협으로 봐야 되고 또 개별 기업이 타깃이 된 경우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 위주로 혼내고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 ‘왜 내가 사장하는 기간 동안 이런 일이 터져 가지고……’ 이것을 좀 연장하거나 숨기려고 그러겠지요. 그런 제재 위주의 접근 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정보의 어떤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사태만 하더라도 KISA도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고 화이트해커들도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숨겨요, 신고도 하지 않고.

이게 대표적인 양상인데 이런 해킹 사실 자체를 은폐·축소하는 정보의 미공유, 이로 인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력은 더욱 약화되고 2차 피해가 증가하고 피해 복구와 보안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재원은 점점 소진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자면 오늘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노종면 위원도 그렇고 이정현 위원께서도 외국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는 해킹을 위한, 아까 DBIR(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같은 것,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지난번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걸 왜 하느냐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숨기는 데 익숙하니까.

이것은 한 회사, 한 경영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전략 차원의 문제, 이것이 SKT의 구멍이 아니라 KT가 구멍이 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댐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 부족 이런 시스템의 마비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한다면 빨리빨리 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뚫렸으면 나는 이렇게 뚫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조심하시라고 동종 업계에 공유하고 정부에 리포트하는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미국 버라이존에서 봤듯이 DBIR 같은 그런 걸로 적극적으로 매년 연례보고서로 나오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나는 걱정이 이렇게 해서 한번 혼나고 그러면 다음에 또 L 회사로 넘어

가 버리면 L 회사가 혼나고 그러면 이동통신이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 축나는 것은 국가안보, 위태로워지는 것은 국가안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통신망을 통해서 금융거래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매번 이야기하는데 백악관이…… 미국에도 작년에 9개 통신사가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용산처럼, 대통령실처럼 백악관이 모여서 비상팀을 가동하고, 그런데 문제는 칸막이 때문에 회색지대…… 뭐라 합니까? 텍틱스(Tactics)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애매한 지역이 있으면 과기부도 책임지기 애매하고 국정원도 적극 개입하기 힘들고 KISA가 뭐라 하기도 힘들고, 기업은 우리가 뭐 하려고 왜 스스로 이렇게 자진 신고해 가지고 혼납니까? 대충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원팀으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긴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누구도 믿지 마라.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자, 기기, 앱 전체에 대한 제로트러스트에 기반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사후 검증하고 신고하고 공유하고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 이제 거의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9월 10일 날 KT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김영섭 대표님?

○증인 김영섭 9월 10일 날 낸 성명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현 위원 못 보셨습니까?

○증인 김영섭 예.

○김현 위원 노조와는 단절되니까?

○증인 김영섭 아닙니다.

○김현 위원 이런 것 보고 안 합니까? 종사자들이, 회사가 지금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고객들의 피해로 불안해하는 이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이 없습니까, KT는?

○증인 김영섭 지금 근자의 사태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첫 번째는 보안망이 타 통신사에 비해 취약하다.

두 번째는 KT 경영진은 누장 대응과 은폐로 일관했다. 확실한 이상 정황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그래서 KT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 소액결제 역시 보안인증 수준을 낮게 유지한 것이 결제를 쉽게 하기 위해 한 거고 통신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넷째, 문제 발생 시 축소·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KT의 관행이다. 아현 화재, 부산발 인터넷 대란 당시에 KT는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경영진들 책임 회피하고 국민과 현장 노동자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떠넘겼다. 그래서 김영섭 사장은 사퇴해야 된다가 9월 10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9월 24일이에요. 김영섭 대표는 피땀 어린 노동자들의 애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KT의 윤석열 정부 및 법조계 출신 인사 인물 도표를 보여 드린 바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데 김영섭 대표님은 아무 역할이 없나요? 책임 없나요?

○증인 김영섭 여기……

○김현 위원 검사 5명 그다음에 사외이사들은 이명박·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들이거나 정부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서 노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구명하는 차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KT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윤석열 부부가 감옥에 가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그 한복판에 KT가 또다시 해킹이 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KT 대표는 여전히 무능한 사람이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됐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KT의 장악 배후로 5인방을 지목했습니다.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고발당하고 사퇴 압박을 받아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윤경림이라는 사람도 갑자기 그만두게 됐고 들어온 사람이 김영섭 KT 대표이사예요.

그런데 김대기·이관섭 등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언론보도, 혹시 정정보도 요청했나요? 혹시 이 보도는 보셨습니까? 이것도 처음 보시나요?

○증인 김영섭 아니,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소문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소문으로 듣나요? KT는 대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연재가 되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고도 안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회사는? 시스템이 없나요? 검색만 하면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이렇게 한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못 본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겁니까?

○증인 김영섭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 것을……

○김현 위원 많이 없어요. KT 대표이사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집중해서 탐사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7월 달 8월 달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즈음해서. 그런데 내용을 몰랐습니까?

그러면 부인하면 바로잡아야지요, KT 대표이사가 김대기·이관섭한테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은 연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증인 김영섭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현 위원 예?

○증인 김영섭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구현모, 윤경림 잘리고 김영섭 대표이사가 와서 검사들을 쫓 세웠는데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최민희 이상중 원장님, 지금 KT가 이번에 문제가 된 웹토셀이 불법 개조된 웹토셀이라고 발표했어요. 들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원래 펌토셀이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의 음영지역에 신호를 보강해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 개조된 펌토셀이라는 말은 이 펌토셀이…… 불법 개조라고 했지요, 개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KT가 폐기해야 할 것을 폐기하지 않았거나 관리 부실의 산물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오늘 경찰 발표 보셨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경찰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발표했냐? 이게 국내 KT 장비는 아닌 것 같다.

이것 다 보셨지요? 류제명 차관 보고받았지요? 경찰이 발표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장 최민희 국내 KT 장비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국내 제작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추정한다,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하여 이걸 무슨 의미입니까? 경찰의 이 발표는 뭘 의미합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장비를 복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맞습니까, 김영섭 사장?

○증인 김영섭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처음에 KT의 펌토가 개작되거나 조작돼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장 최민희 불법 개조.

○증인 김영섭 불법 개조해서……

○위원장 최민희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증인 김영섭 지금 이게 KT의 펌토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해결해야 되는 범위, 문제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심각해졌지요? 그런데 무슨 전문가라고 하십니까, 이상중 원장?

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 발표로, 차라리 KT 장비를 불법 개조했다면 경우의 수가 확 줄지요. 그렇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경우의 수가 확 넓어졌습니다.

저 세 그림 중에 어느 것 택하셨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저 사진 3개 중에 어느 것 택했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저렇게 보고는 모릅니다. 아마 1번인지, 1번인 거……

○위원장 최민희 1번 본인이 택했어요, 상대방이 택해서 갖다 줬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기억이 안 난다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사실 그냥……

○위원장 최민희 기억이 안 난다.

1번 택했어요, 2번 택했어요, 3번 택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저기……

○위원장 최민희 그냥 그 말만 하세요. 안 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우리 복도에 걸려 있던 사진이 1번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1번 택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번 택하셨어요? 이제 기억나셨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제가 택했는지 그거는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요.

○위원장 최민희 안 택했는데 누가 1번 갖다 줬어요, 그러면?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그 전에 또 하나를, 밖에 있을 때 하나를……

○위원장 최민희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 전에 또 하나 준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민희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치사하게 뒤통수 안 쳐요. 자료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번 택하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장 최민희 기억이 안 나는데 1번 그림이 걸려 있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 시간 끝 거 없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얘기는 이런 겁니다. KT 아이디 4개를 가지고 범인들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맞지요? KT 아이디 4개입니다.

○증인 김영섭 지금은 불법 아이디 4개를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아까 황 위원님이나 등등 해서……

○위원장 최민희 더 나올 수 있다?

○증인 김영섭 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최민희 어쨌든 현재까지 4개의 불법 ID……

○증인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경찰 발표로 매우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 장비가 국내 제작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돼요. 물론 펌토셀이 많은 나라에서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외국산 펌토셀은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됐냐, 이 문제 더 복잡하고 무서워진 거 맞지요?

○증인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 아까 전문가가 계셨는데 구재형 네트워크기술본부장님, 이 경우면 경우의 수가 뭐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세요, 국민들께.

(○구재형 발언대에서 — 네트워크기술본부장 구재형입니다. 제가 1차·2차 기자 브

리핑 때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도 이렇게……)

아니, 그런데 불법 개조 펌토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KT 장비를 불법 개조한 게 아니라 경찰 발표는 KT 장비 아닌 것 같대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그때 제가 발표드린 이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기자 브리핑 때.)

그러니까 설명하시라고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그때 발표드린 게 KT의 초소형 기지국 불법 개조(출력 상향) 또는 KT 초소형 기지국 연동 정보를 고출력 불법 무선장치에 탑재,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 같다……)

그러면 후자일 경우에는 어떤 과정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설명하세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그게 말씀드린 저희 접속하기 위한 인증서 연동 정보가 있습니다. 개를 다르게 만든 장치에 타재를 하면……)

아니, 개를 어떻게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그 방법은 수사를 통해서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나오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냥 국민들 알기 쉽게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답답하게……

(○구재형 발언대에서 —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 경우의 수를 말씀해 보라고.

(○구재형 발언대에서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드에 그런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꺼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그걸 꺼냈다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해킹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구재형 발언대에서 — 제가 용어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답답하네요, 정말.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라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아까 답변한 분이 KT 누구예요, 저한테 답변한 분? 이름하고……

아니, 나오지 마요. 이름……

(○김영걸 방청석에서 —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아까 저분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KISA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다른 통신사 LG유플러스나 SKT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봐요.

KISA에서 그런 가이드라인 줬어요, 원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가이드라인은 분야별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훈기 위원 아니, 그렇게 줬냐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이 아니고 통신사 입장에서 배상책임을 없애는 가이드라인을 줬냐고요, KISA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거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

○이훈기 위원 없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위원도 여기 띄우고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LG유플러스는 오히려 면책사유를 다 없앴어요, 올해 1월 1일 날. 고객 입장으로 다 바뀌 셧어요. 그런데 아까 나와 가지고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저번에 9월 19일 날 갔을 때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거짓말시키고 국회를 우롱했어요. 저 본부장 오늘 와서 국회 청문회장에서 또 거짓말을 시키고 또 국회를 우롱했어요.

대표님,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 김영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훈기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확인이 됐잖아요. 두 개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기서 가이드라인 준 적 없다 그러고, KISA에서. 타사는 그런 면책사유 다 빼 버렸어요, 오히려 거꾸로.

○증인 김영섭 확실히 제가 확인해 보고……

○이훈기 위원 여기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정말 형편없어요, KT!

여기 나와서 사과해요, 빨리. 얘기하지 말고 사과해요, 빨리.

(○김영걸 발언대에서 —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지요? 왜 거짓말했어요? 얘기해 봐요.

(○김영걸 발언대에서 — 위원님, KISA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김영걸 발언대에서 — KISA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됐어요. 들어가. 들어가요, 더 듣기 싫으니까.

여기 저분도 증인인가요, 위원장님? 증인 선서한 분인가요?

○위원장 최민희 저분은 배석자입니다, 단순 배석.

○이훈기 위원 배석자입니까?

아니, 와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어요, 말장난하면서.

차관님, 제가 보니까 타사는 이런 조항이 소비자 입장에서 안 좋은 조항이니까 다 바꾼 것 같아요, 올 초에.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오히려 이 조항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여기 청문회장에 와서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과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

○이훈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지금 이 조항, 전자서명인증 업무준칙 소비자에 반하게,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고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그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바로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김영섭 대표님, KT는 임원들이 저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날 9월 19일 날에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 또 거짓말합니까?

○증인 김영섭 제가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이훈기 위원 확인이 아니고 확인이 됐잖아요.

녹취록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KISA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고 타사도 그렇게 바뀌어서 자기네 지금 KT도 바꾸는 거라고. 거기다 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증인 김영섭 아니, 지금도 KISA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단……

○이훈기 위원 잠깐만요.

KISA 원장님 말고 직원 누구 와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지금 저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당장 철회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KISA에서 고객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요? 말이 돼요, 그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KISA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원장님, 그렇게 가이드라인 줬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니, 그거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그런데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가이드라인을 줄 리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게 맞아요, KISA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이훈기 위원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저 본부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 본부장은 정체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위원장 최민희 이주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차관님, KT가 ARS 인증 외 SMS 또는 PASS 인증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암호화돼서 송신되었는지 그것 꼭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RS 인증이 음성 통신방식인 RTP 표준, 이거 적용되는 거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국제표준도 있고 표준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RTP 표준 암호화가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SRTP로 보안을 강화하면 암호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보보안 뚫리는 순간 정말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도 가능한 RTP 표준 형태보다는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도 지금 3G 운영하고 있고 3G 펌토셀—아까도 언급이 좀 되었던 것 같은데—보안이 더 취약한 거 맞지요?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취약한지 검증 좀 해 보셨을까요?

○증인 김영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3G 펌토셀은 전부 다 지금 망 연동에서 완전히 제외한 걸로……

○이주희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차관님께서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일단 실태조사부터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 제거하거나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리고 최근 총리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 오늘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상황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 강화하는 것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제 이런 사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태들을 계기로 해서 국가 전반 정보보호체계 반드시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혹시 슬래머 웜(Slammer Worm), 2003년도에 발생한 사태 알고 계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때도 정말 단 10분 만에 전 세계가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IT 강국이라고 했던 우리나라도 정말 국가기간망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손해 입으면서 그 명성에 타격을 입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위기대응체계 중요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긴밀한 공조체계 나름 만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드러났듯이 그게 지금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거든요. 고도로 발달하는 해킹 기술에 맞서서 우리의 방어막·방패막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지 정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민관합동조사가 끝나시는 대로 또는 동시에 바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킹사고 예방 핵심, 결국 당연히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단기간에 그것을 탐지해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 조치를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요.

이상중 원장님, KISA에서 2014년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되고 있으니까 민간

기업과 함께 아까 나왔던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C-TAS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는 C-TAS 개방형으로 전환해서 기업도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맞습니다.

○**이주희 위원** 그런데 미국 보안매체 프락에 공개되기 전에 이 보고서 내용을 국내 해커가 먼저 입수해서 우리 정보 당국에 알려줬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맞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예, 그렇습니다.

○**이주희 위원** 지금 국내의 민간 해커도 먼저 입수한 정보를 정부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 C-TAS를 통해서도 입수를 못 했다는 것, 사고 신고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C-TAS와 정보보호 협력채널 전혀 역할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전혀 밝혀지지 않은 거는 C-TAS에 바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위협적으로 들어온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한테 공유하고 또 그걸 저희들도 분석한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노출되지 않은 거를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희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변경된 체제가 있지만 좀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 안 그래도 지금은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위원** 과기부에서도 꼭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알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 위원, 황정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KT의 해킹 및 소액결제 피해 대처, 과기부·KISA의 대응으로 의혹과 문제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롯데카드의 경우도 오랜 기간 보안 취약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해킹 대응 보안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특히 KT의 경우는 펌토셀과 관련한 보안조치를 사실상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해킹과 관련한 여러 번의 말 바꾸기로 해킹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

다는 의혹이 매우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보통신 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KT가 가장 앞장서 정보통신 보안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와 축소 시도로 일관한 배경에는 KT의 지배구조가 있다는 점이 다시금 상기되었습니다. 과기부 또한 과기부 출신들이 KT를 낙하산 집합소처럼 활용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기업의 사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될 공적 자산입니다.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신 김승주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해킹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모든 나라가 해킹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전수조사임을 인지하고 지금 당장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사안들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물러나야 될 사람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지금 KISA에 앉아 있을 상황도 아니며 KT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낙하산인사가 자리를 지킬 일도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결단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단순히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관련 TF를 구성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진행되는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불법 펌토셀 점검에 이 TF가 같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도개선과 후속 입법, 그리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터진 이 사태가 AI 3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한민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AI 3강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 TF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난번에 하라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최민희** 예?

○**김현 위원** 지난번에 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F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할 위원님들은 위원장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신 증인과 참고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사, 경위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

증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2025. 9. 24.(수)	금융사 해킹사태 관련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92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부사장)	2025. 10. 1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활용 관련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		서울AI재단과 AI에이전트 사업 관련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중소기업 상품 선정에 형평성과 합리성 및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질의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강홍식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포항가속기연구소 사유화와 2024년도 국감 증인 위증에 대한 국회 차원 검증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 위반·성과 왜곡 의혹
주성원	쿠팡 커머스전략총괄	2025. 10. 14.(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 및 타겟광고 선정성 문제
Zhang Rui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 및 타겟광고 선정성 문제
김종민	변호사		검찰제도 개편 비판 의견에 대한 페이스북 계정 차단 관련 메타(페이스북) 검열 문제
최성준	네이버 변호사		뉴스제휴심사 및 제휴 이후 운영에 대한 방침 등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수행하려는 네이버 관련 질의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		팩트체크넷 표적감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납치광고 관련
신한률	팝콘티브이(더이앤엠) 대표이사		인터넷 음란방송 문제(계속되는 이용정지에도 시정조치 없음)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불법 광고
이상록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		홈쇼핑협회 문제 관련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이사		제타AI가 미성년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정재훈	바이트댄스 대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산업 및 이용자 영향 관련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VP)		OTT 콘텐츠 독점 및 국내 사업자 불공정거래 확인
우오현	SM그룹 회장		지역 민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및 SM그룹의 UBC 우란방송 소유제한 위반 관련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		지역 민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및 SM그룹의 UBC 우란방송 소유제한 위반 관련
정진홍	제주방송 대표이사		임단협 교섭 결렬 관련
유석균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담당관		팩트체크넷 표적감사 지적 관련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		메타플랫폼 계정정지 사태 및 유해게시물 등 관련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산업 및 이용자 영향 관련
허 욱	페이스북코리아 부대표		검찰제도 개편 비판 의견에 대한 페이스북 계정 차단 관련 메타(페이스북) 검열 문제
레지널드 손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넷플릭스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관련
월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유튜브 내 유해광고 관련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부문 글로벌 디렉터		유튜브 내 유해광고 관련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넷플릭스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관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국회 차원 위증 검증
김영섭	KT 대표이사		KT 과장광고 관련, 해킹 관련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YTN
정원호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장	2025. 10. 16.(목)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월성원자력본부 시민 조롱 현수막 관련 질의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김기석	우주항공청 과장		우주항공청 비위 관련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웨스팅하우스 협약 당시 책임자 및 사장에 대한 절차와 내역 검증
박상형	한전KDN 사장	2025. 10. 20.(월)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YTN·TBS·연합뉴스TV)	YTN 지분 매각과정에서 불법 의혹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YTN 지분 매각과정에서 불법 의혹
배석규	유진이엔티 사외이사		YTN 민영화 불법심사 의혹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YTN 민영화 불법심사 의혹
김진구	전 유진이엔티 대표		YTN 민영화 불법심사 의혹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YTN 민영화 불법심사 의혹
김 백	전 YTN 사장		YTN 민영화 불법심사 의혹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TBS 조례근거 폐지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이사		YTN
김웅건	전 YTN 보도국장		YTN
김진용	YTN 사외이사 삼성출판사 사장		YTN
김현우	YTN 정책실장		YTN
마동훈	YTN 사외이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YTN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YTN
이연주	YTN 사외이사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		YTN
정재훈	YTN 사업본부장		YTN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		YTN
조성욱	YTN 사외이사 화우 대표변호사		YTN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YTN
조성인	YTN 사외이사 전 KT&G 홍보실장		YTN
조세현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		YTN
최유석	전 YTN 경영지원실장		YTN
이용복	KT 부문상무	2025. 10. 21.(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태 문제 관련
추의정	KT 사내상무 KT 감사실장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태 문제 관련, KT 사장 교체 관련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허태원	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태 문제 관련, KT 사장 교체 관련
황태선	KT CISO/CPO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태 문제 관련
김광일	MBK 대표이사		롯데카드 해킹 및 홈플러스 지점 매각 건 및 딜라이브 부실 채허가
김병주	MBK 회장		롯데카드 해킹 및 홈플러스 지점 매각 건 및 딜라이브 부실 채허가
유영상	SKT 대표		대규모 해킹사태 관련, 본인인증서비스(PASS) 포함 사이버보안 관련
홍범식	LGU+ 대표		대규모 해킹사태 관련, 본인인증서비스(PASS) 포함 사이버보안 관련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프랙에 공개된 해킹 관련 정부 차원 대응 질의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대규모 해킹사태 관련
구현모	전 KT 대표		KT 사장 교체 관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KT 사장 교체 관련
박세준	주식회사티오리한국 대표		KT 제3자 보안용역 의뢰 관련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KT 사장 교체 관련
윤경림	KT 최종 사장후보		KT 사장 교체 관련
윤정식	KT텔레캅 사외이사		KT 사장 교체 관련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 관련
김영섭	KT 대표이사		KT 과장광고 관련, 해킹 관련
000	MBC 기상캐스터	2025. 10. 23.(수) 한국방송공사 등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 택갈이식 기상캐스터 폐지대책
000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 택갈이식 기상캐스터 폐지대책
000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 택갈이식 기상캐스터 폐지대책
000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 택갈이식 기상캐스터 폐지대책
000	MBC 기상팀장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 택갈이식 기상캐스터 폐지대책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박 민	전 KBS 사장		취임 후 대국민 사과 관련, 비상계엄 당일 행적, 박장범 사장 선임과정의 부정 의혹
장한식	전 KBS 보도본부장, KBS비즈니스 사장		대국민 사과 관련, 비상계엄 당일 행적, 박장범 사장 선임과정의 부정 의혹
최재현	전 KBS 보도국장 KBS미디어 감사		비상계엄 당일 행적
김정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속실장		방심위 불법 민원사주 관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심위 불법 민원사주 관련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유튜브 내 유해광고 관련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유튜브 내 유해광고 관련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YTN
고광희	전 광주과학기술원 언어교육원장	2025. 10. 24.(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GIST 총장 비위행위 및 감사 관련
오승희	전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부장		GIST 총장 비위행위 및 감사 관련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GIST 총장 비위행위 및 감사 관련
최종삼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부장		GIST 총장 비위행위 및 감사 관련
김수삼	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회장		소장 임명과정 및 자문비 관련 문제
오형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부소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방만경영
이태식	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회장 재임 당시 비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5. 10. 30.(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종합감사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국회 차원 위증 검증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YTN

참고인(42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김유원	삼성SDS 사장	2025. 10. 1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관련
오대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정감사 관련
김성한	포항공대 노동조합지부장 (포항가속기연구소 선임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사유화와 2024년도 국감 증인 위증에 대한 국회 차원 검증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활동 관련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24년도 R&D 예산 삭감 관련
권오현	빠띠 대표	2025. 10. 14.(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팩트체크넷 부당 제재금 환수 피해자
김영곤	전국언론노조 ubc울산방송지부		국정감사 관련
김형선	원음방송PD(팀장)		국정감사 관련
박종훈	전 원음방송 직원(PD)		국정감사 관련
부현일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지부장)		국정감사 관련
최호준	2023년 원음방송 개선TF팀 위원장		국정감사 관련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		국정감사 관련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관련
이승훈	변호사, 변리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관련
정재훈	(주)더솔트 대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관련
박상원	한국연기자협회장		넷플릭스 출연진 캐스팅 및 제작비 전반 영향력 행사 문제
정천수	열린공감TV PD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 2, AI 조작 녹취 관련
박정원 (쓰양)	유튜버		사이버 레커 피해자에게 듣는 유튜브 폐해
김태연	변호사		쓰양 변호사
안분도	SKF코리아 대표이사	2025. 10. 16.(목)	원전 베어링 관련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4.5.27. 삼성 기흥사업장 피폭사고,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고용노동부 수사 진행 및 향후 처리계획 관련
이종호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국정감사 관련
김준희	YTN 노조지부장		YTN 민영화 불법심사 의혹
고한석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부장		국정감사 관련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부장	2024. 10. 20.(월)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YTN·TBS·연합뉴스TV)	국정감사 관련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		국정감사 관련
김경록	YTN 사외이사 전 미래에셋자산운용고문		국정감사 관련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2025. 10. 21.(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 관련
이종현	SKT CISO		대규모 해킹사태 관련
강윤기	KBS PD협회장		단협 결렬 등 KBS 현안, 편성위원회 및 제작자율성 관련
김승준	KBS 기술인협회장		단협 결렬 등 KBS 현안, 편성위원회 및 제작자율성 관련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단협 결렬 등 KBS 현안, 편성위원회 및 제작자율성 관련
이승철	KBS 기자협회장		단협 결렬 등 KBS 현안, 편성위원회 및 제작자율성 관련
송명희	KBS 기자		박장범 사장의 대국민 사과 열거 보도 사태 중 당사자
장연미		2025. 10. 23.(목) 한국방송공사 등	괴롭힘 있었다는데 은폐한 MBC와 MBC 감싼 방문진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괴롭힘 있었다는데 은폐한 MBC와 MBC 감싼 방문진
강명일	MBC 위원장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 택갈이식 기상캐스터 폐지 대책, 소수노조 탄압
유시춘	EBS 이사장		EBS 법인카드 사적사용 관련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방미통위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이영풍	전 KBS 기자		방미통위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박기완	KBS PD		방미통위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김 원	KBS PD		방미통위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출석 위원(19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주희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청가 위원(1인)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정책기획관 전영수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경영기획본부장 신대규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이동근

○출석 증인

김영섭(KT 대표이사)

서창석(KT 네트워크부문장)

황태선(KT 정보보안실장)

윤종하(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롯데카드 대표이사)

최용혁(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

○출석 참고인

홍관희(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이종현(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상원(금융보안원 원장)